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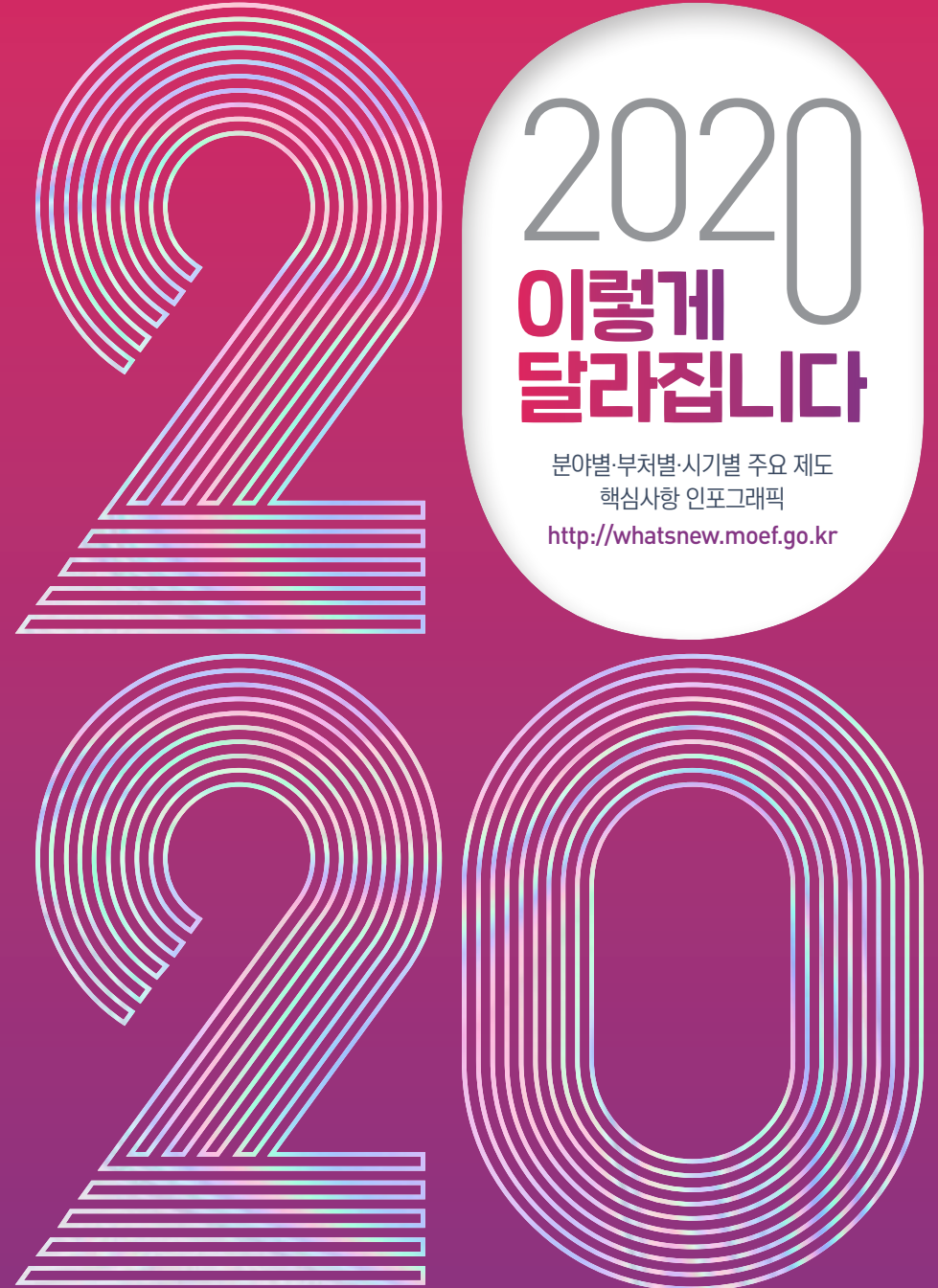


이 책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 
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행사를  
종합 정리한 것입니다.

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 
Tel. 044-215-2552, 2556



##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

#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

분야별·부처별·시기별 주요 제도  
핵심사항 인포그래픽  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



2020년부터  
**이렇게 달라집니다**



본 책의 내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 
국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 
있으니,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 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2020

## 이렇게 달라집니다

분야별·부처별·시기별 주요 제도  
핵심사항 인포그래픽  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## CONTENTS

##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(272)

## 01 금융·재정·조세 (64)

•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(기획재정부)	14
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(기획재정부)	15
•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(기획재정부)	16
•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(기획재정부)	17
•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(기획재정부)	18
•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(기획재정부)	19
•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(기획재정부)	20
•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(기획재정부)	21
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(기획재정부)	22
•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(기획재정부)	23
•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(기획재정부)	24
•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(기획재정부)	25
•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 (기획재정부)	26
•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27
•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(기획재정부)	28
• 주류 과세체계 개편 (기획재정부)	29
•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(기획재정부)	30
•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(기획재정부)	31
•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(기획재정부)	32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33
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(기획재정부)	34
•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(기획재정부)	35
•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(기획재정부)	36
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37
•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(기획재정부)	38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•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(기획재정부)	40
•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41
•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(기획재정부)	42
•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(기획재정부)	43
•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(기획재정부)	44
• 접대비 한도 상향 (기획재정부)	45
•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(기획재정부)	46
•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(기획재정부)	47
•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(기획재정부)	48
•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49
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50
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(기획재정부)	51
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52
•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(기획재정부)	53
•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(기획재정부)	54
•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(기획재정부)	55
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(기획재정부)	56
•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(기획재정부)	57
• 등유 등을 경우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(기획재정부)	58
•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(기획재정부)	59
•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(기획재정부)	60
•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(기획재정부)	61
•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(기획재정부)	62
•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(기획재정부)	63
• 통고처분 면제 가능 (기획재정부)	64
•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구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(기획재정부)	65
•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66
•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(기획재정부)	67
•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(기획재정부)	68
•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 (해양수산부)	69
•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(부부 중 연장자)으로 변경됩니다. (금융위원회)	70
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(금융위원회)	71
•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(등급제→점수제) (금융위원회)	72



•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(금융위원회)	73
•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(금융위원회)	74
•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(금융위원회)	75
•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(금융위원회)	76
•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(금융위원회)	77
•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(금융위원회)	78

## 02 교육·보육·가족 (19)

•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(교육부)	84
•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(교육부)	8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(교육부)	86
•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87
•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(보건복지부)	88
•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(보건복지부)	89
•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(보건복지부)	90
• 가족돌봄휴가 신설 (고용노동부)	91
•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(고용노동부)	92
•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(여성가족부)	93
•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(여성가족부)	94
•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 (여성가족부)	95
•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(여성가족부)	96
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(여성가족부)	97
•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(여성가족부)	98
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(여성가족부)	99
• 청소년의 정책·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(여성가족부)	100
• '배우자 출산'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(병무청)	101
•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(경찰청)	102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03 국방·병무 (14)

•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(잠정) (국방부)	106
•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(국방부)	107
•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 (국방부)	108
•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(국방부)	109
•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(국방부)	110
•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(국방부)	111
•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(국가보훈처)	112
•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(국가보훈처)	113
•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(병무청)	114
•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(병무청)	115
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(병무청)	116
• AI(챗봇) 기반, 언제·어디서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 (병무청)	117
•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(병무청)	118
•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(병무청)	119

## 04 행정·안전·질서 (42)

•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(기획재정부)	126
•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(농림축산식품부)	127
•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(농림축산식품부)	128
•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129
• 재사용 환한 표시제 도입 (농림축산식품부)	130
• "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(어린이 놀이기구)의 안전기준"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1
• "전동보드 안전기준" 신설 (산업통상자원부)	132
• "휴대용 사다리" 안전기준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3
• "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(건전지)의 안전기준"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4
• '키즈카페' 환경안전관리 강화 (환경부)	135
•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(고용노동부)	136
•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(여성가족부)	137
•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(여성가족부)	138

•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(여성가족부)	139
•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(여성가족부)	140
•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(해양수산부)	141
• 관광선,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2
•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(해양수산부)	143
•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(해양수산부)	144
•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(해양수산부)	145
•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(해양수산부)	146
•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(해양수산부)	147
•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8
•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9
•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 (식품의약품안전처)	150
•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(조달청)	151
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 (경찰청)	152
•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(경찰청)	153
•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(경찰청)	154
•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(경찰청)	155
• 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(소방청)	156
•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(소방청)	157
•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(소방청)	158
•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(소방청)	159
•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(소방청)	160
•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(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) (소방청)	161
• 응·복합 특허 '합의형 협의심사' 실시 (특허청)	162
•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(특허청)	163
• 특허·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(특허청)	164
•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(특허청)	165
•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(약칭 : 공공재정환수법) 2020. 1. 1. 시행 (국민권익위원회)	166
•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 (국민권익위원회)	167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05 문화·체육·관광 (12)

•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(문화체육관광부)	172
•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 (문화체육관광부)	173
•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(문화체육관광부)	174
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(문화체육관광부)	175
• 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 (환경부)	176
•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(해양수산부)	177
• 마리나대여업 선박·계류시설 사용(등록)기간 삭제 (해양수산부)	178
•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79
•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(문화재청)	180
•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(문화재청)	181
•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(문화재청)	182
•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(문화재청)	183

## 06 농림·수산·식품 (31)

•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(농림축산식품부)	192
•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(농림축산식품부)	193
•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(농림축산식품부)	194
•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(일부 제외)으로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5
• 축산물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6
•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(농림축산식품부)	197
•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(농림축산식품부)	198
•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9
• 농·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(농림축산식품부)	200
•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201
•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(농림축산식품부)	202
• 대체조식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(농림축산식품부)	203
•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 (농림축산식품부)	204
• 김치의 날(11월 22일) 제정(잠정) (농림축산식품부)	205
•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감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6
•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7
•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8

• 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9
•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(8.28.)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(농림축산식품부)	210
•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'친환경농업 기본교육' 이수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211
•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(해양수산부)	212
•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(해양수산부)	213
• 원유(原乳) 국가잔류물질검사(NRP) 제도 도입 (식품의약품안전처) (농림축산식품부)	214
• 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 (식품의약품안전처)	215
•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(식품의약품안전처)	216
•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(산림청)	217
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(산림청)	218
•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(산림청)	219
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(산림청)	220
•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(산림청)	221
•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(산림청)	222

## 07 환경·기상 (25)

• 종아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(환경부)	227
•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(환경부)	228
•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(환경부)	229
•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(환경부)	230
•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(환경부)	231
•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·시행 (환경부)	232
•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(환경부)	233
•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(환경부)	234
•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(환경부)	235
•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(환경부)	236
•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(환경부)	237
•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(환경부)	238
•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(환경부)	239
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(환경부)	240
•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(환경부)	241
•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(환경부)	242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08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(18)

•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256
• 보안관계 전문기업 양수도, 합병 근거 마련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257
•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58
•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&D 사업 실시 (산업통상자원부)	259
•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(산업통상자원부)	260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(산업통상자원부)	261
•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(산업통상자원부)	262
•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(조달청)	263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(방위사업청)	265
•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(방위사업청)	266
•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(방위사업청)	267
•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(방위사업청)	268
•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(방위사업청)	269
•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 (중소벤처기업부)	270
• 「벤처투자 촉진법」 제정 및 시행 (중소벤처기업부)	271
•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(중소벤처기업부)	272
•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 설치·운영(신규) (중소벤처기업부)	273
•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(공정거래위원회)	274

## 09 보건·복지·고용 (41)

• 임신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85
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(자궁, 난소)·흉부(유방)·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(보건복지부)	286
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(보건복지부)	287
•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(보건복지부)	288
•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(보건복지부)	289
•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(보건복지부)	290
•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(보건복지부)	291
•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(보건복지부)	292
•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(보건복지부)	293
•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(보건복지부)	294
•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(보건복지부)	295
• 청년저축계좌 신설 (보건복지부)	296
•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(보건복지부)	297
•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(보건복지부)	298
•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·개편 (보건복지부)	299
•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(보건복지부)	300
• 검역감염병 오염지역(오염인근지역) 지정 변경 (보건복지부)	301
•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(보건복지부)	302
•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(보건복지부)	303
•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(고용노동부)	304
•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 (고용노동부)	305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(고용노동부)	306
•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(고용노동부)	307
•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(고용노동부)	308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(고용노동부)	310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1
•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(고용노동부)	312
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(고용노동부)	313
•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4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 (고용노동부)	315
•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(고용노동부)	316
•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7
•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(고용노동부)	318
•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(고용노동부)	319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10 국토·교통 (6)

•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(국토교통부)	331
•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(국토교통부)	332
•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(국토교통부)	333
•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(국토교통부)	334
•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(국토교통부)	335
• 모바일 승선권 확대 (해양수산부)	336

##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(272)

### 기획재정부 (55)

•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	14
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	15
•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	16
•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	17
•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	18
•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	19
•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	20
• 지정지역(특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	21
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	22
•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	23
•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	24
•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	25
•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	26
•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	27
•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	28
• 주류 과세체계 개편	29
•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	30
•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	31
•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	32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	33
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	34
•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	35
•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	36
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37
•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	38
•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	40
•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	41
•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	42
•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	43

•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	44
• 접대비 한도 상향	45
•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	46
•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	47
•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	48
•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	49
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	50
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	51
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	52
•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	53
•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	54
•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	55
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	56
•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	57
•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	58
•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	59
•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	60
•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	61
•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	62
•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	63
• 통고처분 면제 가능	64
•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	65
•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	66
•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	67
•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	68
•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	126

### 교육부 (3)

•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	84
•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	8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	86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2)

•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	256
•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, 합병 근거 마련	257

## 국방부 (6)

•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(잠정)	106
•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	107
•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	108
•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	109
•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	110
•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	111

## 문화체육관광부 (4)

•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	172
•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	173
•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	174
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	175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농림축산식품부 (27)

•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	87
•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	127
•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	128
•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	129
•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	130
•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	192
•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	193
•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	194
•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(일부 제외)으로 확대	195
• 축산물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	196
•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	197
•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	198
•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	199
• 농·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	200
•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	201
•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	202
• 대체조식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	203
•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	204
• 김치의 날(11월 22일) 제정(잠정)	205
•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	206
•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	207
•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	208
• 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	209
• 친환경농업법 개정 시행(8.28.)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	210
•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'친환경농업 기본교육' 이수 의무화	211
•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	258
•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	285



## 산업통상자원부 (8)

• 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(어린이 놀이기구)의 안전기준” 개정	131
• “전동보드 안전기준” 신설	132
• “휴대용 사다리” 안전기준 개정	133
• “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(건전지)의 안전기준” 개정	134
•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&D 사업 실시	259
•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	260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	261
•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	262

## 보건복지부 (21)

•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(보건복지부)	88
•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	89
•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	90
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(자궁, 난소)·흉부(유방)·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	286
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	287
•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	288
•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	289
•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	290
•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	291
•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	292
•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	293
•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	294
•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	295
• 청년저축계좌 신설	296
•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	297
•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	298
•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·개편	299
•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	300
• 검역감염병 오염지역(오염인근지역) 지정 변경	301
•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	302
•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	303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환경부 (26)

• ‘키즈카페’ 환경안전관리 강화	135
• 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	176
• 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	227
• 대기관리구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	228
•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	229
•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	230
•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	231
•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·시행	232
•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	233
•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	234
•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	235
• 행정·공공기관 자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	236
•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	237
•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	238
•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	239
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	240
•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	241
•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	242
•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	243
•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	244
•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	245
• 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	246
•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	247
•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	248
•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	249
•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	250

## 고용노동부 (20)

• 가족돌봄휴가 신설	91
•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	92
•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상향	136
•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	304
•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	305
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	306
•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	307
•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	308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	310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	311
•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	312
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	313
•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	314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	315
•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	316
•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	317
•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	318
•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	319
•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	320
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	321

## 여성가족부 (14)

•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	93
•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	94
•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	95
•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	96
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	97
•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	98
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	99
• 청소년의 정책·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	100
•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	137
•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	138
•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	139
•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	140
•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	322
•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	323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국토교통부 (5)

•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	331
•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	332
•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	333
• 국립항공박물관 개관	334
•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	335

## 해양수산부 (17)

•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	69
•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	141
• 관공선,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	142
•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	143
•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	144
•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	145
•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	146
•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	147
•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	148
•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	149
•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	177
• 마리나대여업 선박·계류시설 사용(등록)기간 삭제	178
•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	179
•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	212
•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	213
•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	251
• 모바일 승선권 확대	336

## 중소벤처기업부 (4)

•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	270
• 「벤처투자 촉진법」 제정 및 시행	271
•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	272
•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 설치·운영(신규)	273



## 국가보훈처 (2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| 112 |
| •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           | 113 |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(7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         | 150 |
| • 원유(原乳) 국가잔류물질검사(NRP) 제도 도입 | 214 |
| • 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    | 215 |
| •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         | 216 |
| •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자원체계 구축  | 324 |
| • 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         | 326 |
| 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      | 327 |

## 조달청 (2)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| 151 |
| •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      | 263 |

## 병무청 (7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'배우자 출산'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        | 101 |
| •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    | 114 |
| •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          | 115 |
| 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    | 116 |
| • AI(챗봇) 기반, 언제·어디서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 | 117 |
| • 불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         | 118 |
| •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           | 119 |

## 방위사업청 (5)

- |  |     |
|--|-----|
| •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| 265 |
| •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6 |
| •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                    | 267 |
| •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8 |
| •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| 269 |

## 경찰청 (5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          | 102 |
| 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     | 152 |
| •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| 153 |
| •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   | 154 |
| •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          | 155 |

## 소방청 (6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• 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| 156 |
| •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             | 157 |
| •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      | 158 |
| •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          | 159 |
| •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     | 160 |
| •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(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) | 161 |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문화재청 (4)

•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	180
•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	181
•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	182
•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	183

## 산림청 (6)

•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	217
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	218
•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	219
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	220
•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	221
•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	222

## 특허청 (4)

• 융·복합 특허 '합의형 협의심사' 실시	162
•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	163
• 특허·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	164
•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	165

## 공정거래위원회 (1)

•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	274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## 금융위원회 (9)

•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(부부 중 연장자)으로 변경됩니다.	70
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	71
•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(등급제→점수제)	72
•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	73
•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	74
•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	75
•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	76
•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	77
•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	78

## 국민권익위원회 (2)

•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(약칭 : 공공재정환수법) 2020. 1. 1. 시행	166
•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	167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(272)

## 2020년 1월 (135)

•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(기획재정부)	14
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(기획재정부)	15
•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(기획재정부)	16
•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(기획재정부)	17
•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(기획재정부)	18
•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 (기획재정부)	19
•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(기획재정부)	20
• 지정지역(특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(기획재정부)	21
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(기획재정부)	22
•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(기획재정부)	23
• 최다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(기획재정부)	24
•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(기획재정부)	25
•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 (기획재정부)	26
•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27
•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(기획재정부)	28
• 주류 과세체계 개편 (기획재정부)	29
•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(기획재정부)	30
•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(기획재정부)	31
•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(기획재정부)	32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33
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(기획재정부)	34
•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(기획재정부)	36
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37
•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(기획재정부)	38
•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(기획재정부)	40
• 설비투자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41
•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(기획재정부)	42
•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(기획재정부)	43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•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(기획재정부)	44
• 접대비 한도 상향 (기획재정부)	45
•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(기획재정부)	46
•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(기획재정부)	47
•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(기획재정부)	48
•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49
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50
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(기획재정부)	52
•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(기획재정부)	53
•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(기획재정부)	54
•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(기획재정부)	55
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(기획재정부)	56
•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(기획재정부)	57
•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(기획재정부)	58
•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(기획재정부)	61
• 통고처분 면제 가능 (기획재정부)	64
•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 (기획재정부)	67
•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(기획재정부)	68
• 원도우7 기술지원 종료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256
•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(국방부)	107
•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 (국방부)	108
•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(국방부)	111
•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(문화체육관광부)	172
•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 (문화체육관광부)	173
•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87
•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(농림축산식품부)	194
• 축산물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6
•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9
•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6
•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7
•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8
• 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09
•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'친환경농업 기본교육' 이수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211
•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85
•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 (농림축산식품부)	258
•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&D 사업 실시 (산업통상자원부)	259

•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(보건복지부)	90
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(보건복지부)	287
•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(보건복지부)	290
•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(보건복지부)	291
•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(보건복지부)	293
•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(보건복지부)	294
•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(보건복지부)	297
•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(보건복지부)	298
•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·개편 (보건복지부)	299
• 검역감염병 오염지역(오염인근지역) 지정 변경 (보건복지부)	301
•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(보건복지부)	302
•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(환경부)	229
•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(환경부)	235
•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(환경부)	236
•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(환경부)	238
•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(환경부)	239
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(환경부)	240
•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(환경부)	242
• 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 (환경부)	246
•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(환경부)	247
•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 (환경부)	249
• 가족돌봄휴가 신설 (고용노동부)	91
•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(고용노동부)	92
•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 구매목표 비율 상향 (고용노동부)	136
•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(고용노동부)	304
•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 (고용노동부)	305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(고용노동부)	306
•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(고용노동부)	308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(고용노동부)	310
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1
•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(고용노동부)	312
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(고용노동부)	313
•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 (고용노동부)	315
•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(고용노동부)	316
•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7
•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(고용노동부)	318
•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(고용노동부)	319
•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(고용노동부)	320
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(고용노동부)	321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•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(여성가족부)	93
•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(여성가족부)	94
•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 (여성가족부)	95
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(여성가족부)	97
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(여성가족부)	99
• 청소년의 정책·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(여성가족부)	100
•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(여성가족부)	137
•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(여성가족부)	139
•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(여성가족부)	322
•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(국토교통부)	333
• 관공선,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2
•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(해양수산부)	144
•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(해양수산부)	145
•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9
•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(해양수산부)	177
• 마리나대여업 선박·계류시설 사용(등록)기간 삭제 (해양수산부)	178
•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 (중소벤처기업부)	270
•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(중소벤처기업부)	272
•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감시 안전관리 (식품의약품안전처)	216
•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(병무청)	114
•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(병무청)	115
•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(병무청)	116
•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(병무청)	118
•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(병무청)	119
•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 (방위사업청)	266
•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(방위사업청)	267
•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 (소방청)	159
•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(문화재청)	183
•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(산림청)	217
•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(금융위원회)	76
•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(금융위원회)	78
•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(약칭 : 공공재정환수법) 2020. 1. 1. 시행 (국민권익위원회)	166

## 2020년 2월 (11)

•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(농림축산식품부)	193
• “전동보드 안전기준” 신설 (산업통상자원부)	132
•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(환경부)	250
•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(국토교통부)	332
•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(해양수산부)	143
•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(해양수산부)	146
• 모바일 승선권 확대 (해양수산부)	336
•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 설치·운영(신규) (중소벤처기업부)	273
•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(국가보훈처)	113
• AI(챗봇) 기반,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 (병무청)	117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(방위사업청)	265

## 2020년 3월 (16)

•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(교육부)	8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(교육부)	86
•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(국방부)	109
•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(국방부)	110
•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129
•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(산업통상자원부)	260
•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(산업통상자원부)	262
•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 (환경부)	245
•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(고용노동부)	314
•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(여성가족부)	323
•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 (식품의약품안전처)	150
• ‘배우자 출산’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(병무청)	101
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 (경찰청)	152
•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(경찰청)	154
•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(경찰청)	155
•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(특허청)	163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# 2020년 4월 (10)

•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(기획재정부)	59
•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(기획재정부)	60
•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(기획재정부)	65
•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(기획재정부)	66
• 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(어린이 놀이기구)의 안전기준”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1
• 청년저축계좌 신설 (보건복지부)	296
•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(환경부)	228
•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(환경부)	237
•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(환경부)	248
•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(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) (소방청)	161

## 2020년 5월 (11)

•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(농림축산식품부)	192
•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(고용노동부)	307
•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(여성가족부)	140
•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(국토교통부)	331
•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(국토교통부)	334
•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(국토교통부)	335
•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(식품의약품안전처)	324
•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(문화재청)	181
•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(문화재청)	182
•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(공정거래위원회)	274
•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 (국민권익위원회)	167

## 2020년 6월 (6)

•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(농림축산식품부)	203
• “휴대용 사다리” 안전기준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3
•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 (환경부)	232
•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(해양수산부)	147
• 「벤처투자 촉진법」 제정 및 시행 (중소벤처기업부)	271
•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(산림청)	219

## 2020년 하반기 (27)

•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(기획재정부)	62
•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(기획재정부)	63
•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(기획재정부)	126
•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(농림축산식품부)	127
•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(농림축산식품부)	130
•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(농림축산식품부)	197
• 농어촌민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(농림축산식품부)	198
• 농·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(농림축산식품부)	200
•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(농림축산식품부)	201
•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(농림축산식품부)	202
• 김치의 날(11월 22일) 제정(잠정) (농림축산식품부)	205
•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(8.28.)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(농림축산식품부)	210
• 원유(原乳) 국가전류물질검사(NRP) 제도 도입 (농림축산식품부) (식품의약품안전처)	214
• “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(건전지)의 안전기준” 개정 (산업통상자원부)	134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(산업통상자원부)	261
•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(보건복지부)	295
•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(보건복지부)	303
•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(환경부)	234
•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(환경부)	244
•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(해양수산부)	141
•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79
•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(소방청)	157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•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(소방청)	158
•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(산림청)	218
•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(산림청)	220
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(금융위원회)	71
•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(등급제→점수제) (금융위원회)	72

## 기 타 (56) :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(날짜 미정)

•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(기획재정부)	35
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(기획재정부)	51
•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(교육부)	84
• 보안관계 전문기업 양수도, 합병 근거 마련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257
•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(잠정) (국방부)	106
•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(문화체육관광부)	174
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(문화체육관광부)	175
•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(농림축산식품부)	128
• 청년창업생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(일부 제외)으로 확대 (농림축산식품부)	195
•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 (농림축산식품부)	204
•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(보건복지부)	88
•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(보건복지부)	89
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(자궁, 난소)·흉부(유방)·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(보건복지부)	286
•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(보건복지부)	288
•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(보건복지부)	289
•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(보건복지부)	292
•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(보건복지부)	300
• '키즈카페' 환경안전관리 강화 (환경부)	135
• 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 (환경부)	176
• 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(환경부)	227
•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(환경부)	230
•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(환경부)	231
•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(환경부)	233
•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(환경부)	241



•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(환경부)	243
•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(여성가족부)	96
•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(여성가족부)	98
•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(여성가족부)	138
•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 (해양수산부)	69
•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(해양수산부)	148
•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(해양수산부)	212
•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 (해양수산부)	213
•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(해양수산부)	251
•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(국가보훈처)	112
• 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 (식품의약품안전처)	215
• 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(식품의약품안전처)	326
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(식품의약품안전처)	327
•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 (조달청)	151
•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(조달청)	263
•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 (방위사업청)	268
•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(방위사업청)	269
•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(경찰청)	102
•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(경찰청)	153
• 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 (소방청)	156
•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(소방청)	160
•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(문화재청)	180
•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(산림청)	221
•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(산림청)	222
• 융·복합 특허 '합의형 협의심사' 실시 (특허청)	162
• 특허·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(특허청)	164
•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(특허청)	165
•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(부부 중 연장자)으로 변경됩니다 (금융위원회)	70
•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(금융위원회)	73
•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(금융위원회)	74
•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(금융위원회)	75
•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(금융위원회)	77

<http://whatsnew.moef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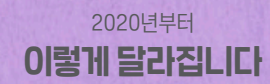
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

# 20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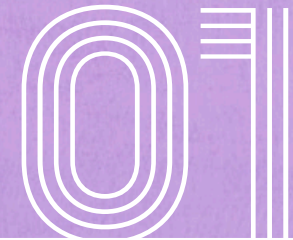
##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

- 01 금융·재정·조세
- 02 교육·보육·가족
- 03 국방·병무
- 04 행정·안전·질서
- 05 문화·체육·관광
- 06 농림·수산·식품
- 07 환경·기상
- 08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- 09 보건·복지·고용
- 10 국토·교통



2020년부터

## 이렇게 달라집니다



Education ·  
Childcare · Family

## 금융·재정·조세

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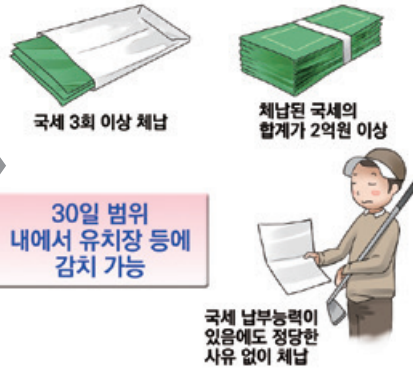
###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'20년부터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After



## 3 기획재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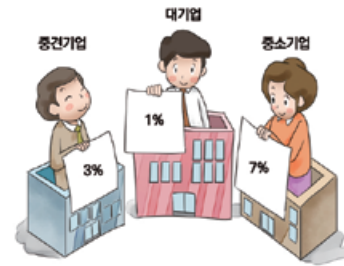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16

###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'19년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('19.12.31.) 및 공제율이 대·중견·중소 (1%/3%/7%)이었습니다.



After

'20년부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('21.12.31.) 연장 및 공제율을 대·중견·중소 (2%/5%/10%) 한시 상향합니다.



•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('20년 2%, '21년 1%)

## 2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15

###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꾸준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.



After

'20년부터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.



• 세액 감면 대상 배제 : 도소매업, 금융·보험업, 전문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부동산업, 임대업 등

## 4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17

###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.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가입대상 제한
  -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

After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5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18

###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'20년부터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.

After



## 6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0

###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지금까지 신축건물에 대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없이 신고 가능하였습니다.



After

'20년부터 신축·증축(증축의 경우 85㎡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건물에 대해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.



## 7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1

###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지금까지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사업용토지는 중과대상이었습니다.



After

'20년부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%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
## 8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2

###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.



제도	개정내용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	10년
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	소분류 내 변경 허용

After

'20년부터 가업상속기업이 탄력적인 경영여건 변화에 맞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.

제도	개정내용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	7년
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분류 내 변경 허용</li> <li>중분류 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 허용</li> </ul>
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처분비용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</li> <li>업종변경에 따라 기계설비 등 대체취득이 필요한 경우,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</li> </ul>
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견기업 의무 완화</li> <li>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</li> <li>고용유지의무 이행시 총급여액 기준 사용 가능</li> </ul>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9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3

###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.

-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입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·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
-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: 적용대상이 아님

#### After



## 11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5

###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%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%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.



## 10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4

###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.

현행		
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		
기업규모	일반 기업	중소 기업
최대주주 지분율		
50% 이하	20%	10%
50% 초과	30%	15%
중소기업은 '20년말까지 할증 배제(조특법)		



#### After

'20년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개정		
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		
구분	일반 기업	중소 기업
할증률	20%	0%
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(상증법에 반영)		



## 12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6

###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.



구분	현행
대상기업	•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억원 이하 중견기업
피상속인	•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(상장 30%, 비상장 50%) •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
상속인	•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기업 종사 •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, 2년 내 대표이사 취임

#### After

'20년부터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\*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구분	현행
대상기업	• 중소기업 • 전체 중견기업
피상속인	• 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(상장 30%, 비상장 50%) •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
상속인	• (사전 기업종사 요건 삭제) •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, 2년 내 대표이사 취임



\* (연부연납특례) 기업상속재산 비중 50% 미만: 10년 분납, 50% 이상 : 20년 분납(일반 연부연납)5년 분납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3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7

###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(31개)에 한정,  
1년 이내 창업+3년 이내 자금을 사용하여 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과당경쟁 우려 업종, 고소득·자산소득 업종,  
소비성·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,  
2년 이내 창업+4년 이내 자금사용 기한이 확대됩니다.



## 15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9

### 주류 과세체계 개편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전 주종에 대해 종가세 방식으로  
주세를 부과하였습니다.



• 종가세 :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

#### After

'20년부터 맥주·탁주 두 주종에 한해 종량세  
과세체제로 전환합니다.

•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% 경감  
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



• 종량세 :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

## 14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28

### 명의를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 
포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 
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 
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.



## 16 기획재정부

자세한 내용은 p.30

###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승용차(1,000cc 이하 경차 제외) 구매 시  
개별소비세(출고가의 5%),  
교육세(개별소비세액의 30%),  
부가가치세(최종소비자가의 10%) 부과

#### After

'20년부터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또는 수출 후  
신차(경유차 제외)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 
개별소비세의 70%가 감면(개세세 등 143만원 한도)됩니다.



• 지원대상: '09.12.31.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종  
'19.6.30.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

## 17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69

###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

시행일 : 2020년 상반기

#### Before

현재 어로·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교세됩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,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교세됩니다.



• (현행) 3천만원(어로·양식 합산) 비교세

• (개정) 최대 5천만원(어로) 3천만원(양식) 비교세

## 18 금융위원회

자세한 내용은 p.70

###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이상 (부부 중 연장자) 으로 변경됩니다

시행일 : 2020년 1분기 중

#### Before

'20년부터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'주택연금'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.

•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,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\*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After



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55세 이상 가입

주택연금



•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(이자 포함)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.

## 19 금융위원회

자세한 내용은 p.71

###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

시행일 : 2020년 8월 27일

#### After

- 2020년 8월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
-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.
-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


##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

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 (☎ 044-215-4153)

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
  -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

- 추진배경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악의적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
    - 국세 3회 이상 체납,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
    -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
    -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2)

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법인세/소득세)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.

-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.
- 다만,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\*, ②고소득·고자산 업종\*\*, ③소비성·사행성 업종\*\*\*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.
  - \* 도·소매업 등
  - \*\* 전문 서비스업(변호사·의사 등)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
  - \*\*\* 주점업, 오락장 운영업,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 등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·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서비스산업 혁신 전략('19.6월)  
·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('19.7월)

###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

- 추진배경 창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
  -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
    - 현행 : 148개 (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)
    - 개정 : 148개 + 97개(추가) = 245개 (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)
  - 다만, 도소매업, 금융·보험업, 전문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부동산업, 임대업 등은 지속 적용 배제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3)

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('19년→'21년) 연장하고,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.

■ 기존의 공제율(대·중견·중소, 1%/3%/7%)이 대기업('20년 2%, '21년 1%)과 중견·중소기업('20·'21년, 5%/10%)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3)

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.

■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·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.

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.

■ 또한,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('19.12월)

###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

- 추진배경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
- 주요내용
  -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
    - 현행 : ① 적용기한: '19.12.31
    - ② 공제율: 대·중견·중소(1%/3%/7%)
    - 개정 : ① 적용기한: '21.12.31
    - ② 공제율: 대·중견·중소(2%/5%/10%)
  - 다만,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('20년 2%, '21년 1%)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

- 추진배경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가입대상을 제한
- 주요내용
  - 적용기한 1년 연장
    - 현행 : 2019년 12월 31일까지
    - 개정 : 2020년 12월 31일까지
  - 가입대상 제한
    -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3)

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.

-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, 재간접 리츠·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
-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%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.
- 다만,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정하며, 10%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-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

- **추진배경**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
- **주요내용**
  - (적용대상) 공모 리츠·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·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
  - (과세특례)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% 분리과세
  - (사후관리)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정, 10% 가산세 부과
  - (적용기한) '21.12.31.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##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4)

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\*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.

\*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촉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

- 다만, 이촉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·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소득세 과세

- **추진배경**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촉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
- **주요내용**
  -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은 양도소득세 과세
  - 다만, 이촉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·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4)

신축·증축일(증축의 경우 85㎡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·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\*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,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\* 양도시 실질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·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현행	개정
<b>■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적용대상)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</li> <li>*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</li> <li>● (가산세율) 환산가액의 5%</li> </ul>	<b>■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적용대상) 신축·증축(85㎡ 초과 증축에 한함)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</li> <li>* 취득일·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</li> <li>● (가산세율)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의 5%</li> </ul>

##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4)

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%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현행	개정
<b>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지정지역 외) - 기본세율* + 10%p 중과</li> <li>● (지정지역 내) - 기본세율* + 20%p 중과</li> <li>* 기본세율: 6% ~ 42%</li> </ul> <p>〈단서 신설〉</p>	<b>■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분은 20% 중과대상 배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지정지역 외) - 기본세율* + 10%p 중과</li> <li>● (지정지역 내) - 기본세율* + 20%p 중과</li> <li>* 기본세율: 6% ~ 42%</li> </ul> <p>-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20%p 중과배제</p> <p>* 10%p 중과만 적용</p>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

신축·증축의 취득원가를  
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  
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

- **추진배경**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
- **주요내용** 신축·증축(85㎡초과 증축에 한함)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%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.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지정지역(투기지역)  
공고일 이전 토지  
매매계약이 체결되고  
계약금을 지급한  
경우 비사업용토지  
중과대상에서 제외

- **추진배경**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
- **주요내용**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% 중과 적용 배제(10% 중과만 적용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

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.

제 도	개 정 내 용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	● 현행 10년→ 7년으로 조정
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	●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 → 중분류 내 변경 허용 ● 중분류 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허용
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의무 완화	●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-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
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의무 완화	● 중견기업 의무 완화 -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기준인원의 120% → 100% ●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가능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다만, 업종·자산·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
##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

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.

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까지입니다.

탈세·회계부정행위 시기	형 확정 시기	효과
공제 전 행위	가업상속공제 전	공제 배제
	가업상속공제 후	추징
사후관리기간 중 행위	사후관리 기간 중	추징
	사후관리 기간 이후	추징

\* 사후관리기간 후 행위: 적용대상이 아님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·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
-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기준 완화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

- 추진배경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
- 주요내용 피상속인·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

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현 행			개 정		
●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			●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		
최대주주 지분율	일반기업	중소기업*	구 분	일반기업	중소기업*
50%이하	20%	10%	할증률	20%	0%
50%초과	30%	15%			
* 중소기업은 '20년말까지 할증 배제(조특법)			*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(상증법에 반영)		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

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\*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인상됩니다.

\* (제도개요)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

- (종전)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%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
- (개정)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%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

- 추진배경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
- 주요내용 할증률 하향조정,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,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###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

- 추진배경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1)

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\*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.

\* (연부연납특례) 가업상속재산 비중 50% 미만: 10년 분납, 50% 이상: 20년 분납(일반 연부연납: 5년 분납)

구분	현행	개정
대상기업	·중소기업 및 ·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	·중소기업 ·전체 중견기업
피상속인	·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(상장 30%, 비상장 50%) ·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	·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 (상장 30%, 비상장 50%) ·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
상속인	·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·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, 2년 내 대표이사 취임	·(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) ·(좌 동)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

- 추진배경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 및 요건 완화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\*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,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.

\* (제도개요) 30억원(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)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% 증여세율 적용

- (종전)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(31개)에 한정, 1년 이내 창업+3년 이내 자금사용
- (개정) 과당경쟁 우려 업종, 고소득·자산소득 업종, 소비성·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, 2년 이내 창업+4년 이내 자금사용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

- 추진배경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
- 주요내용
  -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 확대
  -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 확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

명의신탁 증여의제\*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.

\* (제도개요)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

- (종전)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
- (개정)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·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,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

- 추진배경 포착이 매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합리화
- 주요내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주류 과세체계 개편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1)

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,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.

-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맥주 : (기존) 출고가의 72% → (개정) ㄹ 당 830.3원
  - 탁주 : (기존) 출고가의 5% → (개정) ㄹ 당 41.7원
-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% 경감됩니다.
-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(증류주, 약주, 청주 등)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  - \* 다만, 맥주·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주류 과세체계 개편

- 추진배경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
  - 맥주·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
    - (주세율) 맥주 : 830.3원/ ㄹ 탁주 : 41.7원/ ㄹ
  -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20% 경감
  - 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율의 물가 연동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  - \* 다만, 맥주·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

##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4)

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(경유차 제외)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%가 감면(100만원 한도)됩니다.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(경유차 제외)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
##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

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(☎ 044-215-4151)

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.

-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 
-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.
-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

- 추진배경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
- 주요내용
  - 지원대상 : '09.12.31.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'19.6.30.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
  - 지원내용 : 신차(경유차 제외) 구입시 개별소비세 70% 감면(한도 100만원)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~2020년 6월 30일(6개월)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

-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
- 주요내용 기한 후 신고자에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

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☎ 044-215-4132)

R&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R&D 분야에서는 자체 R&D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탁·공동 R&D 비용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.

- 다만, 서비스 R&D는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, 통상적인 경영개선활동과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\*된 위탁·공동 R&D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.

\* (예시) 콘텐츠 창작, 건축공학·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R&D 비용부터 적용됩니다.

##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3)
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.

-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.

-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('19.7월)

### 외부위탁 R&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
- 주요내용 R&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 R&D 비용으로서 위탁·공동 R&D 비용을 추가 (다만,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&D에 한정)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

- 추진배경 서민 주택마련 지원
- 주요내용
  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  - 현행 : 2019년 12월 31일까지
  - 개정 : 2022년 12월 31일까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☎ 044-215-4231)

국내주식과 해외주식,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「소득세법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
-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,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.
  - 그 결과,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그러나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,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

- 추진배경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과 통산 허용
- 주요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던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2)

계산서 발급·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\* 부과대상을 확대합니다.

- \* (계산서 부실기재)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·허위기재: 공급가액 1%  
(합계표 미제출·부실제출) (세금)계산서합계표 미제출, 기재사항 미기재·허위기재: 공급가액 0.5%  
(거짓계산서)계산서 미발급,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·수취: 공급가액 2%  
(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)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: 공급가액 0.3%  
(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)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: 공급가액 0.5%
-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.
  - 다만, 신규사업자·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·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또한, 재화·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
-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거나 재화·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

###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
- 주요내용
  - 기존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
    - 현행 : 복식부기의무자
    - 개정 : 수입금액 4,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, 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·발급한 사업자(단, 신규사업자·보험모집인·방문판매원 등 제외)
-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



##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5)

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,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-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(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		공제율
	현 행	개 정		
		50세 미만	50세 이상	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)	400만원(700만원)	400만원(700만원)	600만원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)				
1억원 초과 (1.2억원)	300만원(700만원)	300만원(700만원)		12%

\* 총급여 1.2억원(종합소득금액 1억원)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

-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\*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\*\*하였습니다.

\*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: (현행) 연 1,800만원 이내 → (개정)연 1,800만원+ISA 만기시 계좌금액

\*\* 추가 납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에 대해 세액공제(추가납입 당해연도에만 적용)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**추진배경**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,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
- **주요내용**
  -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
  -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☎ 044-215-4211)

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,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.

-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됩니다.
-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.
- 2020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- **추진배경**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비과세 한도·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    - 현행 :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(연간 2천만원 한도)
    - 개정 :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(연간 3천만원 한도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☎ 044-215-4213

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,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.

- 점증구간\*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 
\* (단독) 총급여액 등 400만원 (홑벌이) 700만원 (맞벌이) 800만원 이하
- 직계존속\*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  
\*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,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
-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.
  - (상반기 근로장려금) 8.21 ~ 9.10 → 9.1 ~ 9.15
  - (하반기 근로장려금) 2.21 ~ 3.10 → 3.1 ~ 3.15
-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

-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및 제도 정비

- 주요내용 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

소득 구간	종전	개정
단독 가구 400만원 이하	3 만원	10 만원
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		
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하		

- ②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 인정

종전	개정
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* 부모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	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*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

- ③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

종전	개정
● (상반기 근로장려금) 8.21 ~ 9.10 ● (하반기 근로장려금) 2.21 ~ 3.10	● (상반기 근로장려금) 9.1 ~ 9.15 ● (하반기 근로장려금) 3.1 ~ 3.15

- ④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
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

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(☎ 044-215-4423)

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 됩니다.

- 기존의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%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개정내용은 이법 시행이후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
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\*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.

\* 기준내용연수의 50%(대기업)·75%(중견·중소기업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

### ■ 현행

- 대상자산 : 2018.7.1.~2019.12.31. 취득한 다음의 자산
  - 중소·중견기업 → 설비투자 자산\* 전체
    - \*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, 비품차량 및 운반구, 선박 및 항공기(운수업·임대업 등에 직접사 용되는 경우 한정)
  - 대기업 → 혁신성장 투자자산\*
    - \* R&D설비,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,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('19.7.3~'19.12.31 취득분)

### ■ 개정 : 적용기한 연장('19.12.31. → '20.6.30.)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

###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

- 추진배경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추가적인 혜택 부여
- 주요내용
  - (기존)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%의 소득세 감면
  - (개정)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 소득세 감면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
###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연장

- 추진배경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
- 주요내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'20.6.30.까지 연장

##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2)

공급-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·중견기업에 '22.12.31.까지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(취득가액 5%)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적용대상 :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에 공동출자
- 출자범위 :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
- 사후관리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정
  -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% 이상을 연구·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
  -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
  -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(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정)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

###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

- 추진배경 소재·부품·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
-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 시 지분취득가액의 5% 세액공제 신설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2)

소재·부품·장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'22.12.31.까지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M&A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적용대상 :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
- 인수방법 : 주식취득 및 자산·사업양수
- 공제율 : 5% (중견 7%, 중소 10%)
- 적용요건(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지분율 합산) :
  -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&A
  -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%(또는 30%+경영권) 이상
  -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
- 사후관리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정
  -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
  -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  -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(50% 이상 유지 시 줄어든 비율 상당액만 추정)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

###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

- 추진배경 소재·부품·장비 M&A를 통한 수급 원활화
-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

##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3)

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인상(2% → 5%) 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접대비 한도 상향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
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.

■ 기본한도 :

- 일반기업 : 1,200만원
- 중소기업 : 2,400만원 → 3,600만원

■ 수입금액별 한도 :

〈현 행〉		〈개 정〉	
수입금액	한 도	수입금액	한 도
100억원 이하	0.2퍼센트	100억원 이하	0.3퍼센트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2천만원+(100억 초과분의 0.1퍼센트)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3천만원+(100억 초과분의 0.2퍼센트)
500억원 초과	6천만원+(500억 초과분의 0.03퍼센트)	500억원 초과	1억1천만원+(500억 초과분 의 0.03퍼센트)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
기부금영수증  
발급불성실 가산세  
인상

-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
-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율 2%에서 5%로 인상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## 접대비 한도 상향

- 추진배경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
- 주요내용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2)

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(출연금의 10%)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'22.12.31.까지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.

### ■ 현행 적용대상 :

-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
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

### ■ 적용대상 확대 :

-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\*
- \*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

■ 적용기한 : '19.12.31. → '22.12.31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
###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
- 추진배경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
- 주요내용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추가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

##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☎ 044-215-4221)

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을 상향(1,000만원 → 1,500만원) 하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※ 2020년 1월 법인세법 시행령·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
###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

- 추진배경 조세제도 합리화
- 주요내용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(1,000만원→1,500만원)
- 시행일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##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

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됩니다.

■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.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박물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적용대상) 박물관, 도서관, 미술관, 과학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● (적용요건)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(중전 시설)를 양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중전시설 양도 또는 중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(신축하는 경우 3년)</li> </ul> </li> <li>● (양도세 특례)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</li> <li>● (적용기한) '19.12.31</li> </ul> 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특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좌 동)</li> <li>● (좌 동)</li> <li>● (양도세 특례)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</li> <li>● '22.12.31</li> </ul> </li></ul>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

##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

- 추진배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의 시설이전 지원
- 주요내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되고 동 규정이 2022.12.31.까지 연장 적용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

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적용 요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</li> </ul> </li> <li>-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● (특례 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거치, 2년 균등 익금 산입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li>●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 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</li> </ul> </li> <li>● (특례 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년 거치, 5년 균등 익금 산입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li>● (좌 동)</li> </ul> </li></ul>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

-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지원
-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완화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##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7)

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납특례 확대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적용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*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</li> <li>*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좌 동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특례 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년 거치, 3년 균등 익금 산입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특례 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년 거치, 5년 균등 익금 산입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좌 동)</li> </ul>

##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50~70%)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주택까지만 적용됩니다.

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.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용기한 신설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적용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</li> <li>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좌 동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과세특례)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년 이상 임대: 50%</li> <li>10년 이상 임대: 70%</li> </ul> </li> </u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신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적용기한) '22.12.31.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된 주택</li> </ul>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

-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이전 지원
- 주요내용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 확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

##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기한 신설

- 추진배경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
-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50~70%)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주택에 한하여 적용

##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3)

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,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합니다.

- (적용요건)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
- (과세특례)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
  - (종전) 양도소득세 15% 감면 또는 과세이연
  - (개정) 양도소득세 40% 감면 또는 과세이연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

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됩니다.

- (종전)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
- (추가)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

###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

-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,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
- 주요내용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,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을 15%에서 40%로 인상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
- 주요내용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으로 추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
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☎ 044-215-4312)

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\*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,
  - \* (현행) 신탁수익만 인출. 단,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
  -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·조부모 등으로 확대\*하였습니다.
  - \* (현행)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(자익신탁)만 허용
-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,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☎ 044-215-4326)
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및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됩니다.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

- 추진배경 장애인 지원
-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신탁원금 인출 허용 및 위탁자의 범위 확대
- 시행일 (원금인출) 2020년 상반기 적용 예정 (타익신탁)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

- 추진배경 납세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
-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(현행) 위탁자에서 (개정) 수탁자로 변경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☎ 044-215-4326)

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(공급가액 2억원 이하)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(8/108→9/109)이 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.

-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/104에서 2/102로 축소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.

##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
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☎ 044-215-4326)

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
-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\* 부과되는 가산세를 2%에서 1%로 축소하였습니다.
  - \*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
-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세가 2%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면세농산물 의제매입  
세액공제 특례 적용  
기한 연장 등

- 추진배경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
- 주요내용
  - 소규모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한 2019년말 → 2021년말
  - 과세유흥장소 경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/104 → 2/102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세금계산서  
가산세규정 정비

- 추진배경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및 권익보호
- 주요내용
  -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2% → 1%
  - 과다기재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복적용 배제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3)

등유, 부생연료유,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가 부과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등유, 부생연료유, 용제부터 적용됩니다.

##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☎ 044-215-4333)

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,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.

■ (현행)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.5% → (개정)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.2%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

- 추진배경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
- 주요내용 등유, 부생연료유, 용제를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판매분에 대해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부과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

- 추진배경 환경규제 강화,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'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
- 주요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.5%에서 0.2%로 축소
- 시행일 2020년 4월 1일



##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☎ 044-215-4416)

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(예: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)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.

-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- 현행 : 미납 관세를 구매자(관세법 상 납세의무자(화주))로부터 추징
  - 개정 :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
-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###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

- 추진배경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
- 주요내용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 등을 받은 후에 불법행위(예: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)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
- 시행일 2020년 4월 1일

##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☎ 044-215-4411)

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.

-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- 현행 : 납부불성실가산세@ [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× 1일 0.025%]와 가산금[(미납세액 × 3%)⑥+ 매 1개월마다 월 0.75%⑦] 별도 운영
  - 개정 :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[미납세액 × {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× 1일 0.025% (⑦+⑧) + 3% (⑥)}]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
- 추진배경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
- 주요내용
  -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
    - 현행 : 납부불성실가산세@ [미납세액 × (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) × 1일 0.025%]와 가산금[(미납세액 × 3%)⑥+ 매 1개월마다 월 0.75%⑦] 별도 운영
    - 개정 :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[미납세액 × {(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) × 1일 0.025% (⑦+⑧) + 3% (⑥)}]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1)

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.

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,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.

- 절차 :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(1차 세관, 2차 관세청) →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→ ③결과 통지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1)

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.

■ 다만, 수출입 관련 법령(관세법, 대외무역법, 상표법 등)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관세 납세자보호관  
및 납세자보호위원회  
신설

-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
- 주요내용
  -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
    - 납세자보호관 :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
    - 납세자보호위원회 :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(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) 심의
  -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컨테이너 화물  
검사비용 국가 부담

- 추진배경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·중견기업 지원
- 주요내용
  -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
    - 공익목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
    - 검사결과 수출입법령(관세법, 대외무역법, 상표법 등)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

## 통고처분 면제 가능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2)

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.

■ 다만,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(추징금·몰수품 가액 100만원)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,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☎ 044-215-4412)

“공직퇴임 관세사”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.

■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“공직퇴임 관세사 여부”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입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통고처분 면제 가능

- 추진배경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부담을 감면
- 주요내용
  -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
    - 신분, 전과, 법 위반 동기,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
    - 면제 기준 : 범칙금 30만원(추징금·몰수품 가액 100만원) 이하의 경우
    -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###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

- 추진배경 “공직퇴임 관세사”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
- 주요내용
  - 관세사의 의무 신설
    -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
    - 등록 및 징계 시 “공직퇴임 관세사 여부” 기록
    - 수입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
- 시행일 2020년 4월 1일

##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

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☎ 044-215-4472)

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,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.

- (변경전)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
- (변경후)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(잠정,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) 이내
  - ※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(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)
-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.

##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

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☎ 044-215-4472)

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「관세법」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,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

- 추진배경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,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
- 주요내용
  -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
    - 변경전 신청기한 :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
    - 변경후 신청기한 :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(잠정) 이내
- 시행일 2020년 4월 1일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 허용

- 추진배경 관세율이 동일한 경우, 적용 세율의 종류를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
- 주요내용
  -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 적용방법
    -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상이한 경우 : 낮은세율 적용
    - 양자가 동일한 경우 :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 가능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

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☎ 044-215-4472)

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,

■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\* 및 세액정정\*\*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.

\*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

\*\* 납부 전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

■ 또한,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가 폐지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### 세액 과다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

- 추진배경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,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, 법적 혼선을 줄이고 수입자 권리구제
- 주요내용
  -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인하여 수입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
    - (변경전)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,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
    - (변경후)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가능, 미이행시에도 과태료 없음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(소득 3천만원 비과세→최대 8천만원 비과세)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31)

현재 어로·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, 2020년 상반기(잠정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,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
■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,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\*까지 비과세됩니다.

\* (현행) 3천만원(어로·양식 합산) 비과세 → (개선) 최대 8천만원(어로 5천+양식 3천) 비과세

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(12.11)

### 어업인 소득세 개요

- 근거법 소득세법, 소득세법 시행령
- 시행일 2020년 상반기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)

##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(부부 중 연장자)으로 변경됩니다.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☎ 02-2100-2523)

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'주택연금'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.

-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,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\*하실 수 있습니다.
  - \*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(이자 포함)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'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' ('19.11.13일 배포)

###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인하

- 추진배경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 보장
- 주요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변경
- 시행일 2020년 1분기 중(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)

##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

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(☎ 02-2100-2536)

2020년 8월 27일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(P2P금융)에 대한 법적 근거인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됩니다.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.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.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,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·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.
-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·상환금 분리보관,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.

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,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
-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(80% 이하 시행령 규정)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.
-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보도자료

###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시행

- 추진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(P2P금융)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
-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·영업행위 규제,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
- 시행일 2020년 8월 27일



##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(등급제→점수제)

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(☎ 02-2100-2625)

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됩니다.

-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\*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\* 예)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(예: 7등급 상위)는 상위 등급(예: 6등급 하위)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

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(CB사)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들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.

-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,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.

개인신용평가 체계  
점수제 전환  
(등급제→점수제)

- 추진배경 신용등급제(1~10등급)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(1~1,000점) 활용 추진
-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(1~10등급)에서 점수제(1~1,000점)로 전환
- 시행일 2020년 하반기 중

##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

금융위원회 보험과 (☎ 02-2100-2945)

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'시각화된 약관 요약서'를 마련하고,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'약관 이용 가이드북\*'을 만들 예정입니다.

\* (예)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(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)  
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,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

-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겠습니다.

-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,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'맞춤형 약관'을 교부할 계획입니다

- 개선내용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약관 쉬워지고 착해집니다.

소비자가 이해하기  
쉽게 보험약관을 개선

- 추진배경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
- 주요내용
  - '시각화된 약관 요약서' 마련, '약관이용 가이드북' 신설
  - 소비자가 오인가능성이 높거나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상품명을 정비
  -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 제한, '맞춤형 약관' 교부
- 시행일 2020년 중

##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(☎ 02-2100-2991)

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.

- 2019년 12월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「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」가 제공\*되고 있습니다.

\* 페이인포 홈페이지(www.payinfo.or.kr)

※ '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'자동납부 이동서비스'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
##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
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☎ 02-2100-2513)

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(24%)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.

-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 분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.

- 또한,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·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.

동 지원 사업은 2020년 1/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감원(☎ 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지역별 개인회생·파산종합지원센터 및 지부, ☎ 132)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)보도자료('19.12.30. 보도예정)

카드 자동납부  
조회서비스 시행

- **추진배경**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없음
- **주요내용**
  -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('19.12.30~)
  - ※ 불필요해진 자동납부는 즉시 해지 및 타 카드로 자동납부 이동('20.12월~)
- **시행일** 2019년 12월 30일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)보도자료('20년 1/4분기 보도예정)

채무자대리인  
선임 지원 사업 개요

- **추진배경**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불법추심,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활성화
- **주요내용**
  - 미등록대부·고금리·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관련소송(반환청구 등) 대리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/4분기

##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

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☎ 02-2100-2662) /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(☎ 02-3145-5199)

퇴직연금(개인형 IRP)·개인연금(연금저축)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.

■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.

■ 동 서비스는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.

**참고** ·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 “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「인구정책 TF」논의 결과” 보도자료  
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>보도자료> “11.25.(월)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(이동)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.” 보도자료

###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

- **추진배경**
  - '19.11월 시행된 연금계좌 이동절차 간소화(기존 연금상품 취급 금융회사 및 신규상품 취급 금융회사 2회 방문 →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)의 후속과제로,
  - 가입자의 편의성·접근성 제고를 위해 PC·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, '통합연금포털'-금융회사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가입자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, 금융회사 홈페이지·앱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를 시행\*,
  - \* '통합연금포털'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으로, 온라인 계좌이체 채널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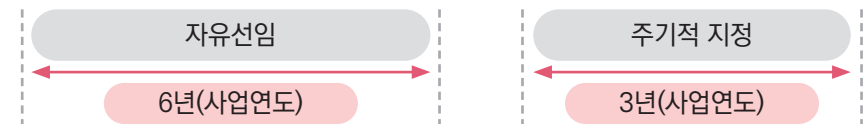
##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

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(☎ 02-2100-2693)

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
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\*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
\*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



■ 지난 11월,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, '20년에도 총 220개 회사(잠정)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

###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

- **추진배경**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
- **주요내용**
  -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위(금감원)에서 지정하는 제도
  -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(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%이상이고,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)
- **시행일** 2019년 11월 1일

##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
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☎ 02-2100-2836

은행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·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.

- 현재 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%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'20년부터는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(disincentive)하고,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(incentive)하게 됩니다.\*

\* 가계대출 100%→115%, 법인대출 100%→85%, 개인사업자대출 100%→100%

현행	개선
원화대출금 원화예수금	$\frac{(가계대출 \times 1.15) + (법인대출 \times 0.85) + (개인사업자대출 \times 1.0)}{원화예수금} \leq 100\%$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('18.7.11.)

###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

- 추진배경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취급유인을 억제하고, 혁신·중소기업 등 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
- 주요내용
  - 예대율 산정시 대출유형별로 가중치 조정
    - \* 가계대출 100%→115%, 법인대출 100%→85%, 개인사업자대출 100%→100%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02

Education ·  
Childcare · Family

## 교육·보육·가족

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 교육부

자세한 내용은 p.84

###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

시행일 : 2020년 학년도

#### Before

'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하고있는  
고등학교 무상교육(입학금 · 수업료 · 학교운영지원비 ·  
교과서비)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 · 3학년으로  
확대 시행됩니다..



## 2 교육부

자세한 내용은 p.85

###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
시행일 : 2020년 3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 
교육급여(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)를 지원하였습니다.



지원 항목	지급대상	2019년
부 교재비	초등학생	13만2천원
	중학생 고등학생	20만9천원
학용 품비	초등학생	7만1천원
	중고등학생	8만1천원

#### After

'20년 3월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\*을 대상으로  
지원되는 교육급여(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)의  
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.

지원 항목	지급대상	2020년
부 교재비	초등학생	13만4천원
	중학생	21만2천원
	고등학생	33만9천 2백원
학용 품비	초등학생	7만2천원
	중고등학생	8만3천원

\* 중위소득 50%  
(예 : '20년 기준, 4인가구 237만원) 이하 가구의 초 · 중 · 고 학생

## 3 보건복지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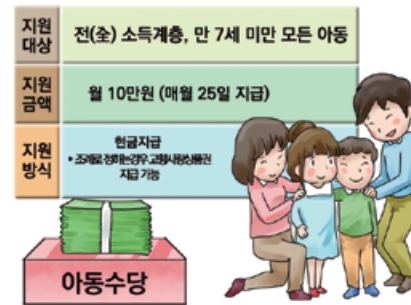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88

###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

시행일 : 2020년 9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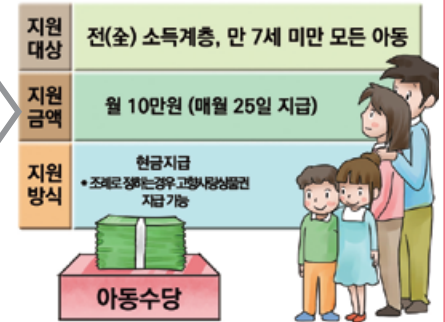
#### Before

아동수당 도입으로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 
모든 아동(247만명)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아동수당을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 
아동(263만명)에게 확대 지원합니다.



## 4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93

###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 
3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에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 
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하여 여성이  
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.



\*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새일센터) 전국 158개소 운영중(대표번호: 1544-1199)

## 5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94

###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대기 기간을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
얼마나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을까?



#### After

'20년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.

-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신청 및 확인, 취소, 변경 가능
- 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대기 순번, 예상되는 대기 기간 확인



## 6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95

###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을 민간중심으로 확충해 왔습니다.



청소년 동반자  
1,313명

청소년상담  
복지센터  
231개

#### After

'20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도 확충하고,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.

지자체  
청소년안전망  
9개소

청소년 동반자  
1,377명



고위기  
맞춤형 프로그램  
17개소

청소년상담  
복지센터  
238개

## 7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96

###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

시행일 : 2020년 상반기

#### Before

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



찾아가는 출장검진  
10개 지역(1000명)

꿈드림센터  
214개소

전용공간  
52개소

#### After

'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

급식지원

전용공간  
72개소

찾아가는 출장검진  
12개지역 1,200명

• 자원문의 :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, 청소년전화(1388)  
• 시군구별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

## 8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97

###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.



청소년  
방과후아카데미  
280개소

진로체험프로그램  
시범 9개소

#### After

'20년에는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활동기반을 더욱 확대합니다.



청소년  
방과후아카데미  
310개소

진로체험프로그램  
310개소



##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17)

'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'20년에는 고등학교 2·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
### ■ (지원항목) 입학금·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·교과서비

-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

### ■ (대상학교) 초·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

-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
※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하며, 시·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

참고 교육부 홈페이지>홍보자료>「고교 무상교육,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」등

###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개요

- **추진배경**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- **주요내용**
  - (지원항목)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 
※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
  - (대상학교) 초·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
※ 입학금·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
  -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·중학교와 동일
  - (시행방안) '19년 2학기 3학년 → '20년 2·3학년 → '21년 전학년(완성)  
※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'19.12.3.)
- **시행일** 2020 학년도

##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24)

저소득층 가구 학생\*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(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)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.

\* 중위소득 50%(예 : '20년 기준, 4인가구 237만원)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
■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, '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%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.

■ 이는,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.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.

※ '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: (초) 206천원 (중) 295천원 (고) 422천원

〈 '20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(1인) 〉

지원항목	지급대상	2019년	2020년
부교재비	초등학생	132,000원	134,000원
	중학생	209,000원	212,000원
	고등학생		339,200원
학용품비	초등학생	71,000원	72,000원
	중고등학생	81,000원	83,000원

###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
- **추진배경**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
- **주요내용**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
- **시행일** 2020년 3월
- **신청방법**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bokjiro.go.kr) 신청  
※ 교육비(방과후학교 수강권, 급식비 등 지원)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,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
- **문의전화** 보건복지 콜센터 129

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

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(☎ 044-203-6730)

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,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.

- 다만,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·외 행사(체육대회, 수학여행 등)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원)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·운영하여야 합니다.

##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(☎ 044-201-1566)

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됩니다.

-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'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'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.
  - 현행 : 소규모(3~20인) 국공립어린이집
  - 개정 : 소규모(3~20인) 국공립어린이집·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- 그리고,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'농번기 아이돌봄방'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.
  - 현행 : 4개월 운영
  - 개정 : 4~6개월 운영

참고 교육부 홈페이지>뉴스·홍보>보도자료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보도자료

###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

- 추진배경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응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
- 주요내용
  -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·중·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
  - 제한적인\* 토요일·공휴일 수업일수 인정
    - \*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원)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
- 시행일 2020년 3월 1일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

###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

- 추진배경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
- 주요내용
  -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 확대
    - 현행 : 소규모(3~20인) 국공립어린이집
    - 개정 : 소규모(3~20인) 국공립어린이집·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
  -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
    - 현행 : 4개월 운영
    - 개정 : 4~6개월 운영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☎ 044-202-3415)

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
-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(0개월~83개월)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, '행복 출산 One-Stop 서비스'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('19년 247만 명→ '20년 263만 명, 예산기준)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.

### 아동수당 사업 개요

- **추진배경**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
- **주요내용**
  - 지원대상 : 만 7세 미만 (0~83개월) 모든 아동
 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
  - 지원방식 :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
(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)
  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- 사업안내 : 아동수당 홈페이지 (ihappy.or.kr) 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
- **시행일** 2018년 9월~

##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(☎ 044-202-3361)

2020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.
-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
  - '다함께돌봄 홈페이지(www.dadol.or.kr)'를 통해 주변의 이용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

###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

- **대상** 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(초등학생)
- **내용** 상시·일시 돌봄, 문화·예술·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,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, 간식 제공 등
- **공간** 주민자치센터·복지관·도서관·보건소 등 공공시설,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
- **돌봄인력**
  - 상근 2인(관리자·돌봄선생님 각 1인)
  - \*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

##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

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(☎ 044-202-3446)

2020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하여,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(4,920명)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, -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(7,820명)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#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

- **추진배경**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 대상 확대
- **주요내용**
  -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
  - 아동일시보호·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가족돌봄휴가 신설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가족돌봄휴가(무급)가 신설됩니다.

-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,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- \* 가족돌봄휴가 기간(최대 10일)과 가족돌봄휴직 기간(최대 90일)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-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.
  - (현행)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→ (개정) 조부모, 손자녀도 포함
-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여성>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

### 가족돌봄휴가 신설

- **추진배경** 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
- **주요내용**
  -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(무급) 신설
    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
    - 가족돌봄휴직 기간(연간 90일)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
    -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
  -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 상한액 인상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7)

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\*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%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
  - \*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,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만에 대해 급여 지원
-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여성>출산·육아지원

출산전후휴가급여  
상한액 인상

- 추진배경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
- 주요내용
  -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(180→200만원)
  - ② '20.1.1.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'20.1.1.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(☎ 02-2100-6204)

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·노무 상담,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'경력단절 예방 서비스'를 확대합니다.

-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'19년 35개소에서 '20년 6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.
- 취업여성들에게 인사·고충 상담, 경력개발 설계상담, 멘토링·코칭 등을 제공하고,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·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

경력단절 예방  
서비스 확대

- 추진배경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·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사전예방 기능 확대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
- 주요내용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확대(35개소 → 60개소)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

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(☎ 02-2100-6365, 6366)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됩니다.

-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,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,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,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,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.
  -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,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아이돌봄서비스  
대기관리시스템 및  
어플리케이션 운영

- **추진배경** 서비스 신청 및 대기 과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기 관련 정보 제공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신청 및 확인, 취소, 변경
  -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 순번,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 확인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(☎ 02-2100-6275, 6276)

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,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.

-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·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,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상담 서비스'를 제공하는 '청소년동반자'도 1,313명에서 1,37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
- 또한,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·지원·사후관리를 전담할 '청소년 안전망팀'(9개소)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,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.
  - \* (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)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,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
- 아울러 가출·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(17개소)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.

참고 지원문의 : 청소년전화 1388

사각지대 없는  
위기청소년 보호·  
지원체계 구축

- **추진배경**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위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
- **주요내용**
  - (인프라 확대)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 231개→238개소, 청소년동반자 확충 1,313명→1,377명
  - (공공성 강화)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설치(9개소)(신규)
  - (맞춤형 지원) 고위기청소년 발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(17개소)(신규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(☎ 02-2100-6319)

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, 자립,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(꿈드림센터)가 8개소 확대됩니다.
  - \* 꿈드림센터 : ('19년) 214개소 → ('20) 222개소
-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.
-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됩니다.
  - \* 전용공간 : ('19년) 52개소 → ('20) 72개소 (20개소 추가 설치)
- 또한,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·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\*을 확대하고,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\*\*이 가능해집니다.
  - \* 찾아가는 출장검진 : ('19) 10개 지역 1,000명 → ('20) 12개 지역 1,200명
  - \*\* (기존) 꿈드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→ ('20) 온라인(전자메일)으로도 신청 가능

**참고** 지원문의 : 꿈드림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, 청소년 전화(1388)

###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

- **추진배경**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접근성 제고 및 지원 서비스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① 꿈드림센터 확충(214개소→222개소)
  - ②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지원
  - ③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확대 설치(52개소→72개소)
  - ④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 확대 및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
- **시행일** 2020년 상반기  
※ 시군구별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

##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

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(☎ 02-2100-6250, 6259)

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충하고,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합니다.

-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30개소 확대합니다.
  - \* 운영기관 확대 : ('19) 280개소 → ('20) 310개소 (30개소 ↑)
-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합니다.
  - ※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: ('19) 시범운영 9개소 → ('20) 전국 310개소

**참고** 인근 운영기관 찾기 : www.youth.go.kr/yaca

###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개요

- **추진배경** 다양한 활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(지원대상) 초등4학년~중등3학년 청소년
  - (운영내용) 체험활동 프로그램(진로·직업, 문화·예술·과학, 체육, 자원봉사 등), 보충학습, 상담, 석식 제공
  - (시간/공간) 방과후 1일 4시간 / 청소년수련관, 문화의 집 등
  - (신청방법) 유선 또는 방문 신청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

##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
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(☎ 02-2100-6332)

2020년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·교육, 네트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- \* (돌봄대상) 만 0세 ~ 초등 6학년
  - \* (운영시간) 주중/주말 자유롭게 운영
  - \* (프로그램) 학습·놀이·체험, 등하교 지원, 급식 지원 등
-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하고,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납니다.
  - \* (개소수) ('19년) 218개소 → ('20년) 268개소
  - \* (인력) ('19년) 개소당 전담 1명 → ('20년) 개소당 전담 1명, 시간제 1명
- 한부모·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확대합니다.
  - \* 가족센터(착공연도 기준) : ('19년) 5개소 → ('20년) 64개소

###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

- **추진배경** 부모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지원 체계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지역사회 부모자조모임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
  - 다양한 가족형태를 감안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
  -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
- **시행일** 2020년 상반기

##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☎ 02-2100-6352)

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,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내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형)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, 비급여 병원비, 건강검진, 질병치료·입원, 진단서 발급,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 지원
-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.

참고 한부모가족상담 : 1644-6621

###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

- **추진배경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17조의6 신설에 따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기본생활지원형)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입소 미혼모자가족의 건강관리 강화 도모
- **주요내용**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자 대상 산전·분만·산후관리 및 질병의 예방·치료 등을 위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청소년의 정책·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(☎ 02-2100-6238)

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활동 창구를 다양화합니다.

- 청소년정책의 총괄·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,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'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.
-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'청소년참여포털'(www.youth.go.kr/ywith)을 내년부터는 상시 운영하여 "시공간 제약없이, 청소년 누구나" 정책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원탁회의를 개최(연 2회 이상) 할 계획입니다.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### 청소년의 정책·지역 사회 참여 기회 확대

- **추진배경** 청소년들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통해 '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'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청소년정책위원회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에 청소년 위원 위촉 ('20년 신규)
  - '청소년참여포털'을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상시화 및 원탁회의 개최 ('20년 신규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'배우자 출산'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

병무청 동원관리과 (☎ 042-481-2770)

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'배우자 출산'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.

-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·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·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.
-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.

### '배우자 출산'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

- **추진배경**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
- **주요내용**
  - 배우자 출산(예정)일과 동원훈련 중복 대상기간 확대 적용
    - 종전 : 출산(예정)일과 훈련기간 전·후 14일이 중복될 경우
    - 개정 : 출산(예정)일과 훈련기간 전·후 21일이 중복될 경우
- **시행일** 2020년 3월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

##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

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(☎ 02-3150-0935)

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.

■ 현행 :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

■ 개정 :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

※ 단,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는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,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('21학년도 신입생)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경찰대학 홈페이지>보도자료> 2021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

###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
- 주요내용
  - 입학연령 제한 완화
    - 현행 :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
    - 개정 :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
      - ※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 연장
- 시행일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부터('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)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03

National Defense ·  
Military Affairs

국방·병무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 국방부

자세한 내용은 p.106

###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

시행일 : 2020년 (잠정)

#### Before

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(兵)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, 군기교육·감봉·견책 등을 도입합니다.

- 영창을 폐지하고, 군기교육을 도입
  -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
- 감봉·견책 신설
  - 감봉은 1~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
  -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

#### After



## 3 국방부

자세한 내용은 p.108

###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'18년에는 병사의 봉급을 '17년 최저임금의 30%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구분	봉급액
병장	405,700
상병	366,200
일병	331,300
이병	306,100

#### After

'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을 '17년 최저임금의 40%수준 ('19년 대비 33%인상)으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.

'20년 : '17년 최저임금의 40%

구분	봉급액
병장	540,900
상병	488,200
일병	441,700
이병	408,100

\*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%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.

## 2 국방부

자세한 내용은 p.107

###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은 본인 부담 과다 등의 제한이 있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, 본인부담률은 낮출 예정입니다.



## 4 병무청

자세한 내용은 p.114

###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.

- 신청대상 : 현역병입영 대상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, 예비역
- 복무기간/기관 : 36개월/교정시설
- 예비군대체복무 : 복무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
- 제제사항 : 거짓서류 작성·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
- 편입신청은 위원회 구성 이후 상반기 중 접수 예정

#### After

· 신청기한 :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





## 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

국방부 법무관리관실 (☎ 02-748-6818)

헌법상 영창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(兵)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, 군기교육·감봉·견책 등을 도입합니다.

■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

현 행	개 정	비 고
강등 영창	(좌동) 군기교육	영창 폐지/신설
휴가제한 근신	감봉 휴가단축 (좌동) 견책	신설 용어수정 신설

■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별목을 신설하여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.

참고 국방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

###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신설

- **추진배경**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
- **주요내용**
  - 영창을 폐지하고, 군기교육을 도입
    - 군기교육은 15일 이내에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
  - 감봉·견책 신설
    - 감봉은 1~3개월 범위에서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
    -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
- **시행일** 2020년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##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

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2-748-5122)

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.

- '병 자기개발비용 지원'은 병사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
- 20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(1인당 연간 5만원→10만원), 본인부담률은 낮추어(비용의 50%→20%) 추진할 예정입니다.

참고 국방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

### 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

- **추진배경** 다양한 개인의 적성·희망·여건을 고려하고, 창의·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
- **주요내용**
  -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

구분	2019년	2020년
지원금액	1인당 연간 최대 5만원	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
본인부담	비용의 50%	비용의 20%
지원 분야	자격취득(국가·민간)·어학 등 능력검정 응시료, 도서구입비, 온·오프라인 강좌수강료	
지원 대상	소 부대 대상 자기개발을 희망하는 병	
지원 절차	자기개발 활동 실시 → 지원 신청(나라사랑포털 이용) → 관련서류 심사 → 비용지급(매월 15일 전후)	

•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 (☎ 02-748-6613)

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% 인상하였습니다.

-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.
-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%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,900원을 지급하게 되며,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%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.
- '병 봉급 인상'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,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참고 국방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

## 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

-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

'18년 : '17년 최저임금의 30%		'20년 : '17년 최저임금의 40%		'22년 : '17년 최저임금의 50%	
구분	봉급액	구분	봉급액	구분	봉급액
병장	405,700	병장	540,900	병장	676,100
상병	366,200	상병	488,200	상병	610,300
일병	331,300	일병	441,700	일병	552,100
이병	306,100	이병	408,100	이병	510,100

- 시행일 2020년 1월

##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

국방부 예비전력과 (☎ 02-748-5244)

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.

-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3.2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, 2020년부터는 4.2만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.
- 또한,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.3만원에서 1.5만원으로 인상합니다. 2019년 교통비\*는 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천원을 지급하며,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.  
\* 단,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19년에는 116.14원/km를 추가 지급하였으며, 2020년에는 131.82원/km를 추가 지급
-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

- 추진배경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필요
- 주요내용 동원훈련 보상비 및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인상
- 시행일 2020년 3월('20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시부터)

##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

국방부 예비전력과 ☎ 02-748-5244

예비군 훈련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합니다.

-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,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2019년도에 연간 18일에서 2020년도는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를 지급하겠습니다.
- 향후에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##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

국방부 물자관리과 ☎ 02-748-5726

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과 신규 품목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먼저, '19년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패딩형 동계점퍼를 '20년에는 입대하는 병사 전체에게 보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를 신규 보급할 예정입니다.
- 그리고,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68,976원에서 94,440원으로 증액하여 병사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  -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: 치약, 칫솔, 샴푸, 바디워시, 세안제
- 이를 통해,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일수 확대 시행

- 추진배경 미세먼지 관련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의 건강보호 필요
- 주요내용
  - ①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(2,631대)
  - ②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 보호를 위해 연간 마스크 지급 일수 확대 (18일→50일)
- 시행일 2020년 3월('20년 예비군훈련 일정 시작시부터)

###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피복류 보급 개선

-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
- 주요내용
  - 패딩형 동계점퍼 확대 보급/컴뱃셔츠 보급/일용품 현금지급액 증액
  - ① 패딩형 동계점퍼 : '19년 최전방 부대 병사 124,250명 → '20년 입대 병사 전체
  - ② 컴뱃셔츠 : '20년 신규 보급
  - ③ 일용품 현금지급액 : '19년 연 68,976원 → '20년 연 94,440원
- 시행일 2020년 1월



##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

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(☎ 044-202-5737)

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됩니다.

-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기존 7개 광역권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경기북부, 경기남부)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10개소로 확대합니다.

- 추가개소지 : 인천, 강원(춘천), 경남(창원)지역

-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(www.vnet.go.kr)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합니다.

-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기능



##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

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(☎ 044-202-5271)

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·예상 수혜 정보를 시·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,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
- 기존의 자기정보조회(약 9종의) 서비스를 대체하여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정부24,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.

### 개인 맞춤형 보훈 서비스 구축

- **추진배경**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원 지원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
- **주요내용**
  -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수혜사항을 개인이 직접 확인·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  - 민원인은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 즉시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
- **시행일** 2020년 2월 29일

##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

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(☎ 042-481-1932)

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.

-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,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,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,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

###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

- **추진배경**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(2018.6.28.)
- **주요내용**
  - 신청대상 : 현역병입영 대상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, 예비역
  - 신청기한 :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
  - 복무기간/기관 : 36개월/교정시설
  - 예비군대체복무 : 복무 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
  - 제재사항 : 거짓서류 작성·제출 또는 허위 진술 등 형사처벌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(편입신청은 위원회 구성 이후 상반기 중 접수 예정)

##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

병무청 현역입영과 (☎ 042-481-2716)

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·부대가 확정되도록 '현역병 입영신청 제도'가 달라집니다.

-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·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, '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('21년도)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분류되어 확정·고지됩니다.
- ※ '20년 1월부터 현역병본인선택(다음연도 '입영월') 신청은 폐지
- 이에 따라 학사(취업)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·안내

- **추진배경** 입영일자·부대의 조기 결정, 의무자 안내로 학업일정 관리, 취업·휴직 등 입영준비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- **주요내용**
  - 입영신청 및 방법 개선
    - 당초 : 다음해 '입영월' 선택,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·안내(12월)
    - 개선 : '입영일자' 선택과 동시에 입영부대 확정(전산시스템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(2021년 입영일자 신청은 2020년 7월부터)

##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

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(☎ 042-481-2918)

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, 질병, 심신장애 등을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하여 왔습니다.
-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,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,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,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.

###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

- **추진배경** 신체적 취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악성 혈액질환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 처분
  - 악성 혈액질환(5개) :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,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,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AI(챗봇) 기반, 언제·어디서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

병무청 정보기획과 (☎ 042-481-2646)

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

-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.
-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,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,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### AI(챗봇) 기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

- **추진배경** 신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병무민원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의무자 편의성 증대
- **주요내용**
  - 기존 : 민원상담소(09:00~18:00) 근무시간 민원상담 가능  
변경 : 단순상담 24시간×365일 민원상담 가능
  - 기존 : 민원신청과 상담 별개의 절차로 진행  
변경 :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으로 상담과 동시에 민원신청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 2월

##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

병무청 정보기획과 (☎ 042-481-2652)

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그동안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따라 본인인증과정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- 이에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블록체인과 전자증명(Digital ID)기술을 활용,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.
- 또한,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. 이제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,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### 블록체인 기반,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

- **추진배경** 공인인증서폐지(국정과제)에 따른 민원출원 시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및 부인방지 기능 구현
- **주요내용**
  - 기존 :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
  - 변경 :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 가능
  - 기존 :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 방문 후 종이증명서 제출
  - 변경 : 보훈처에서 직접 시스템으로 발급 신청, 병적증명서 전송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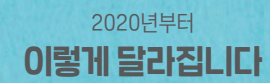
병무청 자원관리과 (☎ 042-481-2915)

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.68원 인상합니다.

-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, 식비, 숙박비이며,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교통비는 '19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합니다.
  - (현행) 116.14원/km → (개정) 131.82원/k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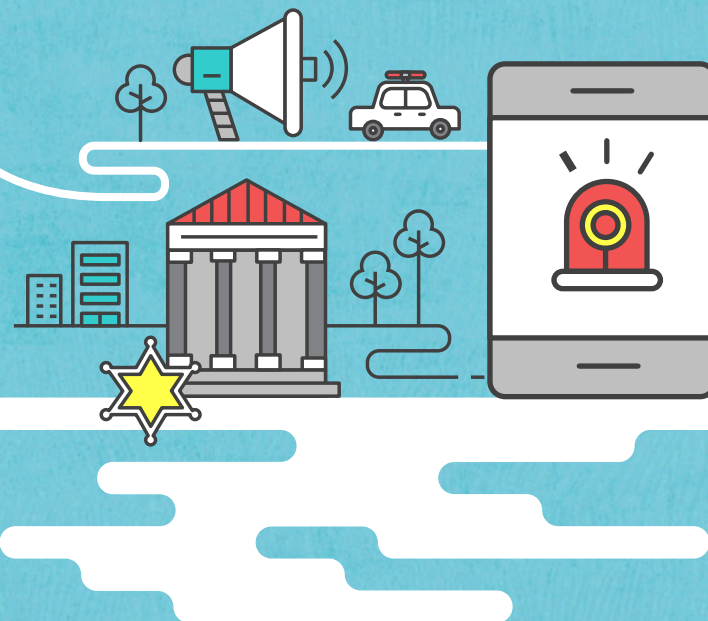
###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

- **추진배경** 병역의무자여비 현실화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(1km 당 15.68원 ↑)
  - 현행 : 116.14원/km
  - 개정 : 131.82원/km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

- Administration ·
- Safety · Public Order

## 행정·안전·질서





# Infographic

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1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137

###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이주여성에게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.



## 2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138

###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

시행일 : 2020년 상반기

#### Before

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이·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상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


•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(학교,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시설 등)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합니다.

## 3 여성가족부

자세한 내용은 p.139

###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

시행일 : 2020년 1월 중

#### Before

지금까지 성희롱·성폭력 신고상담이 분야별 신고센터에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.



#### After

민간·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, 사건처리절차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.



※ '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'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·운영

## 4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141

###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

시행일 : 2020년 8월 28일

#### Before

그동안은 갑작스러운 사고시 어업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8월 시행되는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라 기상이 안좋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.



※ 적용대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 5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142

### 공공선,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 1월 1일부터 정부,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,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.

- (현행) 다목적 추진 선박 건조 허용
- (개정)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, 환경친화적에너지(LNG, CNG, LPG, Methanol, Hydrogen 등) 사용선박, 전기추진선박, 하이브리드선박,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

#### After



## 7 경찰청

자세한 내용은 p.152

###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

시행일 : 2020년 3월 말

#### Before

'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,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.

-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
-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, 과속방지시설,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

#### After



## 6 식품의약품안전처

자세한 내용은 p.150

###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

시행일 : 2020년 3월 14일

#### Before

소비자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

#### After

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나만의 맞춤형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

## 8 국민권익위원회

자세한 내용은 p.166

###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공공재정환수법)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금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며 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하면,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,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After





##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

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(☎ 044-215-5153)

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

-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.
- 또한,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·수익(전대)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(잠정)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(예정)

지방자치단체가  
국유지에 생활SOC  
설치 가능

- **추진배경** 유향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
- **주요내용**
  -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
  -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
- **시행일** 2020년 7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☎ 044-201-1590)

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,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.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
-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,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(잠정)부터 적용되며,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&gt;국민소통&gt;법령정보&gt;최근제개정법령

성범죄자의  
농어촌민박사업  
금지 조항 신설

- **추진배경**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
- **주요내용**
  -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
  -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
  -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
- **시행일** 2020년 7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##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☎ 044-201-1590)

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.

■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
- ① (기본시설)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, 휴대용비상조명등, 유도표지(연면적 150㎡ 이하), 피난구유도등(150㎡ 초과), 완강기(3층이상 건물)
- ② (화기취급처(보일러실, 주방 등) 안전시설) 일산화탄소 경보기(객실 포함), 가스누설경보기(가스 사용시), 자동확산소화기

■ 또한,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최근제개정법령

###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

- **추진배경**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
- **주요내용**
  - 농어촌민박 시설의 소방·안전 시설기준 강화
    - 휴대용 비상조명등, 유도표지(등), 완강기, 일산화탄소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,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
  -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
- **시행일** 2019년 12월 31일

##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

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,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■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.

- 농촌진흥청이 '09년부터 '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.

■ 따라서,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.

■ 또한,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>법령>식물방역법

### 식물병해충 연구자에게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부과

- **추진배경**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
- **주요내용**
  -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기존의 식물재배자 외 식물병해충을 조사·연구한 연구자를 포함
  -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 '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'를 추가
  -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1일

##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(☎ 044-201-2261~2)

화환을 판매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사람(업체)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- 화환을 제작·판매할 경우,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  - 또한, 소비자,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-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 보도자료)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

###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

- **추진배경**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
- **주요내용**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,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
- **시행일** 2020년 8월 21일

## 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(어린이 놀이기구)의 안전기준” 개정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☎ 043-870-5574)

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·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.

- 우선,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(그네, 미끄럼틀 등)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(조합놀이대)을 제작할 경우,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,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·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소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,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하였으나,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며,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참고**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)고시)

###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

- **추진배경**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
- **주요내용** (어린이놀이기구)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 면제 및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
- **시행일** 2020년 4월

## “전동보드 안전기준” 신설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☎ 043-870-5451)

전동보드(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)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.

-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(30 kg)는 제한하고 등화장치(전조등, 미등, 반사경)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,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“휴대용 사다리” 안전기준 개정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☎ 043-870-5460)

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을 가정용(용도)에 맞게 조정합니다.

- 휴대용 사다리란,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로,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(높이 2m 이하), 보통 사다리(길이 10m 이하), 도배용(높이 1.2m 이하), 원예용(높이 3m 이하), 계단식 소형 사다리(높이 1m 이하)로 구분됩니다.
-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하여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.
-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며,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고시>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

###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

-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
- 주요내용 전동보드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을 별도 관리하고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,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
- 시행일 2020년 2월 16일

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

###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

-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
- 주요내용 (휴대용 사다리) 계단식 소형 사다리(스텝 스톨)에 대한 안전요건 신설
- 시행일 2020년 6월 1일

## “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(건전지)의 안전기준” 개정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☎ 043-870-5458)

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됩니다.

-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(수은, 카드뮴, 납) 등을 관리하게 되며,
-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/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,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
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,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조·수입업자들은 시험·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며,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고시>

###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개정

- 추진배경 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이행을 위해 건전지 안전관리 대상범위 확대
- 주요내용 (건전지)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원통형에서 단추형까지로 확대하여,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 중금속 등 안전기준 적용
- 시행일 2020년 11월 14일

## ‘키즈카페’ 환경안전관리 강화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☎ 044-201-6754)

영·유아,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'20년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.

-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‘납’, 발암물질인 ‘휘발성 유기화합물’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(制裁)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.
  - \*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 : 전국 키즈카페 약 1,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, 80%가 넘는 1,573곳이 ‘환경보건법’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, 이중 1,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 초과
- 앞으로는 붕붕뿔뿔,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이드,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\*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됩니다.
  - \* 중금속 ‘납’ 농도는 600ppm 이하,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$\mu\text{g}/\text{m}^3$  이하, 녹 및 크랙 금지
-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(3년) 동안 환경안전진단\*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\* 중금속 및 실내공기질 진단,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
- 이제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험요인들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###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(어린이활동공간 범주 확대)

- 추진배경 관리사각 어린이활동공간 관리강화를 통한 어린이 건강 보호
- 주요내용 키즈카페를 법정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 (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)
- 시행일 2019년 12월말
  - \* 확인검사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은 관할 시·군·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

##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공공기관\*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.

\* 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■ **현행**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3(근거 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69호)■ **개정** : 총 구매액의 1,000분의 6■ **개정내용**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&gt; 정책자료 &gt; 대상자별 정책 &gt; 장애인

###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

- **추진배경**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현행보다 상향 조정 (잠정 : 1,000분의 6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(☎ 02-2100-6370)

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결혼이주여성이 '현지사전교육', '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'에 참여하거나, '읍·면·동주민센터'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됩니다.
  - ※ (현지사전교육) 결혼이주 예정자에게 한국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(베트남, 필리핀 지역에서 시행 중, 태국은 상반기중 시행 예정)
  - ※ (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)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관계 법령 습득 기회를 제공(2019.10.1.부터 결혼이주여성 교육참여 의무화)

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·이메일·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합니다.

-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,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,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-멘티, 자조모임,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.

###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

- **추진배경**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결혼이주여성이 '현지사전교육', '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'에 참여하거나 '읍·면·동주민센터'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

##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☎ 02-2100-6404, 6406)

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'20년 상반기부터 실시합니다.

-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·면·동(행정동 기준)의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-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,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\*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 실시
- 다만,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(학교,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시설 등)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됩니다.

성범죄자  
신상정보 모바일  
전자고지서비스 시행

- 추진배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
- 주요내용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여부를 묻는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,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
- 시행일 2020년 상반기

##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

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(☎ 02-2100-6164)

어디에·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분야별(공공·교육·민간사업장·문화예술) 사건처리 절차,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합니다.
- ※ 현행 : 공공·교육·민간사업장·문화예술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
개정 : 종합지원센터 및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
-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월중 설치·운영됩니다.

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성희롱·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

성희롱·성폭력 근절  
종합지원센터 운영

- 추진배경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 - 공공·교육·민간사업장·문화예술 각 분야별 지원내용, 사건처리절차 등 종합 상담
  - 상담, 법률, 노무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사건발생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컨설팅 지원
  -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
- 시행일 2020년 1월중  
※ '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'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·운영

##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

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☎ 02-2100-6408, 6409)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.

- 아동·청소년 선수 선발·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.
- 또한 ▲「제주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, ▲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, ▲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.

##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(☎ 044-200-5527)

2019년 8월 제정된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라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.

-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  - 다만,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- 기존에 「선박안전조업규칙」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,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  - 아울러, 조업한계선 이탈,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

###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

- 추진배경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
- 주요내용
  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
  -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
- 시행일 2020년 5월 27일

참고 법제처 홈페이지>현행법령 검색>“어선안전조업법” 공포(‘19.8.27), 시행(‘20.8.28.)

### 어선 안전관리 강화

- 추진배경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확보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·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주요내용
  - 기존 「선박안전조업규칙」에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어선의 위치 통지 절차, 구명조끼 착용 요건, 안전조업교육 시행기관 및 실시방법 마련
  - 출어등록 절차·방법,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·항행 제한 해역 및 기간 설정 등
- 시행일 2020년 8월 28일

## 관공선,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6, 5838)

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,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,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됩니다.

### ■ 현행 : 디젤연료 추진 선박 건조 허용

개정 :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, 환경친화적에너지(LNG, CNG, LPG, Methanol, Hydrogen 등) 사용선박, 전기추진선박, 하이브리드선박,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화

### ■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,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·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뉴스>보도자료>관공선,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(2019.10.28.)

### 환경친화적 선박,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정의

- **추진배경**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
- **주요내용**
  - “환경친화적 선박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.
    - 가.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“공동부령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
    - 나.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
    - 다.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
    - 라.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
    - 마.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
  - “환경친화적인 에너지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.
    - 1. 액화천연가스(LNG), 2. 압축천연가스(CNG), 3. 액화석유가스(LPG)
    - 4. 메탄올(Methanol), 5. 수소(Hydrogen), 6. 암모니아
    - 7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
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(☎ 044-200-5720)

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‘우수 선화주기업 인증’ 제도가 도입됩니다.

### ■ 인증대상은 「해운법」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,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‘우수 선화주기업 인증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■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,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·법령·정보>입법예고>“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2019.11.18.)

###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

- **추진배경**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선화주기업의 상생노력,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- **시행일** 2020년 2월
  - \*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 기업 선정

##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

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(☎ 044-200-5733)

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%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.

-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,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%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\*해왔으나,
  - \* 단,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·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,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%와 50% 지원 중
-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%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  - 지원 대상은 「주민등록법」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%인 차량입니다.

**참고**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2019.6.27.)

###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

- **추진배경**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
- **주요내용**
  -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
  - ① (지침 개정) 도서민 단거리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화물차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
  - ② (국비 반영) '20년 예산 반영(국비 50%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

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(☎ 044-200-5733)

2020년 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(승선권 발급 및 탑승 시)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

- 그간 여객선 발급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.
  - \* 고령의 도서민의 경우 신분증을 미소지하는 경우도 많고,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 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다수
- 이에, 지난해 말까지 웅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,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  -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,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\*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되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.
  - \* 승선 시에는 승선관리스캐너에 표출된 사진정보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뉴스>보도자료>도서민 여러분,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. (2019.10.22.)

###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

- **추진배경** 도서지역 주민의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통해 정주여건 개선
- **주요내용**
  -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
  - ① (방침 확정)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승선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분 확인 시행
  - ② (시범사업 확대) 웅진군과 실시한 시범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

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(☎ 044-200-5523)

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,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.

- **현행** : 어선용 소화기
- **개정** :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
- 다만,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.3kg 이상, 휴대식은 6.5kg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(잠정)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바다>법령정보>행정예고>“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” 및 “어선설비기준” 개정안 행정예고(‘20.2.1. 잠정)

###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

- **추진배경** 쉽게 구입·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
- **주요내용**
  -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
    - 현행 : 어선용 소화기
    - 개정 :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(다만,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.3kg 이상, 휴대식 6.5kg 이상에 한함)
- **시행일** 2020년 2월 1일(잠정)

##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

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(☎ 044-200-5965)

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
-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③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,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(잠정)됩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바다>법령정보>입법예고>“항만법 전부 개정 법률안” 입법예고(2018.6.5.)

###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관련 항만법 주요 개정 항목

- **추진배경** 행정절차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
- **주요내용**
  -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
  - ②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타당성 검토 실시 의무화
  - ③ 경미한 사업의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,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 처리
- **시행일** 2020년 6월(잠정, 개정안 국회 계류 중)

##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4)

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(두겹 바닥)구조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.

■ **현행** : 단일선저(홀겹 바닥)구조 허용

■ **개정** : 이중선저(두겹 바닥)구조 의무화

-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(DWT)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,
- 선령 50년 이상(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)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,
  - 선령 40년 이상(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)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,
  - 선령 40년 미만(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)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뉴스>보도자료>단일선체 소형유조선,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(2019.2.13.)

###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

- **추진배경**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
- **주요내용**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
- **시행일** 선령 50년 이상은 '20.1.1.', 40년 이상은 '21.1.1.', 40년 미만은 '22.1.1.'부터 적용

##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8)

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됩니다.

■ **현행** :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 비치

■ **개정** :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\* 비치

\* 여객정원의 2.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

※ (참고)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

기 준	유아용	어린이용	성인용
몸무게	15kg 미만	15~43kg	43kg 이상
키	100cm 미만	100~155cm	155cm 이상

■ **개정 내용**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뉴스>보도자료>연안여객선에 유아용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(2019.6.4.)

###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

- **추진배경**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, 비상시 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비치규정 신설
- **주요내용** 연안여객선(유·도선 포함)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 신설(여객정원의 2.5퍼센트 이상)
- **시행일** 2020. 1. 1.



##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

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(☎ 043-719-3403)

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'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,
-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'나만의 화장품'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- 판매장에서 향료,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
-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의 원활한 도입·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화장품을 선택·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.

### 맞춤형화장품 제도

- **주요내용**
  - (맞춤형화장품)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\*하거나 내용물을 소분\*\*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
    - \* 혼합 : 내용물+내용물 또는 내용물+원료
    - \*\* 소분 : 화장품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눔
  - (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)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소재지 별로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  - (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)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4일

## 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활용 확대

조달청 해외물자과 (☎ 042-724-7311)

2020년부터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계약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낙찰자결정 방식에 있어 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및 평가합니다.

-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접수는 조달청 내부시스템(EDI)과 e발주시스템의 불완전 연계로 제안서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하였으나,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안서를 전자적으로 접수처리
- 외자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제안업체의 입찰비용 경감과 협상계약의 투명성 향상 및 계약관리 효율화로 조달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.
-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외자 국제입찰에서 제안서 제본비용, 교통비 등 비용을 절감하여 입찰기업에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
- 외자 협상계약 시 제안서 보관 등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·분석이 가능해지고 제안서 보관장소 문제 해결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가능
- 장기적으로 조달청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국제입찰에 e발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검토 중

##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·장비 관리 강화

경찰청 교통안전과 (☎ 02-3150-2252) | 경찰청 교통운영과 (☎ 02-3150-2753)

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,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.

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·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「도로교통법」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
-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-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
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-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\*부터 적용됩니다.

\* 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

##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
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597)
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

- **추진배경**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
- **주요내용**
  -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
  -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, 과속방지시설,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말(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일 미정)

###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

- **추진배경**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필요성
- **주요내용**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(국제운전면허 포함)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
- **시행일** 2019년 12월 24일

##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
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597)

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.
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(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)이나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,
  -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,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

- **추진배경**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 문제 발생
- **주요내용**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25일

##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

경찰청 교통기획과 (☎ 02-3150-0659)

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, 앞으로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
■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- **현행** :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(최장 40일 소요)
- **개정** : 현장(경찰서)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

현행	개정後
① 진술서 작성	(없음)
② 사전통지서 발급	① 사전통지서 발급, 서명·날인
③ 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	② 결정통지서 바로 발급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(잠정, 법제처 심사 중)부터 적용됩니다.

###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

- **추진배경**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
- **주요내용**
  -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
    - 현행 :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
    - 개정 : 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일(잠정, 법제처 심사 중)

## 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47)

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,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※ 법령 사각지대에 노출된 병원급 의료기관 약 1천여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음

■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.

### 법령 개정 전·후 비교표

개정 전	개정 후
(스프링클러설비) - 6층 이상 모든 층 - 600㎡이상 요양병원 -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,000㎡이상인 층	- 6층 이상 모든 층 - 600㎡이상 병원급 의료기관* * 종합병원, 병원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-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,000㎡이상인 층
(간이스프링클러설비) - 600㎡미만 요양병원	- 600㎡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-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* *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
(자동화재속보설비) - 요양병원	- 병원급 의료기관 -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

##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47)

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으로 '셀프점검'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.

■ 셀프점검으로 인한 부실점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현행 : 연면적 5천㎡ 이상이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,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(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)
- 변경 :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, 연면적 5천㎡ 이상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(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)

- ① 작동기능점검 : 소방시설등을 인위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(모든대상)  
※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설치 대상은 소방관서 보고(이하는 자체보관)
- ② 종합정밀점검 :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,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등이 적합한지 점검(연면적 5천㎡이상+스프링클러설비·물분무)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법령 개정 전·후 비교표

개정 전	개정 후
(종합정밀점검 대상) - 5천㎡ 이상 +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(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)	(종합정밀점검 대상) -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- 5천㎡ 이상 + 물분무등소화설비(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)

##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47)

고장난 소방시설 수리·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.

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.

- 현행 :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
- 변경 :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법령 개정 전·후 비교표

개정 전	개정 후
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	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

##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기준 강화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47)

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기준 강화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.

■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.

- 현행 :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
- 변경 :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합격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법령 개정 전·후 비교표

개정 전	개정 후
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	시험합격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

##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52)

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■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.

- 현행 : 화재위험평가대상(①2,000㎡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경우)
- 변경 : 화재위험평가대상(①+②+③)+신종업종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- 추진배경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
- 주요내용
  -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
  -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·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
  -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
  -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
- 시행일 2020년

##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(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)

소방청 화재예방과 (☎ 044-205-7452)

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.

■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.

- 현행 :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
- 변경 :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,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

■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.

■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.

#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- 추진배경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을 추가하여 화재시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
- 주요내용
  - 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은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포함하지 않음
  - ②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
    - ➔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
    - ※ 영화관 피난안내 상영관련 진정\*에 따른 인권위원회 개선권고('18.3.8.)
- 시행일 2020년 4월 22일



## 융·복합 특허 ‘합의형 협의심사’ 실시

특허청 인공지능·빅데이터심사과 (☎ 042-481-5800)

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.

-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·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,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,
  -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

-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**참고** 특허청 홈페이지>보도자료>특허청, 융·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

##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(☎ 042-481-5736)

내년 3월 11일부터 ‘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(SW)’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하는 행위는 특허침해\*가 될 수 있습니다.

\* 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

- 종전에는 기록매체(CD, USB 등)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,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(온·오프 라인)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.
-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(제2조제3호나목)에 ‘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’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(기록매체)와 함께 ‘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온라인 전송하는 행위’가 포함됩니다.
-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실시 형태는 다양한데, 단순한 SW 전송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SW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.
- 동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.

### SW 온라인 전송 보호

- **추진배경**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를 보호
- **주요내용**
  - 방법발명의 실시예 ‘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’를 포함
  -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1일

## 특허·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(☎ 042-481-5399)

특허·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.

- 종전에는 특허·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)에 따라 정해진 항목(발명의 명칭,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,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)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.
-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,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더불어,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(.xml)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, PDF나 한글문서 등으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- 동 개정내용은 2020년 2월(잠정)

### 특허·실용신안등록 출원 명세서 형식 다양화

- **추진배경** 명세서 작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신속한 특허·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하기 위함
- **주요내용**
  -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는 명세서 제출 허용
  - 전자출원시 PDF, 한글문서, 워드문서 등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제출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 2월(잠정)

##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

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(☎ 042-481-5716)

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%(20만원→6만원) 감면합니다.

-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% 감면합니다.
  -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,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- 개정 내용은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이 공포·시행된 후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39조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.

###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감면

- **추진배경**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신청료 감면
- **주요내용**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% 감면 (20만원→6만원)
- **시행일** 2020년 상반기(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공포후 시행 예정)

##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(약칭 : 공공재정환수법) 2020. 1. 1. 시행
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(☎ 044-200-7613)

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.

-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각각 5배, 3배, 2배 부과됩니다.
- 과거 3년간,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,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됩니다.

국민 누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하면,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, 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(신분상 보호)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·징계의 보류 등
  - (경제적·행정적 보호) 원상회복, 인·허가,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
- 부정청구 등의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상금(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)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&gt;법령&gt;공공재정환수법

### 공공재정환수법 시행

- **추진배경**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
- **주요내용**
  -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시행
  -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·포상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(☎ 044-200-7704)

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\*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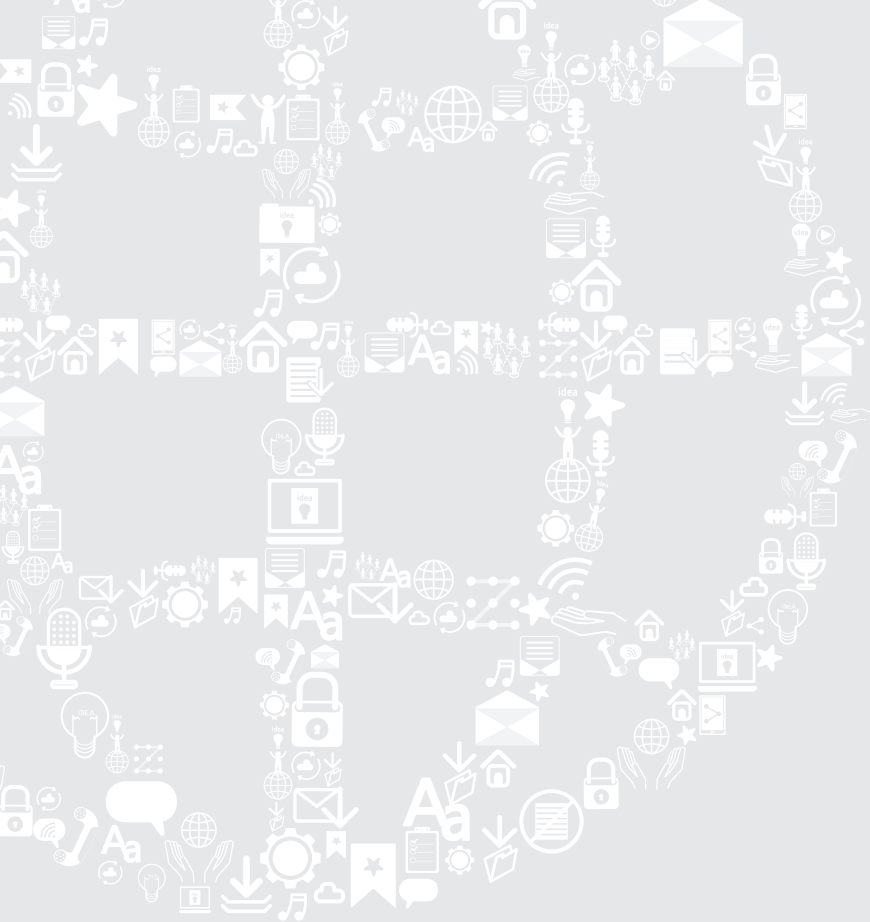
※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

-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  - 현행 : 모든 외부강의등(사례금 수수여부 관계없음)
  - 개정 :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
-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  - 현행 : 외부강의등 실시 전(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)
  - 개정 :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
-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2019년 11월1일 보도자료

###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

- **추진배경** 외부강의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예방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(의원발의안) 국회 본회의 의결
- **주요내용**
  -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변경
  - 외부강의등의 신고기한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
- **시행일** 2020년 5월 27일

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05

Culture · Sport ·  
Sightseeing

문화·체육·관광



## 1 문화체육관광부

자세한 내용은 p.172

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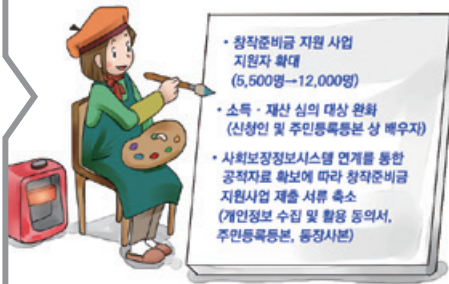
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•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: 예술활동 특성상 일반사회 · 노동의 시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(1인 3백만원, 격년제)

After

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



## 3 문화재청

자세한 내용은 p.180

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

시행일 : 2019년 12월 25일

Before

지금까지 급격한 산업화 · 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 · 훼손 사례 지속 발생,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


After

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 · 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


## 2 문화체육관광부

자세한 내용은 p.173

기존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Before

'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(2급 생활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)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.

- 현행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, 선택과목 4과목)  
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90시간)
- 개정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)  
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40시간)

After





##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(☎ 044-203-2718, 2722)

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됩니다.

-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.
  - 현행 : 5,500명
  - 변경 : 12,000명(6,500명 증가)
-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.
  - 현행 :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
  - 변경 :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
-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.
  - 현행 : (필수)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(해당자에 한해)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, 병적증명서, 육아휴직 확인서, 통장사본
  - 변경 :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  - \*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시스템 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산출·심의
- 변경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>사업안내>창작준비금 지원

###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 사항

- **추진배경**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사업 개편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
  - \*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: 예술활동 특성 상 일반사회·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 경력단절을 방지(1인 3백만원, 격년제)
- **주요내용**
  -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자 확대(5,500명→12,000명)
  - 소득·재산 심의 대상 완화(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)
 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보에 따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축소(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청소년)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(☎ 044-203-3130)

‘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(2급 생활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, 청소년스포츠지도사)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.

-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(2급 생활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, 청소년스포츠지도사)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를 응시할 때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,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  - 현행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, 선택과목 4과목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90시간)
  - 개정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40시간)
-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

- **추진배경** 불필요한 시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출 확대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
- **주요내용**
  -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(2급 생활스포츠지도사, 노인스포츠지도사, 청소년스포츠지도사)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(2급) 응시할 경우 절차 간소화
    - 현행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, 선택과목 4과목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90시간)
    - 개정 :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40시간)
- **시행일** 2019년 1월 1일



##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(☎ 044-203-2519)

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지원금을 2019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
-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(재충전)이 가능합니다.
-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천여 개의 온·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

통합문화이용권  
(문화누리카드)  
지원금 인상

- **주요내용**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전년대비 1만 원 인상  
 • ('19년) 1인당 연 8만 원 → ('20년) 1인당 연 9만 원
- **발급기간** 2020년 2월 1일 ~ 11월 30일
- **이용기간** 발급일 ~ 2020년 12월 31일
- **발급신청**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www.mnuri.kr)  
 \* 재충전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 전화(1544-3412)로도 신청 가능

##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(☎ 044-203-3136, 3137)

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(만5세~만18세)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.

-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.
- '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 예정으로, 최종 수혜대상은 '20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.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(svoucher.kspo.or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'20년 스포츠강좌  
이용권 지원 개요

- **지원내용**
  - 1인당 매월 8만원(1강좌)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  - 1인당 지원기간 : 연간 8개월 이상  
 ※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과 중복수혜 가능
- **지원자격**
  - 지원연령 : 만5~만18세 유·청소년  
 ※ 출생일 기준 2002.1.1~2015.12.31
  - **수급자격**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\*
    - \* 차상위 장애·자활근로·본인부담경감·확인서발급대상/ 법정 한부 모지원가구)
    - 경찰청 추천 학교·가정·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·청소년

## 국립공원 탐방인프라/프로그램 확충

환경부 자연공원과 (☎ 044-201-7326)

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,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합니다.

- (국립공원 대피소 판매 물품) 2020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합니다.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, 우의, 아이젠, 스패치, 랜턴, 면장갑, 생수, 화장지 등 10개 품목입니다.
- (무장애 탐방인프라)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\*와 무장애 야영지\*\*를 확충하여, 장애인·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,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.
  - \* (무장애탐방로, 누적) '01년~'18년 37개소, 36.2km → '19년 42개소, 39.3km  
→ '20년 47개소, 45.3km
  - \*\* (무장애야영지, 누적) '05년~'18년 89동 → '19년 104동 → '20년 123동
- (스탬프 투어) 2020년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드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됩니다.

##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(☎ 044-200-5275)

마리나업 등록·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.

-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(2만원), 변경(1만원), 양도·양수·합병(1만원)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,
  -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·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.

## 참고

국회입법예고 시스템>종료된 입법예고>“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 개정안 입법예고 (2018.12.26, 의안번호 2017625)

마리나업 등록 등  
관련 수수료 폐지

- 추진배경 마리나업 등록·변경 등 발생 시 부담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적·금전적 부담 완화 필요
- 주요내용 등록(2만원), 변경(1만원), 양도·양수·합병(1만원)시 발생하던 수수료 폐지
- 시행일 2020년 1월 31일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## 마리나대여업 선박·계류시설 사용(등록)기간 삭제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(☎ 044-200-5275)

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,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됩니다.

-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·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,
  -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·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31일(잠정)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##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(☎ 044-200-5275)

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됩니다.

-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
-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부터(잠정)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정책바다)법령정보>입법예고>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” 개정안 입법예고(2019.11.1.)

### 마리나대여업 선박·계류시설 사용 (등록)기간 삭제

- **추진배경**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
- **주요내용** 3년 이상 선박 사용권 등을 삭제하여 등록 시 관련 사용권이 확보되면 대여업 등록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31일(잠정, 개정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중)

**참고** 국회입법예고 시스템(종료된 입법예고)>“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 개정안 입법예고 (2018.12.26, 의안번호 2017625)

###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

- **추진배경**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와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 부여 필요
- **주요내용** 마리나업 사업자는 입출항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,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
- **시행일** 2020년 7월 중(잠정,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중)

##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

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(☎ 042-481-4894)

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·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앞으로 시·도지사가 지정·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
-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- 시·도지사는 시·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
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>행정정보>법령정보>법령

### 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

- **추진배경** 급격한 산업화·도시화에 의한 근현대문화유산 멸실·훼손 사례 지속 발생, 국가 차원의 급격한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,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관리가 어려운 실정
- **주요내용**
  -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
  -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
  -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
- **시행일** 2019년 12월 25일

##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

문화재청 보존정책과 (☎ 042-481-4835)

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,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>행정정보>법령정보>법령

###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

- **주요내용** 제13조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) ①~② (생략)
-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·예술적·학문적·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. 다만,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-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. <신설>

##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

문화재청 안전기준과 (☎ 042-481-4923)

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.

-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.
  - \* 고미술품 등의 유통·거래를 목적으로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
-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.
  - \*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
  - \* 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→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
-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,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&gt;행정정보&gt;법령정보&gt;법령

문화재매매업  
자격요건 완화

- 추진배경 문화재매매업 제도개선을 통한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확립
-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 
(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)
- 시행일 2020년 5월 27일

##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

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(☎ 042-481-3144)

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·정보·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'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'이 개관합니다.

- 국민 눈 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지식·정보의 나눔과 소통 장인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2020년 1월 중순 개관합니다.
-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디지털문화유산 이해도 제고의 장이 될 것입니다.

디지털 문화유산  
나눔방 개요

- 위치/시설
  - (위치) 국립고궁박물관 1층 / 716.3㎡
  - (시설) 인터랙티브 미디어월, VR·AR 체험존, 몰입형 영상 체험존, 문화유산 여행길, 카페(휴식공간) 등
- 주요기능
  -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문화유산 정보 열람
  -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및 디지털문화유산 강좌 등 운영
  - 전시, 자료 열람 공간과 융화되는 자연스런 휴식 제공
- 시행일 2020년 1월 중순



2020년부터

## 이렇게 달라집니다

Agriculture and Forestry ·  
Marine Products · Food

# 농림·수산·식품

A vibrant green background with a large white circle on the left. In the center, a chef's hat sits atop a pink awning. To the left, a pizza slice, a knife, and a fork are shown. To the right, a bowl of ramen is being held by a hand. Below the chef's hat, there are two yellow fish, two green seaweed stalks, and a small green plant. The entire scene is framed by white clouds at the bottom and top.



## 1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192

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 
공익직불제 시행

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### Before

기존 직불금이 쌀에 편중되어 쌀 수급불균형 심화  
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으며, 대농에 편중되어  
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 미흡하였습니다.



### After

'20년부터 기존 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 
통합·개편되어 운영됩니다.



## 2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193

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시행일 : 2020년 2월(잠정)

### Before

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로  
농업경영안정망 확충하였습니다.

62 품목



· 품목수: '18) 57 → '19) 62

### After

'20년 2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고, 영세농가  
대상 농기계종합보험 국고지원비율은 상향합니다.

67 품목



50% → 70%



## 3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194

###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1월부터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됩니다.



## 4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195

###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학기

#### Before

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~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'19.2학기부터 도입되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비농대생 (3~4학년 재학생)으로 확대합니다.



## 5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196

### 축산물 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는 소·돼지에 한하여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1월 1일부터 소·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.



※ 준수사항 : 돼질 사육현황 신고, 가축 이동신고, 이력번호 신청,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, 이력번호 표시·계시 등

## 6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212

###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

#### Before

'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는 한·중 FTA 여·야·정 합의('15.11)로 '17년부터 '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.



※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 ('12~'16년) 어가당 50만원/년 → ('17) 55 → ('18) 60 → ('19) 65

#### After

여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건부지역 수산직불금이 '20년부터 어가당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

※ 조건부지역 수산직불제 ('19) 65 → ('20) 70

## 7 산림청

자세한 내용은 p.217

###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

시행일 : 2020년 1월 9일

#### Before

'20년부터 교육 분야 국가자격  
'목재교육전문가 제도'가 시행됩니다.



#### After

목재교육 전문과정(176시간) → 자격시험  
→ '목재교육 전문가'

목재교육개론  
(39시간)

목재교육실무  
(88시간)

목재교육방법론  
(41시간)

안전교육  
(8시간)



## 9 산림청

자세한 내용은 p.219

###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

시행일 : 2020년 6월 4일

#### Before

'20년 6월부터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 
보수교육 규정 신설

-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.
- 원형 :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
- 신설 :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
-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.
- 원형 :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
- 신설 :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

#### After



## 8 산림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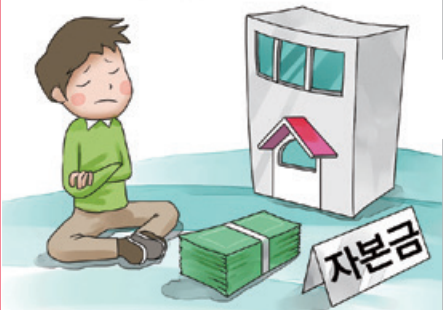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218

###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

시행일 : 2020년 7월 16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자격요건 중 '자본금',  
'사무실'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.



#### After

※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 
○ 인력, 자본금(3천만원이하), 사무실  
⇒ 인력, 사무실(사무기자재 갖춘 주택포함)



• 개정 : 2018년 7월 16일부터 적용 ~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 
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

##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☎ 044-201-1772)

기존 6개의 직불제(쌀고정, 쌀변동, 밭농업, 조건불리, 친환경, 경관보전)가 공익직불제로 통합·개편되어 운영됩니다.

-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,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'기본형 공익직불제(기본직불제)'로 통합하며,
-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.
-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'선택형 공익직불제(선택직불제)'로 개편하며,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**참고*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  
보도자료

###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

- **추진배경** 기존 직불제의 쌀 수급불균형 심화 및 중소농의 소득안정망 미흡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'기본형 공익직불제'로 통합
    -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
  -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'선택형 공익직불제'로 개편
    -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 5월 1일

##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☎ 044-201-1728, 1792)

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

- (농작물재해보험)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5개 품목(팥, 살구, 시금치, 보리, 호두)을 신규도입
  - \* 품목수: ('01) 2개 → ('10) 25 → ('16) 50 → ('18) 57 → ('19) 62 → ('20) 67
- (농기계종합보험) 영세농가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'20년부터 국고 지원 강화
  - \* 국고지원: ('19) 모든농가 50% → ('20) 영세농가 70%, 일반농가 50%

**참고*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

###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

- **추진배경** 자연재해,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험 원리로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
- **주요내용**
  -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(신규 5품목 : 팥, 살구, 시금치, 보리, 호두)
  -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(50% → 70%)
- **시행일** 2020년 2월(잠정, 사업시행지침서 반영)



##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(☎ 044-201-1532)

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됩니다.

-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, 정책자금 지원조건 (거치·상환)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  - 현행 : 최대 3억원, 금리 2%, 3년 거치 7년 상환
  - 개정 : 최대 3억원, 금리 2%, 5년 거치 10년 상환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

###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

- 추진배경 짧은 거치기간(3년)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결
- 주요내용
  -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(최대 3억원, 금리 2%) 지원조건 개선
    - (현행) 3년 거치 7년 상환 → (개정) 5년 거치 10년 상환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(일부 제외)으로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(☎ 044-201-1578)

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(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)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(일부 제외)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~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'19.2학기부터 도입되었으며
- 2020년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비농대생(3~4학년 재학생)까지 확대합니다.
-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,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
  - \*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

###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비농대까지 확대

- 추진배경 농업 전공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의 농업농촌 진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취창업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
- 주요내용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(3~4학년)에서 비농대 재학생(3~4학년)까지 확대
- 시행일 2020년 1학기 (장학금 신청은 '19. 12월 중 실시 예정)

## 축산물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☎ 044-201-2346)

2020년 1월 1일부터 소·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.

- 닭·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,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·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\*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- \* 이력번호 신청, 포장처리 실적, 거래내역 신고, 이력번호 표시·게시 등
- 또한, 닭·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·도축·포장·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.

2020년 1월 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(소, 돼지, 닭, 오리)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며,

- 학교 등 집단급식소, 700㎡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,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(표시·게시)하여야 합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> 축산물이력법(법률 제16114호)

### 닭·오리·계란 이력제 확대 등 축산물이력제 안전성 강화

- 추진배경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
- 주요내용
  - ①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
    - (현행) 국내산 소·돼지, 수입산 소·돼지
    - (개정) 국내산 소·돼지·닭·오리·계란, 수입산 소·돼지
  -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(소, 돼지, 닭, 오리)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
  - ③ 학교 등 집단급식소, 700㎡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,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(표시·게시)
    - (현행) 수입산 소·돼지
    - (개정) 수입산 소·돼지, 국내산 소·돼지·닭·오리·계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(☎ 044-201-1518)

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.

- 현행 : 65세(근거 :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)
- 개정 : 70세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(잠정)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최근제개정법령

###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

-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
  - 대법원은 평균연령·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(19.2.21선고)
- 주요내용
  -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
- 시행일 2020년 7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

##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

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☎ 044-201-1558)

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.

■ 국민 누구나 ‘특정빈집\*’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‘신고’할 수 있습니다.

\* 안전·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

■ 신고된 빈집이 안전·위생·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,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(행정지도)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■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.

- 현행 : <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> 정비명령 → 직권철거  
- 개정 : 공익신고 → 현장조사 → 행정지도 → 정비명령 → 직권철거

■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「농어촌정비법」개정·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최근제개정법령

### 농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

- **추진배경**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
- **주요내용**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‘공익신고 → 빈집조사 → 행정지도’ 절차 마련
- **시행일** 2020년 8월 1일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##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☎ 044-201-1559)

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\*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\*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

- 현행 :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
- 개정 :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

선금(중도금 포함) 융자·대출금\* 상한액이 4,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.

\* 사업대상 토지 등 담보 제공 필요

- 현행 : 3,000만원
- 개정 : 4,000만원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

###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

- **추진배경**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 경감
- **주요내용**
  - (신청조건)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
  - (선금) 융자·대출금 상한액을 4,000만원까지로 확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(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중)

## 농·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

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(☎ 044-201-1410)

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.

- 정책수립, 보조·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(연중 가능)을 하여야 합니다.
-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.
  - 현행 : 유효기간 없음
  - 개정 :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,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보도자료>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

### 경영체등록정보의 유효기간 설정

- 추진배경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(특히, 대도시) 최소화 및 경영정보 현행화(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)
- 주요내용
  -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함
  -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

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(☎ 044-201-1410)

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, 융자·보조금 등(이하 정책자금)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'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\*'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,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  - \* 예) 등록된 경영정보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, 재배품목,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
-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보도자료>2020년 법령개정 보도자료

###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

- 추진배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·농어촌에 관련된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
  -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(☎ 044-201-2352)

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.

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.
  - 앞으로, “친환경”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,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축산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(예정)

###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

- 추진배경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‘유기축산물’로 단일화하고, ‘무항생제축산물 인증’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
- 주요내용
  -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(11개조 신설, 6개조 개정)
  -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(부칙 개정)
  - (이관방향)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,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
- 시행일 2020년 8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(☎ 044-201-2352)

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-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입니다.
  - (잠정안)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
-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(예정)

###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
- 주요내용
  -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(제23조제12항)
    -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
- 시행일 2020년 6월 11일

##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(☎ 044-201-2121)

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.

-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'고령친화식품 표준'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.('19.12)
  - 주요 개정 내용 : ①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②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\* 별도 규정 ③ 표시문안 마련
  - \* 1단계 : 고형의 식품용 분석법 적용, 2~3단계 : 페이스트형 식품용 분석법 적용
-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'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'를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제도시행 보도자료(예정)

###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

- **추진배경**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(KS) 도입 및 실시
- **주요내용**
  -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기존 표준을 개정 및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
  -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인증
  - 인증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(심벌, 단계표시 등)을 제품에 표기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(상반기)

## 김치의 날(11월 22일) 제정(잠정)
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(☎ 044-201-2132)

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·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.

-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(11월)가 모여 22가지(22일)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'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
-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, 김치 페스티벌, 요리경연대회,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,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.

**참고**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(예정)

### 김치의 날 (11월22일) 지정

- **추진배경**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'김치의 날' 지정·홍보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
- **주요내용**
  - 매년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
  -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, 김치 페스티벌,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
- **시행일** 2020년 하반기(잠정, 「김치산업 진흥법」개정안 국회심의중)

##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☎ 044-201-2458)

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, 종합적 대응을 통한 관련 피해 경감 및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한 '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' 사업을 '20년 신규 추진합니다.

- 일몰사업인 '농생명자원산업기술개발' 내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던 작물 보호 분야를 핵심 추진 사업으로 기획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지원 분야 : 작물 바이러스·병해충의 방제, 무병묘 생산기술, 항바이러스제 개발, 진단기기·검사법 개발 등
- 관련 공고는 '20년 1~2월 중에 예정이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개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☎ 044-201-2458)

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·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발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'첨단농기계산업화 기술개발' 사업을 '20년 신규 추진합니다.

- 기존 '첨단생산기술개발' 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,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, 무인·자동생산 기술개발,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지원 분야 :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, 무인·자동화 수확용 농기계, 고효율 농기계·핵심부품 국산화, 여성·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
- 관련 공고는 '20년 1~2월 중에 예정이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

###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

- 추진배경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신·변종 작물 바이러스, 병해충의 증가로 생산성·품질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으로 대응 체계 마련 필요
- 주요내용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방제 기술 개발 등 중점 분야별 연구개발 지원
- 시행일 2020년 1월(공고예정, 1월 말)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

###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 분야 연구 개발 지원

- 추진배경 융복합 기술 기반의 첨단 농작업기 개발을 통해 농업 노동력 감소 등 주요 농업현안 대응 및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 선점
- 주요내용
  - (농기계 산업혁신)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, 생육데이터를 활용한 무인·자동 생산 기술 개발 및 다중 제어 기반 구축
  - (농기계 단기 고도화) 기 개발 기술(농진청 등) 연계 산업화 제품 개발 및 현장 확산,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
- 시행일 2020년 1월(공고예정, 1월 말)

##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☎ 044-201-2458)

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'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' 사업을 '20년 신규 추진합니다.

- 기존 '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'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으로,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수 대학원 설립 및 벤처·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\*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하여 추진
  - 지원분야 : 동물감염병,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(특수대학원)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, 벤처·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지원
- 관련 공고는 '19년 12월 실시 중이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☎ 044-201-2458)

농업·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&D로 해결하기 위한 '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' 사업을 '20년 신규 추진합니다.

-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·농촌 현안 문제를 선별하여,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해결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지원 분야 :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, 농촌 폭염·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, 축산 약취 저감, 농작업 안전관리 등
- 관련 공고는 '20년 1~2월 중 예정이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

###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

- 추진배경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
- 주요내용 현장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필요성·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'농식품부만이 지원할 수 있는' 특화된 인력 양성 사업으로 차별화
- 시행일 2020년 1월(공고, '19.12.19.~'20.1.17.)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

### 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

- 추진배경 농촌 고령화, 농업생산 불리여건 확대, 수급불안정 등 주요 농업·농촌 현안 및 국민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해결 요구 증대
- 주요내용 농업시설·기반 환경, 농촌 생활환경, 농업생산환경 3개 세부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부·청 공동으로 관련 연구 수행 및 지원
- 시행일 2020년 1월(공고예정, 1월 말)



##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(8.28.)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2436~7)

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·인증 사업자 등 관리·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.

- ‘무농약원료가공식품’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\*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·가공·유통되는 식품

-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‘친환경’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(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, 인증의 신뢰도 문제,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인증기관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친환경농어업법

### 친환경농어업법 주요내용

- **주요내용**
  - ① ‘친환경농어업’ 및 ‘유기’의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
  - ② ‘무농약원료가공식품’ 인증제 도입
  - ③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‘친환경’ 문구 표시 제한
  - ④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·감독 강화
  - ⑤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·감독 강화
  - ⑥ 친환경농업 ‘교육훈련기관’ 지정,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
  - ⑦ 회수·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등
- **시행일** 2020년 8월 28일

##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‘친환경농업 기본교육’ 이수 의무화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2436~7)

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‘친환경농업 기본교육’ 이수가 의무화 됩니다.

-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과 정 명	친환경농업 기본교육
교육주기	2년에 1회
교육시간	가)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)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
교육기관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
교육내용	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, 인증기준의 이해,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

- ‘친환경농업 기본교육’ 이수과 관련하여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·사무소)에 문의하면 됩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

### 친환경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도입

- **추진배경**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(‘17.12.)」 후속조치
- **주요내용**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3)

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'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, '17년부터 '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.
  - \* ('12~'16년) 어가당 50만원/년 → ('17) 55 → ('18) 60 → ('19) 65 → ('20) 70
- '20년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.
  - \* 인천 강화군·옹진군, 경기 김포시, 강원 고성군

##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시행

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(☎ 044-200-5261)

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·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(2019~2028)에 따라 각 시·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
-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.
  - 또한,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·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.
- 개정 내용은 2020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·지침 제정 보도자료

###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개요

- **지원목적**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
- **근거법**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('14.10월 제정/'15.4월 시행)
- **신청대상**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

###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

- **관리방향** 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이용
- **주요내용**
  - 해양공간에 대한 공간특성평가, 이용·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(9종) 지정
    - \* 어업, 골재·광물, 에너지개발, 해양관광, 환경·생태계관리, 연구·교육, 군사, 항만·항행, 안전관리
- **시행일**
  - 2020년 수립 예정 : (영해) 경기만, 부산, 경남, 전남, 제주, 울산, 전북, 충남(EEZ) 서남해안, 서해안
  - 2021년 수립 예정 : (영해) 강원, 경북 (EEZ) 동해안

## 원유(原乳) 국가잔류물질검사(NRP) 제도 도입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 043-719-3245)  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(☎ 044-201-2978)

원유(原乳 시중 유통·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)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.

-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  - 현행 : 집유장(책임수의사) 상시검사
  - 개정 : 집유장(책임수의사) 상시검사 + 국가잔류물질검사(시·도 검사기관)
- '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\*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'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.
  - \* 「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·농식품부 공동 고시) 제정('19.12.)

원유 국가 잔류물질  
검사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
- 주요내용
  -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
    - 현행 : 집유장(책임수의사) 상시검사
    - 개정 : 집유장(책임수의사) 상시검사 + 국가잔류물질검사(시·도 검사기관)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

## 계란 냉장유통 지원(차량구입비) 사업 실시

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☎ 043-719-3259)

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사업예산 : 18.75억원(자치단체 자본보조)
- 사업내용 :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25백만원)의 60% 지원(최대 1,500만원 한도, 국비 30%·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  - \*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 공고 예정

계란 냉장차량 지원  
(차량구입비) 사업

- 추진배경 계란 냉장유통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
- 주요내용
  - 대상 :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(지원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)
  - 예산 : 18.75억원(자치단체 자본보조)
  - 내용 :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(최대 25백만원)의 60% 지원(최대 1,500만원 한도,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- 시행일 2020년 1월 (공고 예정)

## 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

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(☎ 043-719-6259)

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는 수입김치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.

■ 2020년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\* 수입김치 수입량(톤) : ('16) 254,911 → ('17) 276,454 → ('18) 294,003

\*\* 유통단계별 보관온도, 청결상태 및 수거검사 등 유통실태 조사

■ 아울러,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.

\* 해외제조업소 HACCP도입 → 수입통관단계 검사 → 유통 구조 개선

###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 사업

- **추진배경**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 추진
- **주요내용**
  - 수입김치의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실태 조사 실시
  - 수입김치 안전성검사 및 현지 제조업소 HACCP기술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~ 12월

##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

산림청 목재산업과 (☎ 042-481-8875)

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,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 '목재교육전문가 제도'가 시행됩니다.

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.

-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추후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민간자격증 보유자,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, 목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, 교육 시설에서 목재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.

### 목재교육전문가 제도

- **추진배경**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격
- **주요내용**
  -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강해야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의, 실습 시간으로 구분
  - 목재교육개론(39시간), 목재교육실무(88시간), 목재교육방법론(41)시간 및 응급처치교육(8시간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9일

##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☎ 042-481-1841)

숲해설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기준은 삭제하고 시설기준인 사무실 기준은 사무시설을 갖춘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.

- 산림치유업, 숲해설업, 유아숲교육업, 숲길등산지도업의 자본금 1천만원 기준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본금 3천만원 기준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.
-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「건축법」상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만 허용이 되었으나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전문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.

##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
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(☎ 042-481-4076)

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,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-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.
  - 현행 :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
  - 신설 :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

또한,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
-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.
  - 현행 :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
  - 신설 :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

-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>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>공지사항

###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시 자격요건 중 '자본금', '사무실' 마련 등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및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준 완화
- 주요내용
  -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규정 삭제
  -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
- 시행일 2019년 7월 16일

참고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 법령

###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

- 추진배경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
  - 나무의사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
- 시행일 2020년 6월 4일(국무회의 의결 대기 중)

##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☎ 042-481-1841)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기준을 산림복지전문가를 보유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.

-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시설별 인력기준에 맞추어 산림복지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나, 해당 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2020년 새로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와 이미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 합니다.

**참고**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>서비스제공자

###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완화

- **추진배경**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기준 완화 필요
- **주요내용**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시 자격요건 중 인력기준을 해당시설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
- **시행일** 2019년 7월 16일

##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

산림청 산사태방지와 (☎ 042-481-8844)

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.

-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,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, 과학원, 민간전문가,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.
  -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, 연 2회 이상 현장점검,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.
-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에 따라 반영 될 예정입니다(2020년 초).

###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 기준 마련

- **추진배경**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
    - 법적근거 : 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7항
    - 개선 :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 시 판정표 및 해제 절차 신설
- **시행일** 2020년 초



##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☎ 042-481-8844)

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.

- 산사태(토석류)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.
  -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(인가 수, 사면경사, 모암 등)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.
- 개정내용은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(2020년 초).

###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

- 추진배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
- 주요내용
  - 종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기초조사,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
  -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
- 시행일 2020년 초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

Environment · Weather

## 환경·기상



## 1 환경부

자세한 내용은 p.227

### 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

#### Before

환경부는 '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'21년까지 반도체, 알콜음료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
(19.1.1.부터)  
석유정제, 무기·정밀화학  
비료, 질소화합물 제조

(18.1.1.부터)  
철강, 비철, 유기화학

(17.1.1.부터)  
발전, 소각, 중금속

인허가 절차 간소화

맞춤형  
기준 적용

#### After

'20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·종이 및 판지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.

(20.1.1.부터)  
펄프,  
종이,  
전자제품

통합환경  
관리제도  
적용

• (21.1.1.부터) 플라스틱, 섬유, 알콜, 도축, 자동차부품, 반도체 등

## 2 환경부

자세한 내용은 p.228

###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

시행일 : 2020년 4월 3일

#### Before

'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, 자동차,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.

- (대기관리권역 확대)  
수도권 외 중부권·남부권·동남권 권역(총 77개 특·광역시 및 시·군)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
- (사업장 총량관리제)  
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
- (기타 배출원 관리)  
△노후 경유차(5등급)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, △항만·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, △친환경 가정을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

#### After



## 3 환경부

자세한 내용은 p.229

###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부터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에서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됩니다.

-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함
-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
-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(TOC)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

- 시행일 이전에 설치·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
  -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,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
  -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
  -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

#### After



## 4 환경부

자세한 내용은 p.230

###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

시행일 : 2019년 10월 29일

#### Before

기존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19년 10월부터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,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.



## 5 해양수산부

자세한 내용은 p.251

###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

시행일 : 2020년 9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
구분		경유	종유A	종유B	종유C	
항 함유량 (%)	현행	국내 0.05	국제 1.0	2.0	3.0	3.5

#### After

'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(황산화물 등)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

구분	경유	종유A	종유B	종유C
항 함유량 (%)	개정	국내 0.05	국제 0.5 (20.1~)	

•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·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.

## 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

환경부 통합허가제도와 ☎ 044-201-6717)

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·종이 및 판지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됩니다.

-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,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
-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, 알콜음료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
#### 참고

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1]  
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ieps.nier.go.kr>)

####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 계획

-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
- 주요내용 ① 10개 개별허가 → 1개 통합허가  
② 획일적 기준 적용 →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
-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



##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

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(☎ 044-201-7582)

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, 자동차,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.

- 첫째, 수도권 외에 중부권, 남부권,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,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.
- 둘째,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,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셋째, 노후 경유차(5등급)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, 항만·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,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.
-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.

참고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('19.11.6)

###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

- **추진배경**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
- **주요내용**
  - (대기관리권역 확대) 수도권 외 중부권·남부권·동남권 권역(총 77개 특·광역시 및 시·군)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
  - (사업장 총량관리제)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,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
  - (기타 배출원 관리) △노후 경유차(5등급)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, △항만·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, △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
- **시행일** 2020년 4월 3일

##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
환경부 수질관리과 (☎ 044-201-7067)

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에서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됩니다.

-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되며,
-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,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(TOC) 측정기기를 갖춰야 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됩니다.

참고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
###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
- **추진배경** 수질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
- **주요내용**
  -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함
  -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
  -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(TOC)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  -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설치·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
    -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,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
    -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
    -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

##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367)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(19.10.29 시행)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△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, △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됩니다.

- 따라서, 치매,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.
-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,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하며, 냉장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됩니다.
- 다만, 제도 시행일(19.10.29) 이후라도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(19.10.29 이전 계약에 한함)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환경정책>자원순환>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

### 일회용기저귀의 분류체계 개편

- **추진배경**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통한 안정적 의료폐기물 처리도모
- **주요내용**
  - ①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등의 것, 혈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, 그 외에는 '사업장생활계폐기물'로 분류
  -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안전한 처리방안 신설
- **시행일**
  - 19.10.29부터 시행하되, 경과규정\*을 두어 현장혼선 최소화
  - 19.12.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
  - 19.12.31 이후라도,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(19.10.29 이전 계약에 한함) 종료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 할 수 있음

##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

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권립추진단 (☎ 044-201-7259)

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'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입니다.

- 야생동물과 사람,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(인수공통감염병\*)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, 사람-가축-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
  - \*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(SFTS, 진드기 매개질환), 중동 호흡기 증후군(MERS, 메르스, 중동지역 낙타 등 매개) 등
-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.
  - 조류독감(AI)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,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,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.

###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

- **추진배경**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 설치
- **위 치**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
- **규 모** 부지 17,255㎡(건축면적 6,300㎡), 지상3층/지하1층
- **주요내용**
  - 조류독감(AI)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사·진단, 조사·연구, 질병대응 기술개발
  - 야생동물-사람-가축 간 상호작용하는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
  - 야생동물 질병 발생 등에 따른 행정권 집행
- **개 원** 2020년(예정)

##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·시행

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(☎ 044-201-7222)

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·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, 생태계 서비스 보전·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
- ‘생태계서비스’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·조절·문화·지지서비스로 구분하며,
  - ※ (공급) 식량, 수자원, 목재 등 (조절) 대기 정화, 탄소 흡수, 기후 조절, 재해 방지 등 (문화) 생태 관광, 경관, 휴양 등, (지지) 토양 형성, 서식지 제공, 물질 순환 등
-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·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- 특히, ‘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’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, 국립공원,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·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,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  - 이에 따라, 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, 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
  - 자연자원의 훼손이 줄어들고, 깨끗한 공기·물 제공, 자연자산의 유지·관리, 친환경농업, 습지의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###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·시행

- **목적** 생태계서비스 개념 정의 및 조사·평가를 통한 정량화, 생태계서비스 보전·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
- **주요내용**
  - (정의·원칙)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·조절·문화·지지서비스로 구분, 생태계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·증진되어야 함
  - (평가)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
  - (생태계서비스지불체계약) 주요 보호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·증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
- **시행일** 2020년 6월

##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

환경부 생물다양성과 (☎ 044-201-7251)

건축물·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'20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.

- 연간 약 800만 마리,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
-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.
  -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,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(스티커, 테이프 등)을 5×10 규칙\*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.
  - \* 5×10 규칙 :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,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('19.3.14)'



##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

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(☎ 044-201-6711)

2020년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·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, 우수재활용제품(GR인증)만 해당되었습니다.
-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, 해당 제품 제조·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참고**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
###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

- **추진배경** 저탄소제품의 생산·소비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- **주요내용** ①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(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)  
②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(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)
- **시행일** 2020년 하반기(2020년 상반기 공포 예정,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)

##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

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(☎ 044-201-6714)

2020년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.

-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%를 감면해 드립니다.
- 그간 시군구 전화·팩스·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(위택스, 이택스(서울시))에서도 가능해집니다.

**참고**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환경개선비용부담법

###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

- **추진배경**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증진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
- **주요내용** ① 국민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추가  
• (기존) 3.16~3.31  
• (변경) 1.16~1.31(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), 3.16~3.31  
② 위택스(서울은 이택스)에서 일시납부 신청 기간 : 1.16~1.31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6일

##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

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(☎ 044-201-6890)

「대기환경보전법」(개정'19.4.2.)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
-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이며,
-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%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·임차하여야 하며,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다만, 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·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18-175)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**참고**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대기환경보전법

### 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시행

- **추진배경**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
- **주요내용**
  - 저공해차 의무구매·임차제도 '20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
  - 저공해차 의무구매·임차비용 상향 조정 : '19년 70% → '20년 100%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

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03)

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됩니다.

-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여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,
  -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·개정 의결

###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

- **추진배경**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핵심 배출원 중 하나인 대형 사업장의 정보 공개와 감시필요성이 커짐
- **주요내용**
  -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, 전산망에 실시간 공개
- **시행일** 2020년 4월 3일

##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

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06)

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% 강화되며, '크롬 및 그 화합물'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% 강화됩니다.

■ 벤조(a)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, 도심 빌딩의 123만 8,000kCal/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

###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

- **추진배경**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배출허용기준 30% 이상 강화
  -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
  - 도서 발전시설, 흡수식 냉난방기기, 동물화장시설 대기배출시설로 관리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

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06)

'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.

■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'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%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,490원을 부과합니다.

※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% 이상일 경우 1kg 당 1,810원을,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% 이상일 경우 1kg 당 2,130원을 부과

■ 한편, '20.1.1.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이 경우 '20.12.31.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,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%, 부과단가는 1kg당 2,130원이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

###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

- **추진배경**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
- **주요내용**
  -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
    - '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%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,490원 부과
    - '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% 이상일 경우 1kg 당 1,810원 부과
    - '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% 이상일 경우 1kg 당 2,130원 부과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

환경부 교통환경과(☎ 044-201-6933)

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'20년부터 3.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
-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,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, 조기폐차 시 70%(1단계) 보조금을 지급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% (2단계)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.
-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예정이며,
- 개정 내용은 '20년 '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'에 반영되어,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.

##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

- **추진배경** 조기폐차 후 경유차의 재구매를 억제하고,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지급 도입 예정
- **주요내용**
  - 현행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조기폐차 시 70% 지급(1단계),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구매 시 30% 추가 지급(2단계)으로 개선
- **시행일** 2020년 1월1일

##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

환경부 기후전략과 (☎ 044-201-6647)

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(18.7)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.

-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(투명성·적시성·책임성·환류)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.
  - 평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부문별 배출목표와 실제 배출실적을 비교하는 종합평가 형태로 추진됩니다.
-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·확정하여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국민들께 공개합니다.

참고 환경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

##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

- **추진배경**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매년 이행점검 실시
- **주요내용**
  - 국조실,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감축실적 분석·평가
  -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·확정
  - 평가결과에 따라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, 대국민 공개
- **시행일** 2020년부터 매년 실시

##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

환경부 물이용기획과 (☎ 044-201-7116)

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.

-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됩니다.
-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·신고,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.
- 지침의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홈페이지 >사전정보공표>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

###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

- **추진배경**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주민 및 지자체·환경청의 개정수요 반영
- **주요내용**
  - 농기계 유지관리비 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
  -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
    -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·신고,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 개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 (☎ 044-201-7180)

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.

-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  - 종전 : ① 보유·대여한 시설·장비,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·기기 또는 비품,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,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⑤ 보유 현금, ⑥ 임차 사무실·창고 등의 보증금
  - 개선 : “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” 추가
-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환경법령>고시/훈령/예규

### 지하수개발·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개선

- **추진배경** 지하수 개발·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
- **주요내용**
  -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 시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
- **시행일** 2019년 11월 12일

##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

환경부 수생태보전과 (☎ 044-201-7049)

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·시행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습니다.
- 2020년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·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,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물환경보전법

###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

- **추진배경**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신뢰도 향상
- **주요내용**
  -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·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함
  - ②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, 5년마다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
  -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·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를 제공하여야 함
  - ④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에 벌칙 부과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- **시행일** 2020년 10월 17일  
※ 성능검사 항목, 기준, 방법,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중

##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제도 도입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☎ 044-201-7010)

가축분 퇴비를 부속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·시행됩니다.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,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참고로 검사기준은 1,500㎡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, 1,500㎡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속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
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###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

- **추진배경** 퇴비 부속을 통한 퇴비 품질 향상 및 환경 영향 저감 등
- **주요내용**
  - (검사대상) 가축분뇨법 상 허가·신고 대상자(신고규모 미만 제외) 및 재활용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업체
  - (검사기준) 1,500㎡미만 배출시설 : 부속중기, 1,500㎡이상 배출시설, 분뇨처리업체 :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
  - (검사주기)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, 신고규모 배출 시설은 연 1회  
\* (검사기관)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민간시험기관 등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25일  
※ 세부사항은 「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참조



## 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

환경부 물산업협력과 (☎ 044-201-7632)

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‘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’가 시작됩니다.

-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, 해당기업의 R&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.
  - 「물산업진흥법」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‘혁신형물기업’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.
  -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,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'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, 지원기업 신청·공모는 '20년 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최근 제 개정법령>물산업진흥법

### 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 실시

- **추진배경** 확대되는 세계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경쟁우위가 가능한 유망 중소 물기업을 선정,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기업 지원제도를 도입
  -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혁신형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

환경부 수자원관리과 (☎ 044-201-7652)

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.

-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·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,
-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(일 최대사용량 × 365일)로 산정하여,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\*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  - \* (예) 1~3월에는 일 최대 1,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,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
-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,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

###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

- **추진배경**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(일 최대사용량 × 365일)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 산정·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
  - **주요내용**
    -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(연 단위 산정 → 기간별 산정)
- (예) 일 최대 1,000톤(1~3월), 100톤(그 외 기간)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

  - 현행 : 1,000톤 × 365일 × 52.7원(단가) = 약 19백만원 납부
  - 개선 : (1,000톤 × 90일) + (100톤 × 270일) × 52.7원(단가) = 약 6백만원 납부

•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
환경부 생활환경과 (☎ 044-201-6798)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개정('19.4.2 공포, '20.4.3 시행)에 따라 '20년부터 도시철도·철도·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.

-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,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.

현 행 (환경부고시)	개 정 안 (환경부령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세먼지(PM-10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하철 20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, 철도·시외버스 15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</li> </ul> </li> <li>이산화탄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혼잡시 2,500ppm, 비혼잡시 2,000ppm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미세먼지(PM-2.5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<math>\mu\text{g}/\text{m}^3</math>(차종 구분 없음)</li> </ul> </li> <li>이산화탄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행과 같음</li> </ul> </li> </ul>

-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.

-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' 보도자료

###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
- **추진배경**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
- **주요내용**
  -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
  -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(측정주기, 측정항목, 측정대상 차량 등) 규정
- **시행일** 2020년 4월 3일

##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확대

환경부 생활환경과 (☎ 044-201-6801)

'20년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며,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주었으나, '20년부터는 소규모 창고·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.
  - 지원내용으로는 1동당 주택 철거 : 최대 344만원, 지붕개량 : 최대 427만원. 비주택 철거 : 최대 172만원 입니다.
-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·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개량 지원

- **추진배경**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개량 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①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·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
  - ②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하며, 동당 최대 427만원 지원
  - ③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172만원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  - \* 사업 신청은 관할 시·군·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

##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
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(☎ 044-201-6782)

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(우리나라 '14.9 서명)」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,

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(이하, 잔류성물질법)」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

■ 이에 따라,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(8종) 생산을 위한 '수은' 및 '수은화합물'은 제조·수출입·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.

〈수은첨가제품 8종〉

① 전지, ② 일반조명용 형광램프, ③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, ④ 스위치와 계전기, ⑤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, ⑥ 화장품, ⑦ 살생물제, ⑧ 비전자 계측기기(기압계, 습도계, 압력계, 온도계, 체온계, 혈압계)

■ 또한,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

-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참고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미나마타협약 비준 보도자료

### 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

- 추진배경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
- 주요내용
  - (용도관리) 협약에 따른 수은첨가제품(8종)의 제조·수출입을 위해 수은, 수은화합물 제조·수출입·사용 금지
  - (수출 승인)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은 수출 90일 전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
    - 환경청은 환경부를 통해 수입국에 수출을 통보하고 수입 동의여부(서면)에 따라 수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회신
- 시행일 2020년 2월 20일

##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(☎ 044-200-5289) | 해사산업기술과 (☎ 044-200-5834)

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‘20.1.1.)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

■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(‘20.1)됩니다.

- 현행 : 유종에 따라 0.05%(국내용 경유) ~ 최대 3.5%(중유 C)
- 개정 : 최대 0.5%(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.05%)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다만,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·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.

【해역·유종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비교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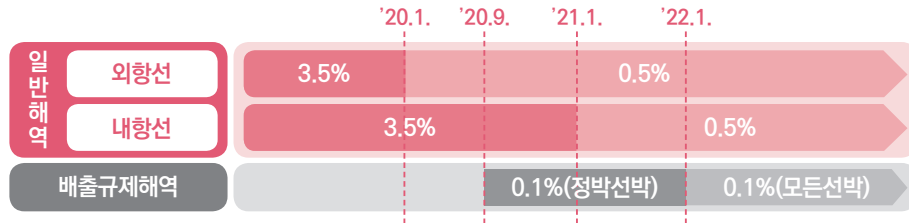
구 분		경 유		중유-A	중유-B	중유-C
황함유량 (%)	현행	(국내) 0.05	(국제) 1.0	2.0	3.0	3.5
		II	↓		↓	
	개정	0.05	(국제) 0.5 (‘20.1.~)		(국내) 0.5 (‘21.1.~)	

참고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뉴스>보도자료>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(2019.6.25.)

■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(0.1%)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(‘20.9)합니다.

- 부산, 인천, 여수·광양, 울산, 평택·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·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.
- 현행 :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.5%(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.5%)
- 개정 :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.1%
-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·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황 함유량별 적용시기\*



- (외항선박) '20.1.1.부터 0.5% 적용
- (내항선박) '21년도 해당선박의 검사일부터 0.5% 적용
- (배출규제해역) 1단계('20.9.1.) 정박·계류시, 2단계('22.1.1.) 해역 진입시 0.1% 적용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바다>법령정보>행정예고>“항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” 제정안 행정예고 (2019.8.28.)

■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('20.1)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.

■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
-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\*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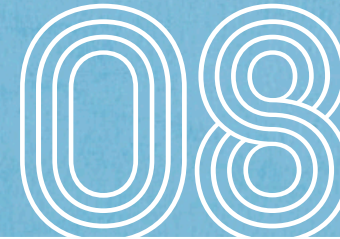
\*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(약 1,200대 규모)

**참고**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바다>법령정보>입법예고>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 제정안 재입법예고(2019.11.19.)

###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

- 추진배경 항만미세먼지 저감
- 주요내용 및 시행일
  -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(2020년 1월)
  -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(2020년 9월)
  -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(2020년 1월)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

Industry ·  
Small and medium industry ·  
Energy

##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




##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자세한 내용은 p.256

###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

시행일 : 2020년 1월 14일

#### Before

'20년 1월 14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(Windows) 7 기술지원이 종료됩니다.

- 마이크로소프트(MS)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
  -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 발생 가능
- 피해예방을 위해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,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권장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)은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바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
- 교체 가능한 운영체제 :
  - 하모니카OS, 구름OS, 레드햇(Red Hat), 센토OS (CentOS), 페도라(fedora), 타이젠(TIZEN), 우분투(ubuntu), 리눅스민트(LinuxMint) 등

#### After



## 3 공정거래위원회

자세한 내용은 p.274

###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

시행일 : 2020년 5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공사가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더라도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주는 경우는 적었습니다.



하도급자 원사업자 발주자

#### After

'20년부터 원·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합니다.



하도급자 원사업자 발주자

## 2 중소벤처기업부

자세한 내용은 p.270

###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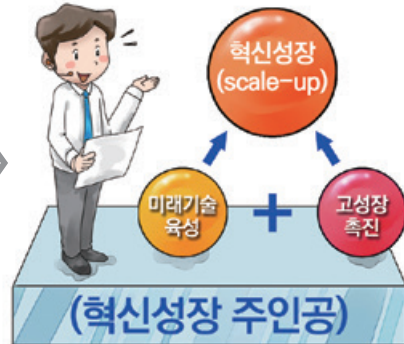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부터 혁신·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'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'을 신설합니다.

- 지원대상 : (미래기술육성)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~10년 기업 (고성장촉진) 기술성·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~10년 기업
- 대출한도 :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10억원 이내)
- 대출기간 : 운전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사실 10년(거치기간 4년 포함)
- 대출금리 : (업력 7년이상) 정책자금 기준금리, (업력 7년미만) 정책자금 기준금리△0.2%p

#### After



##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(☎ 044-202-6461)

2020년 1월 14일 부터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(Windows) 7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.

-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, 랜섬웨어 감염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\*하거나 상위 버전(윈도우 10)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.  
\* 교체 가능한 운영체제 : 하모니카OS, 구름OS, 레드햇(Red Hat), 센트OS (CentOS), 페도라(fedora), 타이젠 (TIZEN), 우분투(ubuntu), 리눅스민트(LinuxMint) 등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)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

참고 보호나라 홈페이지(www.boho.or.kr)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

윈도우(Windows) 7  
기술지원 종료

- **주요내용**
  - 마이크로소프트(MS)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우(Windows)7 기술지원 종료
    -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위협 발생 가능
  - 피해예방을 위해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권장
  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인터넷진흥원)은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4일

##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, 합병 근거 마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(☎ 044-202-6451)

공공분야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'보안관제 전문기업'들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양수·양도나 합병이 가능해 졌습니다.

-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사업 양수·양도나 합병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현행 : 관련 근거 없음
  - 개정 :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·합병 절차기준 신설('19.8.9)
- 다만,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·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
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&gt;업무안내&gt;법령정보&gt;훈령·예규·고시&gt;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

보안관제 전문기업  
양도·양수, 합병 가능

- **추진배경**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·양수, 합병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규정이 없어, 기업 간 결합 및 사업규모 확대 등 곤란
  - 조달청·발주기관 등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기업 간 양도·합병 등에 대해 계약변경(전문기업 지위승계) 승인 사례가 없음
- **주요내용**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·합병 절차기준 신설
  - 전문기업 간 : 양도·합병 신청서류 확인 후 전문기업 지위승계
  - 전문·비전문기업 간 : 양도·합병 신청 시,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과 동일한 절차(서류 및 현장심사 등)를 거쳐 전문기업 지위승계
- **시행일** 2019년 8월 9일



##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☎ 044-201-2458)

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·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'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' 사업을 '20년 신규 추진합니다.

-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.
  - 지원 분야: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,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, 목재펠릿 보일러 성능고도화, 열·전기·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
- 관련 공고는 '20년 1~2월 중 예정이며, 농림축산식품부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&D 사업 실시

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(☎ 043-870-5502)

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&D 사업(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)을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합니다.

-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아울러,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성능·안전성 개선도 지원합니다.
- 이렇게 융합신제품의 적기 시장출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

###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 소비 연구개발 지원

- 추진배경 농산업 현장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에너지 생산·소비 모델을 마련하여 현장에 확산
- 주요내용
  - 지열, 태양열(광) 등을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형 모델 생산·소비 기술 개발
  - 농촌에서 생산된 다양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저장·관리기술 개발
- 시행일 2020년 1월(공고예정, 1월 말)

###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

- 추진배경 규제 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의 기술·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서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
- 주요내용
  -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
  -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기준 개발 지원
  -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·안전성 개선 지원
- 시행일 2020년 1월

##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

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(☎ 044-203-4094)

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.

-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연구개발업,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또한, 국내복귀기업은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·임차할 수 있고,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, 국가·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#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

- **추진배경**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
- **주요내용**
  - 국내복귀 대상업종(현행) 제조업(개정) 제조업 + 지식서비스산업·정보통신업
  -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(수의계약, 장기임대, 임대료 산정 및 감면)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1일

##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

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(☎ 044-203-5881)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확대됩니다.

- 무역위원회는 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·판정하고, 제재조치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.
-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2020년 6월 10일부터는 조사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.
  - 현행 :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
  - 개정 :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

**참고** 무역위원회 홈페이지>정보·자료>무역구제법령

###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기간 변경

- **추진배경**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변경
- **주요내용**
  -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을 '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'에서 '2년 이내'로 변경
- **시행일** 2020년 6월 10일

##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

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(☎ 044-203-5237)

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‘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자’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.

-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 사업자,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
  - 만약,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**참고**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업무마당>최근개정법령

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

- **추진배경** 액화천연가스(LNG, -162℃)를 천연가스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(Cold Energy)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
- **주요내용**
  -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
  - 냉열이용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제한적 처분
  - 가스공사는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중지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0일('19.12.10. 공포,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)

## 혁신조달플랫폼 구축

조달청 혁신조달과 (☎ 042-724-7347)

조달청은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·실현하는 ‘공공구매조달 혁신’을 뒷받침하기 위해 ‘공공혁신조달 플랫폼’을 '20년부터 구축·운영합니다.

- 기존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계약한 상품·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·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  - \* (예) 다수공급자계약(MAS)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
-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한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.
-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·거래를 지원합니다.
  -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·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▲혁신에 대한 수요·공급 커뮤니티, ▲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 조사 통합운영, ▲혁신제품전용몰, ▲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됩니다.
  - ① 먼저, 혁신조달에 대한 ‘의견제시’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,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합니다.
    - 또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(R&D)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합니다.
    - 통합창구를 통해 수요 제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수요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.
  - ② 다음으로,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&D제품,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, 신제품(NEP)·신기술(NET)·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,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·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.

-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, 인공지능(AI)을 도입하여 비교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달의 '구글'로 만들어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하고자 합니다.

③ 마지막으로,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\*, 경쟁적 대화방식\*\* 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\*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익계약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고 수요기관의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

\*\*과업규격을 발주자가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과업규격에 반영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혁신조달플랫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종합쇼핑몰은 상용품·규격화된 제품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·거래에 어려움 존재</li> <li>•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 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부재 → 정부기관과 업체 모두 수요탐색, 제품탐색에 상당한 기간 소요</li> <li>• 종합쇼핑몰, 벤처나라, 나라장터 등 개별적인 시스템을 각각 검색하여 정보획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달청이 단가계약하는 기존 쇼핑몰 형태가 아닌 열린장터(Open Market) 형태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혁신조달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·판매할 수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</li> <li>- 정부기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향상된 제품·솔루션을 쉽게 비교 검색하여 구매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•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정부부처의 한 단계 높은 수요제시 → 제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은 제품·솔루션을 개발 → 특허거래전문가 등 전문가pool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으로 정보비대칭 해소하여 수요와 공급간 신속한 매칭 지원</li> <li>• 인공지능(AI)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종합쇼핑몰, 벤처나라,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, 업체 정보, 입찰공고 내용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</li> </ul>	조달청 혁신조달과 (042-724-7347)

##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

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(☎ 02-2079-6983)

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(주관: 방사청)와 보안감사(주관: 국방부)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,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'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'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
\* 관련근거 :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2조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)

■ '20년,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.

- '20.1월,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'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'을 개정할 예정이며, '통합 실태조사'를 위한 '자가진단표'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■ '21년 이후 「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」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'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.

\* "통합 실태조사 점수" 및 "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표창" 항목을 신설할 예정

###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
- 주요내용
  - ①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
  - ② 통합실태조사 결과를 「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」에 반영
- 시행일 2020년 2월

##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개선

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(☎ 02-2079-6932)

방위사업청에서는 1974년 이후 45년만에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.

-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유인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개선하였습니다.
-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(13개 → 6개)하고,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  - 특히, 국산화부품 사용 시 체계업체 이윤 상향(3% → 10%)과 중소기업 외주가공시 이윤 상향(4% → 10%)을 하였으며, 원가부정 시 과도한 이윤 환수 제도 등을 폐지하였습니다.
- 업체의 자율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해 원가자료의 「성실성 추정원칙」을 도입하였습니다.
  - 방산업체가 책임성, 신뢰성,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의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예정가격 결정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였습니다.

- 참고**
1.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
  2.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
  3.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
  4.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

###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

- **추진배경**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, 방산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임
- **주요내용**
  -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및 수출·R&D투자 활성화, 이윤제도 등 개선
  - 원가자료 '성실성 추정' 도입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  - \* 「방산원가구조 개선」의 제도 운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
  - \* 「원가자료 성실성 추정」의 제도 운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

## 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 신설

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(☎ 02-2079-6958) |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/통계팀 (☎ 02-3270-6033)

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 및 사용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.

-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는 「하도급법」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「표준하도급계약서」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
  - 특히, 계약형태별(확정/정산)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,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“사용지침”에 담았습니다.
-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(계약)에 적용되며,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(권고사항)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**참고**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>방산정보>업무서식

###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 신설

- **추진배경**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
- **주요내용**
  -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
  - 계약형태별(확정/정산)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(사용지침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  - \* 「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」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(권고사항)

## 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심사 감점 방안 마련

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(☎ 02-2079-6927)

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점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
-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적용합니다.
  - 또한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.

집행정지 기간 중  
적격심사 감점  
방안 마련

- **추진배경** 집행정지 남용으로 인한 적격심사의 실효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기간 중 감점 방안 마련
- **주요내용**
  -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
  -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
- **시행일** 2019년 11월 28일

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 
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

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 (☎ 02-2079-6326)

민간분야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(TRA\*) 제도를 개선합니다.

\*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

- 기술성숙도평가(TRA)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,
- 기존에는 국과연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,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국가보유기술이 국방분야에 최대한 활용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.

**참고**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알림·소식>보도·해명자료>보도자료>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

민간 분야 국방  
참여 확대 및 국내  
기술협력 강화

- **추진배경**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, 국내 연구개발,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**주요내용**
  - 국방기술을 국과연,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
- **시행일** 2019년 12월 24일



##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
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☎ 042-481-4382

혁신·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'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'(6,000억원)을 신설합니다.

■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【 미래기술육성, 고성장촉진 지원 대상 】

구분	지 원 대 상
미래기술육성	혁신인프라 및 3대 신산업, 8대 선도사업 등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에 영위 중인 업력 3년~10년미만 중소기업 * 혁신 인프라 분야 : Data-AI-5G 등 핵심 인프라, 산업간 연결·융합 촉진 * 3대 신산업 분야 : 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 등 경쟁력이 높은 핵심분야 * 혁신성장 공동기준 : 9테마, 45분야, 300품목
고성장촉진	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~10년 미만,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*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% 이상 증가한 기업(지방 소재기업은 15%), 3년 연속 고용이 증가한 기업,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%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 기업 * 경영혁신형 기업, 기술혁신형 기업, 신기술(NET-NEP) 인증기업, 정부 창업양성 사업(TIPS, 청년창업사관학교)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■ 동 자금은 중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,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, 시설자금 10년으로 운용됩니다.

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법령정보>공고>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미래기술육성·  
고성장촉진자금  
신설

- **주요내용**
  - 지원대상 : (미래기술육성) 혁신성장 및 미래기술 분야 영위 중인 업력 3~10년 기업
  - (고성장촉진) 기술성·사업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~10년 기업
  - 대출한도 :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10억원 이내)
  - 대출기간 : 운전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 10년(거치기간 4년 포함)
  - 대출금리 : (업력 7년이상) 정책자금 기준금리, (업력7년미만) 정책자금 기준금리△0.2%p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「벤처투자 촉진법」 제정 및 시행

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☎ 042-481-1643

벤처투자에 관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.

■ 현재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.

■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'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\*)'을 도입합니다.

\*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: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

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집니다.

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(자본금 + 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) 기준으로 조정합니다.

■ 제정내용은 2020년 6월 이후(잠정, 국회 본회의 계류중) 적용됩니다.

벤처투자 촉진법  
제정 및 시행

- **추진배경** 벤처투자 제도의 일원화 및 벤처투자 산업의 종합적·체계적 육성
- **주요내용**
  -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
  -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'조건부지분인수계약' 도입
  - 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변경
  -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
- **시행일** 2020년 6월 이후(잠정, 국회 본회의 계류중)

##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(☎ 042-481-1688)

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.

- 동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, 창업교육,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- 지원대상 : 예비창업자('20년부터 40세 이상 중장년층 포함)
  - 지원대상(규모) : 일반, 소셜벤처, 여성, 4차산업 등 1,700명
- 개선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「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」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예비창업패키지  
지원대상  
전 연령층으로 확대

- 추진배경 40세 이상(중장년층)의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
- 주요내용
  - 지원대상을 기존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에서 중장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으로 확대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 설치·운영(신규)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(☎ 042-481-4523)

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'20년부터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 설치를 통해 운영됩니다.

- 그동안 4차 산업혁명, 수축사회 진입에 따라 대기업 중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.
  -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「글로벌 창업사관학교」를 설치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.
    -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, 글로벌 제품 출시, 투자유치 등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.
    - 아울러 정책지원(정책자금\* 등 연계) 사업예산 확대 및 Fast Track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.
- \* 정책자금(중진공 운영) 실적: ('16년) 118억원 → ('17년) 311억원 → ('18년) 545억원

글로벌  
창업사관학교  
개요

- 추진배경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
- 지원규모 50개사('20년 예산(안) 108억원)
- 주요내용
  - 국내외 글로벌 창업기관 교육 및 코칭, 제품·디자인 현지화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, 현지법인 설립 등 글로벌화 지원
  - \*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 : 최대 2억원(총 사업비의 70% 이내)
- 시행일 2020년 2월(예정)

##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☎ 044-200-4584

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, 원사업자는 그 내용·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.

- 즉,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.
  - 현행 :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
  - 개정 :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
- 또한,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됩니다.
  - 현행 :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
  - 개정 :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
-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  -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하도급법개정안 통과 보도참고자료('19.10.31.)

###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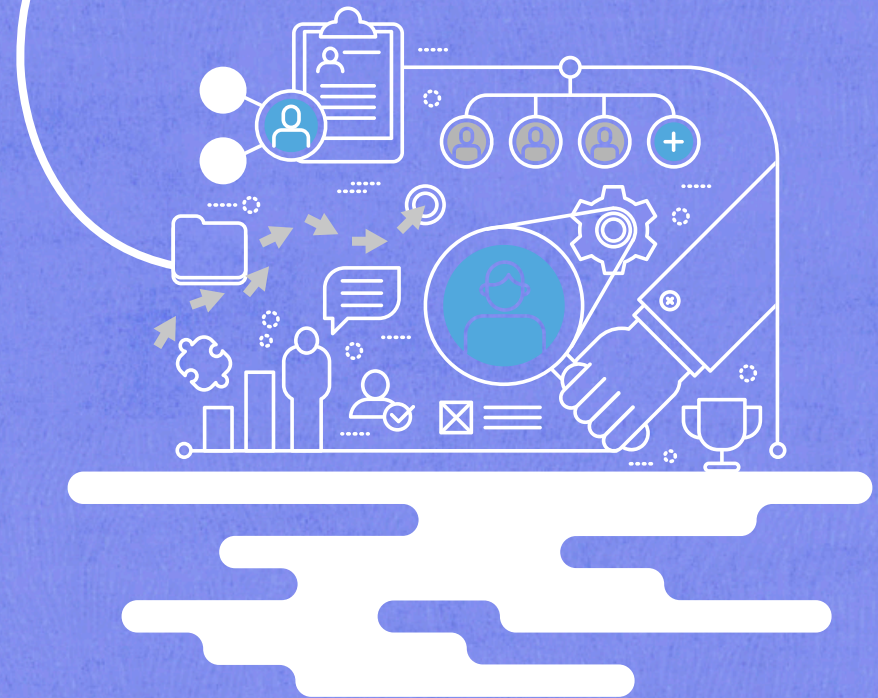
- **추진배경** 원·하도급업체 간 자율적 대금조정 유도 및 비용분담 합리화
- **주요내용**
  -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, 원사업자는 그 내용·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
  -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,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신청 가능
- **시행일** 2020년 5월(예정)

2020년부터  
이렇게 달라집니다

# 09

Health ·  
Welfare ·Employment

## 보건·복지·고용





## 1 농림축산식품부

자세한 내용은 p.285

###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After

'2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(연간 48만원 상당) 공급합니다.

-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
- 연간 48만원 상당 자원(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- 읍·면·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

• 시범지역 : 전국 27개 시·군



## 3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87

###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

#### After

'20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- 25~64세 근로소득공제(30%)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 보장 강화
- 수급권자 재산 기준 완화



## 2 보건복지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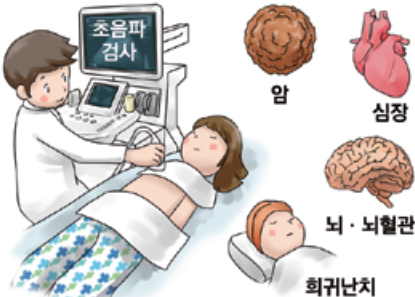
자세한 내용은 p.286

###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(자궁, 난소)·흉부(유방)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

시행일 : 2020년 상반기

#### Before

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.



#### After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('17.8월)에 따라 '20년에 자궁·난소 등 여성생식기(20.상), 흉부(유방)(20.하)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.



-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

## 4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88

###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

시행일 : 2020년

#### Before

소득하위 20% 어르신(156만명)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


#### After

소득하위 40% 어르신(325만명)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


•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%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

## 5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89

###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

시행일 : 2020년

#### Before

'19년 4월부터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



#### After

'20년에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



•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
## 7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91

###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

시행일 : 202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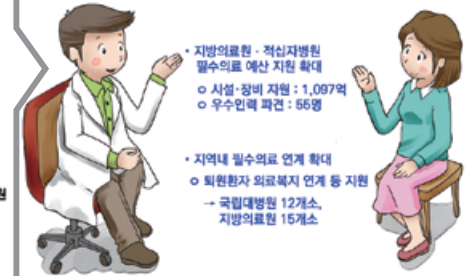
#### Before

지금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왔습니다.



#### After

'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화대책' 발표('19.11.11)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



## 6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90

###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구분	종전
치매안심센터 운영	• 인지기원등급 받기 전까지 센터 입회 • 센터 이용시간 1일 3시간
치매전문병동 설치	•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
치매공공후견 지원	• 후견심판절차비용, 중앙지원단 운영비 지원

#### After

'20년부터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.

구분	종전
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	• 인지기원등급자도 센터 이용 가능 • 센터 이용시간 1일 최대 7시간
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	• 공립요양병원 5개소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
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	• 후견활동비, 후견인 양성교육,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 지원

## 8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92

###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

#### Before

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
•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(8만원~11만5천원)의 30%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.

• (환자 유형 예시)  
①파비(하지·사지마비·편마비 등), ②수술 직후, ③말기 질환, ④의료기기 등 부착(안공호흡기 등),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, ⑥욕창 및 궤양, ⑦정신과적 질환, ⑧인지장애 등

#### After



## 9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93

###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

시행일 : 2020년 1월

#### Before

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,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부터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합니다



## 10 보건복지부

자세한 내용은 p.294

###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그 동안 소아당뇨환자들은 하루 수차례씩 채혈침과 검사지를 통해 혈당을 체크하고, 주사기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해야 해서 학교생활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.1월부터는 제1형(소아)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의 70%(기준금액 이내)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어, 일상생활 중 혈당관리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.



## 11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04

###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18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 
(기업 규모별 단계적)



#### After

'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

## 12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05

###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19년에는 최저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소상공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「일자리 안정자금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



## 13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06

###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20년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. 실업, 재직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없이 하나의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① (지원대상)  
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(단,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)
- ② (지원내용)  
유효기간 5년(경신 가능), 지원한도 300~500만원
- ③ (자부담 개념)  
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

#### After



국민내일  
배움카드



• 취업성공패키지 |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부담을 감면

## 15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08

###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시행일 : 2020년 1월 16일

#### Before

-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.
-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 있습니다



#### After

-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'20.1.16부터 시행됩니다.



1. 원청의 책임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
2.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 등 제한하였습니다
3. 산재예방 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등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

## 14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07

###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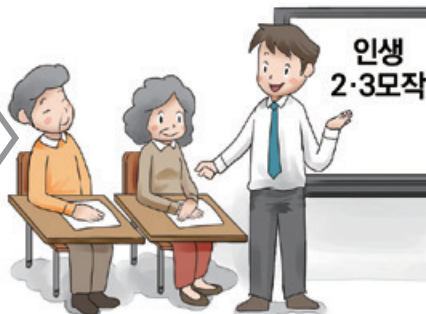
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#### Before

'20.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생 2·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합니다.

- 대기업은 아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기업에서 자립할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

#### After



## 16 고용노동부

자세한 내용은 p.310

###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#### Before

'19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,048,000원이었습니다.



2019년 부담기초액  
현행 : 1,048,000원~  
~1,745,150원(5단계)

#### After

'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월 1,078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


2020년 부담기초액  
개정 : 1,078,000원~  
~1,795,310원(5단계)

## 17 식품의약품안전처

자세한 내용은 p.324

###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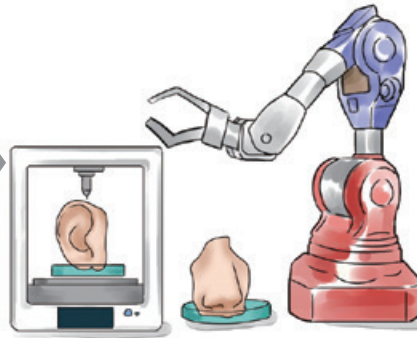
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#### Before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(19.4.30. 공포/20.5.1. 시행)에 따라,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,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원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.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,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, 세포,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·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,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.

#### After



## 18 식품의약품안전처

자세한 내용은 p.326

### 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형태 조사

시행일 : 2020년

#### Before

'20년부터 생활하수를 분석하여,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'신종·불법 마약류의 사용형태 모니터링'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·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형태 자료 작성
- 모니터링 결과분석·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
-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

#### After



##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2432)

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(임신부+산모)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(연간 48만원 상당) 공급합니다.

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'2020년도 국민참여예산'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.
  -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·군·구에서,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됩니다.
  - 시범지역 : ① 광역시·도 단위 사업(2곳): 충북, 제주
  - ② 시·군·구 단위 사업(14곳): 경기(부천), 충남(천안, 아산, 홍성), 대전(대덕), 전북(군산), 전남(순천, 나주, 장성, 해남, 신안), 경북(안동, 예천), 경남(김해)

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정책홍보>친환경농업육성

###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

- 추진배경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
- 주요내용
  - 임신부터 출산·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
  -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(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  - 읍·면·동 주민 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(자궁, 난소)· 흉부(유방)·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

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(☎ 044-202-2667)

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(17.8월)에 따라 '20년에 자궁·난소 등 여성생식기(20.上), 흉부(유방)·심장(20.下)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

\* 상복부(18.4월), 하복부·비뇨기(19.2월), 응급·중환자(19.7월), 남성생식기(19.9월)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

■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,

■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※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,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,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

###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

- **추진배경**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(17.8월)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
- **주요내용**
  - 자궁·난소 등 여성생식기(20.上), 흉부·심장(20.下)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
  - (기준)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) 의심자 및 확진자 등
  - (변경)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
- **시행일** 2020년 상반기에 여성생식기, 하반기에 흉부·심장 초음파

##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☎ 044-202-3054)

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.

■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인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\* 일부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

- 또한 기준에 아들·미혼의딸(30%)과 결혼한딸(15%)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'부양비'\*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%로 인하합니다.

\*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('부양능력 미약' 구간)인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(부양비)으로 간주,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

■ 신규로 근로연령층(25~64세) 수급권자의 근로·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(30%는 공제)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합니다.

\* 근로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,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 감소

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합니다.

\*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

**참고*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'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% 공제 실시!' 보도자료

###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

- **추진배경**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  - 25~64세 수급자 대상 근로·사업소득 30% 공제
  - 기본재산공제,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 완화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(☎ 044-202-3671)

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\*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\* 「저소득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」(관계부처 합동, 2018.7.18)에 포함

-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% 어르신(156만명)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,
-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40% 어르신(327만명)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\*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%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

##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(☎ 044-202-3321)

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, 2019년 4월부터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2020년부터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,
  -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
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(12월말 배포 예정)

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 배포 예정(12월 말)

기초연금  
월 최대 30만원  
지원대상 확대

- **추진배경**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기초연금 인상(월 최대 30만원 지급) 대상을 소득하위 40% 어르신으로 확대
    - 현행 : 소득하위 20% 어르신(156만명)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    - 개정 : 소득하위 40% 어르신(327만명)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    - \*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%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
- **시행일** 2020년 (잠정, 국회 법사위 계류중)

장애인연금  
단계적 인상

- **추진배경**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2020년에는 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
  -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
- **시행일** 2020년 (잠정, 국회 법사위 계류중)

##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

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☎ 044-202-3537)

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.

-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됩니다.
-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,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합니다.
-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, 양성교육비와 17개 시·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됩니다.
-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·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.

###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주요내용

- **추진배경**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
- **주요내용**
  -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
  - 치매환자 전문 치료·관리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
  - 치매환자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성년후견 이용지원 확대 등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(☎ 044-202-2533)

응급·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.

-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.
  - \* 기능보강 예산 [국비기준] : ('18) 530억 → ('19) 994억 → ('20) 1,097억(107% 증)
-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갑니다.
  - \* 파견 의료인력 지원 규모 [국비기준] : ('19) 50명 → ('20) 55명(10% 증)
- '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갑니다.
-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·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.
  - \* 협력사업 예산 [국비기준] : ('19) 권역 10개소 국립대병원(30억) → ('20) 권역 12개소 국립대병원(24억), 지역 15개소 지방의료원(18억)

###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

- **추진배경**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'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' 발표('19.11.11)
- **주요내용**
  - 권역/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·연계
    - 17개 권역, 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순차적 지정 및 필수의료 조정·연계 추진
  -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
    - 지방의료원,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확대 : '20년 1,097억
    - 지방의료원, 적십자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: '20년 55억(55명)
    -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 : '20년 42억

##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45)

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
-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,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.
  -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-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(한의원, 치과의원 제외)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질병·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·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\* (환자 유형 예시) ① 마비(하지·사지마비·편마비 등), ② 수술 직후, ③ 말기 질환, ④ 의료기기 등 부착(인공 호흡기 등),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, ⑥ 욕창 및 궤양, ⑦ 정신과적 질환, ⑧ 인지장애 등
  -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(8만원~11만5천원)의 30%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
**참고*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

##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(☎ 044-202-3477)

노인일자리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사회참여, 민간 취업·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
-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
-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('19) 2만개 → ('20) 3.7만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.
-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.

###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

- **추진배경**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
- **주요내용**
  - ① 노인일자리 확대(64만개 → 74만개)
  - ② 공익활동 참여 기간 연장 (9 → 최대 12개월)
  - ③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: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→ 만 65세 이상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

##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31)

앞으로 제1형 당뇨병(소아당뇨)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■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,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\*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%입니다.

\* 연속혈당측정기 : 연간 84만원, 인슐린자동주입기 : 170만 원(5년 기준)

■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'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

1형  
당뇨 환자에 대한  
당뇨병 관리기기  
요양비 급여

- 추진배경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('17년 11월)에 따른 급여 실시
- 주요내용
  - 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(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) 요양비 급여 실시
    - 기기별 기준금액(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/1년,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/5년)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% 지원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

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(☎ 044-202-2557)

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합니다.

■ 「응급실 폭행방지 대책」의 후속처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었으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(청원경찰, 경비원 등)이 배치됩니다.

- 응급실 내 보안장비(CCTV, 폴리스콜[응급실-경찰 비상연락시설]) 등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됩니다.

■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.

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보도자료)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

안전한 응급실  
이용을 위한  
응급실 보안 강화

- 추진배경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(「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」('18.11월))
- 주요내용
  - 응급실 인력기준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(청원경찰, 경비원 등) 추가
    -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
    -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 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
  - 응급실 시설기준에 CCTV 등 응급실 보안장비 설치 포함
- 시행일 2020년 7월 1일

## 청년저축계좌 신설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☎ 044-202-3072)

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(만15세~39세)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.

-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(근로소득장려금)을 30만원 매칭·적립하여 - 3년 만기 시 1,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.
- 단,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,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(1개 이상), ③ 교육 이수(연 1회씩 총 3회)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.

##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

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☎ 044-202-3073)

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습니다.
- '20년에는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하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개정 보도자료

### 청년저축계좌 개요

- 추진배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
- 주요내용
  - (대상) 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(만15~39세)
  - (내용)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
  - (적립액) 3년 만기 1,440만원(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) 마련
  - (지급요건) ① 꾸준한 근로,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, ③ 교육 이수, ④ 지원금의 50% 사용증빙 등
- 시행일 2019년 4월 1일

###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

-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
- 주요내용
  -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(현행 월 최대 20만원 → 월 최대 70만원)
  - 자활사업 참여 우선 순위 폐지
  - 차상위자 등 유선 홍보 강화 및 참여절차 간소화
- 시행일 2019년 10월 1일

##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52)

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'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,500명 늘어난 4,000명으로,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,000명 늘어난 7,000명으로 확대됩니다.
  -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·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참고*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”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

발달장애인  
지원 확충

- **추진배경**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
- **주요내용**
  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    - 대상자 :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4,000명('20년)
    - 서비스내용 :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월 100시간 (단가 13,500원)
  -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
    - 대상자 : 중·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7,000명('20년)
    - 서비스내용 :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월 44시간 (단가 13,350원)
- **문의**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  
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(☎ 02-3433-0758, www.broso.or.kr)

##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·개편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☎ 044-202-3460)

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\*를 통합·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- \*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, 단기가사서비스,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, 지역사회자원연계
-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,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입니다.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,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,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,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,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, ⑥ 은둔형,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, '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'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

**참고**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'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' 보도자료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 
개요

- **추진배경**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 통합제공
- **주요내용**
  -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
  -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제공으로 상태악화방지, 장기요양진입예방
  - 읍면동 신청접수·대상발굴, 서비스제공계획 시·군·구 승인 등 서비스 전달의 공적개입 책임·강화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(☎ 043-719-7312)

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: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.

■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·췌방주민,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합니다.

■ 노인·췌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- ('19) 일부지역(전남, 충남) 노인검진 시범사업(1,123백만원) → ('20) 의료급여 수급권자·재가와상노인\*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(6,356백만원(국비 50% + 지방비 50%))

\* 검진대상인원 :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약 50만명), 재가와상노인(약 18만명)

■ 또한,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.

- ('19) 7개소 지원(770백만원) → ('20) 10개소 지원(1,100백만원)

■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.

- (PPM의료기관) '19년 258명(8,868백만원) → '20년 297명(+39)(9,786백만원)

- (보건소) '19년 259명(8,910백만원) → '20년 668명(+409)(16,193백만원(국비 50% + 지방비 50%))

## 검역감염병 오염지역(오염인근지역) 지정 변경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(☎ 043-719-9207)

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됩니다.(시행일 2020. 1. 1.)

■ 「검역법」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·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\*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\* 콜레라, 동물인플루엔자(AI) 인체감염증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, 폴리오, 페스트, 황열, 에볼라바이러스병

###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

- ① (콜레라) 17개국 → 19개국
- ② (동물인플루엔자(AI) 인체감염증) 중국 5개 성·시 → 4개 성·시
- ③ (중동호흡기증후군) 10개국(변동없음)
- ④ (폴리오) 8개국 → 9개국
- ⑤ (페스트) 1개국 → 2개국
- ⑥ (황열) 42개국(변동없음)
- ⑦ (에볼라바이러스병) 1개국(변동없음)

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>감염병>해외질병>검역감염병 발생지역

###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선정 실시

- **추진배경** 최근 1년간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(오염인근지역) 지정 현행화
- **주요내용**
  - 오염지역 변경(66개국 → 65개국\*) \* 감염병별 중복 국가 포함
    - 지정 : (콜레라) 브룬디, 에티오피아, 아이티, 수단 (폴리오) 앙골라, 중앙아프리카 (페스트) 콩고민주공화국
    - 해제 : (콜레라) 말라위, 알제리 (폴리오) 케냐
    - 변경 : (AI) 중국 5개 성·시 → 4개 성·시\*
    - \* 중국 4개 성·시 : 광둥성, 윈난성, 장쑤성, 후난성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(☎ 043-719-7128)

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,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.

- 20~40대 만성 B형·C형간염,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,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
-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,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
  - 20~30대(1980~1999년생) :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
  - 40대(1970~1979년생) :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
-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.

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알림·자료)보도자료 발표 예정

A형간염 고위험군  
예방접종

- 추진배경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및 사망률 감소
- 주요내용
  - 20~40대 만성 간질환자 무료 예방접종 2회 지원
    - 20~30대(1980~1999년생) :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
    - 40대(1970~1979년생) : 항체검사 후 음성인 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
- 시행일 2020년 1월~12월까지

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 
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☎ 043-719-8350)

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합니다.
  - 현행: ('19) 3가 백신 지원, 1,381만명
  - 개정: ('20) 4가 백신 지원, 1,461만명
-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.
  - 현행: ('19)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
  - 개정: ('20)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임신부,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, 중학교 1학년
- 개정내용은 2020~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(2020년 10월 이후 예정)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알림·자료)보도자료 발표 예정

인플루엔자 4가 백신  
및 중학생 1학년까지  
대상자 확대

- 추진배경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한 질병부담 감소
- 주요내용
  -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
    - 현행 : 3가 백신, 어르신, 임신부,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
    - 개정 : 4가 백신, 어르신, 임신부, 생후 6개월~12세 어린이, 중학교 1학년
- 시행일 2020~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부터 (2020년 10월 이후 예정)

##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☎ 044-202-7545, 7972)

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
- 50~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
  - 현행 : 300인 이상 적용
  - 개정 : 50인 이상 적용
-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단, 일요일은 제외\*)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
  - 현행 :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
  - 개정 :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

\*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서 일요일은 제외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###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

-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- 주요내용
  -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
    - '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제외업종은 '19.7월부터)
    - '20.1월 : 50~299인
    - '21.7월 : 5~49인
  -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
    - '20.1월 : 300인 이상 → '21.1월 : 30~299인 → '22.1월 : 5~29인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지원 지속
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(☎ 044-202-7783)

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 
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.

-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
  -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  -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(2.87%)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,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.

\*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>사업소개(지원대상·요건 등)

###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

-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- 주요내용
  -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)
  - \* (5인 미만) 월 11만원 지원, 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,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

##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☎ 044-202-7313, 7322)

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·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.

-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유효기간을 기존 '1~3년'에서 '5년'(재발급 가능)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'200~300만원'에서 '300~500만원'으로 높아집니다.
- 훈련비 자비부담률\*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.
  - 현행 : ▲실업자: 30% 수준, ▲재직자: 0~40%
  - 개편 :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
 \*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
-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

### 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로 통합

- **추진배경**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
- **주요내용** ① (지원대상)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(단,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)  
② (지원내용) 유효기간 5년(갱신 가능), 지원한도 300~500만원  
③ (자부담 개편) 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18)

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·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·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.

-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\*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 
\* 경력·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(예시: 1,000인)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고용정책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

###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

- **추진배경** 정년퇴직·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사전 준비
- **주요내용** ①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  
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
- **시행일** 2020년 5월 1일

##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☎ 044-202-7697

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
■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\*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.

\* ① 보험설계사·우체국보험 모집원,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(27종), ③ 학습지교사, ④ 골프장 캐디, ⑤ 택배 기사, ⑥ 퀵서비스기사, ⑦ 대출모집인,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⑨ 대리운전기사

■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(‘21.1.1. 시행)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.

구분	대상	내용
대표이사 (‘21.1.1. 시행)	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,000위 이내 건설회사	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
발주자	총 공사금액 50억 이상	공사단계별(계획, 설계, 시공)안전보건대장 작성·확인·이행 의무 부여
가맹본부	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	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·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

■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(원청)의 책임범위 확대,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: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경우로서 지배·관리 하는 위험장소로 확대
  - ② 도급인의 의무 :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
  - ③ 의무이행 강화 :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\*
- \* (종전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→ (개정)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(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, 재범 시 가중)

■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·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물질 제조·사용 작업  
↳ (종전)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→ (개정)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\*

\* 단, 일시·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

-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·불화수소·질산·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 
↳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\*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

■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: 타워크레인 등 기계·기구·설비 등이 설치, 작동 또는 설치·해체·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
- 안전관리자 :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(현행 : 120억→개정 : 50억)

■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,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‘전기업’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■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.

- MSDS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(종전 : 양도·제공)하는 자로 변경
-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 비공개 :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·함유량 기재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

###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

- **추진배경**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
- **주요내용**
  -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: (종전) 근로자 → (개정) 노무를 제공하는 자
  - ② 대표이사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
  - ③ 도급인의 책임 강화 : 책임범위 확대, 의무 부여 및 이행 강화 등
  - ④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
  - ⑤ 건설업 안전 강화
  - ⑥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출 대상 변경 등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6일  
(대표이사 책임 : 2021년 1월 1일, MSDS 제출 : 2021년 1월 16일)

##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-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48천원 이었으나,
-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,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장애인 고용률	2019년	2020년
고용의무 이행률이 3/4이상	월 1,048,000원(부담기초액)	월 1,078,000원(부담기초액)
고용의무 이행률이 1/2이상~3/4미만	월 1,110,880원	월 1,142,68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이상~1/2미만	월 1,257,600원	월 1,293,600원
고용의무 이행률이 1/4미만	월 1,467,200원	월 1,509,200원
장애인 미고용	월 1,745,150원(최저임금액)	월 1,795,310원(최저임금액)
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

장애인 고용부담금  
부담기초액 인상

- **추진배경**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부담기초액 상향
    - 현행 : 1,048,000원 ~ 1,745,150원(5단계)
    - 개정 : 1,078,000원 ~ 1,795,310원(5단계)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☎ 044-202-7213)

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.

-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-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합니다.
  - \*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,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, 대규모기업은 360만원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(일자리창출)&gt;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

고용촉진장려금  
지원대상 확대

- **추진배경**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중장년층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65)

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·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-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\*를 도입한 경우,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.

\* 정년 폐지, 정년 연장(1년 이상),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

-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
-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##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56)

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
\* 노동자 수의 20% 한도 지원(대규모 기업은 10%)

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업 관련 보도자료

###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장려금 지원

- **추진배경**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
- **주요내용**
  -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
    -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
  -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함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중장년 참고

###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

- **추진배경**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
- **주요내용**
  -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(1~23%)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☎ 044-202-7561),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(☎ 052-704-7332)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(신청시기) 평일 : ~ 이용일 7일전까지, 주말·연휴·성수기 : ~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
- (신청방법) welfare.kcomwel.or.kr 회원가입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휴양콘도 신청
- (선정방법) 평일 : 선착순, 주말·연휴·성수기 : 점수제
-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kcomwel.or.kr)뉴스/공지사항

###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

- **추진배경**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여가문화 확산
- **주요내용**
  - ① (이용대상 확대)
    - 현행 : 저소득 노동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, 사업주 주관 워크숍(평일)
    - 개정
      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, 주말, 연휴, 성수기)
      - 산재보험특례적용자, 부서장 등 친목·휴양목적 단체이용(평일)
  - ② (선정시기 및 선정방법)
    - 현행 : 선정시기(주 2회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우선순위\* 적용)
      - \* 이용률이 낮은 자 > 점수가 높은 자 >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
    - 개정 : 선정시기(월 1회, 매월 15일까지), 선정방법(평일 이외 점수제\* 적용)
      - \* 임금수준, 기업규모, 취약계층, 예약취소건 등을 반영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일

##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98)

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.

-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,
-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.
  -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(월)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-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~ 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·부과

- **추진배경**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
- **주요내용**
  -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·부과
    - 현행 : 민간기업, 공공기관, 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이 아닌 노동자)
    - 개정 :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 추가
- **시행일** 2020년 1월 1일

##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8)

장애인 의무고용률\*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.

\* 3.1%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.4%

-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, 중·경증 여부에 따라 30~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
- 앞으로는 월 30~80만원을 지원합니다.
-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

- 추진배경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
- 주요내용
  - 지급단가 인상 : 성별, 중·경증 여부에 따라 월 30~80만원 지원
    - 중증여성 60 → 80만원, 중증남성 50 → 60만원, 경증여성 40 → 45만원, 경증남성 30만원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,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.

-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,350원에서 8,590원으로 인상됩니다.
-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
- 주요내용
  -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
    - 현행 : 시급 8,350원
    - 개정 : 시급 8,590원
 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
    -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

##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.

-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.
-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,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.
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

-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
- 주요내용
  -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
    - 현행 : 최대 7주
    - 개정 : 최대 6개월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.

-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
-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.
-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(지원대상) 비장년 → 10개 유형(중증만 참여가능)장년(50세 이상) → 전체 15개 유형(중·경증 무관)
  - ② (지원수준) 인턴지원금 → 약정임금의 80%(최대 6개월, 80만원 한도)정규직전환지원금 → 월 65만원(고용유지시, 최대 6개월)
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고용노동부>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

- 추진배경 취업 사각지대에 소외된 특정 유형, 연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 - (사업체 참여조건)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
  - (인턴 참여조건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,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    - \* 기타 제한요건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확인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

-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, 서비스 대상 9,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,
-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, 서비스 대상 10,000명으로 확대하고, 참여자 수도도 신설합니다.
-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(지원대상)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,000명
  - ② (지원수준) 수행기관 : 기본운영비 48만원, 취업연계수당 20만원/참여자 : 1인당 1일 3천원
-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(www.moel.go.kr) 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

- 추진배경 구직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구직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
- 주요내용
 

<b>개별 동료상담</b> 참여자 자기결정력, 책임성 확보	<b>동료상담</b>	<b>집단 동료상담</b> 동료 간 관계형성, 자존감 회복
<b>일상생활 지원</b> 건강관리(약물, 위생, 체력) 등	<b>자조모임</b>	<b>설명자료 제공</b> 알기쉬운 설명자료 안내
<b>취업관련 기관 탐방</b> 지역사회 내 취업업체 방문		<b>지역사회 활용</b> 테마 프로그램, 축제, 문화 참여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☎ 044-202-7483)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.

-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이 지급됩니다.
-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,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**참고** 고용노동부 정책자료>대상자별 정책>장애인

###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

- 추진배경 생활 형편으로 인해 빠른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취업 지원
- 주요내용
  -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
  - 기존 과정 외 취업실무위주 프로그램 과정 추가
  -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(최대 3개월, 총 90만원) 지급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##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

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(☎ 02-2100-6147)

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제언 및 문화혁신 활동을 중앙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.

-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언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.
-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, 건강문제,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합니다.

### 청년참여플랫폼 사업 추진

- **추진배경** 정부와의 소통을 성평등 관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주도 문화 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청년참여플랫폼 운영
    - (정책제언) 정책추진단 2기 구성 및 정책 활동 이행점검 지원 등
    - (문화혁신)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 확산
  - 성별 갈등 진단 분석 및 대응
    - 청년세대 생애사 연구를 통해 '성별 갈등' 근본원인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
  -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
    - 4개 시도단위에서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
- **시행일** 2020년 3월 1일

##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(☎ 02-2100-6208)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
-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(10% 이내)하고,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(3점)을 부여 합니다.
- 또한,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(가점 5점)이 주어집니다.

**참고**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·설명>보도자료>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

###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 확대

- **추진배경**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 
※ 여성가족부-중소벤처기업부 MOU 체결('19.11.13.)
- **주요내용**
  - 대상
    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
  - 우대사항
    -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제(총 자금의 10% 이내)
    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고 시 가점(3점 부여)
    -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고 시 가점(5점 부여) 등
- **시행일** 2020년 1월

##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

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(☎ 043-719-3762)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(19.4.30. 공포/20.5.1. 시행)에 따라,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,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.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,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, 세포,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·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,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.
- 제정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###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
- **추진배경** 혁신의료기기 개발·출현\*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 제공 및 미래 성장동력 견인 등을 위하여 법률 제정 필요  
\* IT·NT·BT 기술 등을 접목한 혁신 의료기기(인공지능, 3D 프린팅, 로봇공학 적용 제품 등)
- **주요내용**
  - (혁신의료기기 지정)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
\*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구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·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
  - (혁신의료기기 허가 지원) 개발 단계별\* 심사제 도입, 우선심사 등  
\* 1단계: 제품설계, 2단계: 성능시험, 3단계: 임상시험계획, 4단계: 임상자료 검토
  - (혁신소프트웨어 맞춤형 허가체계 개선)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GMP 운영, 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,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으로 임상시험실시 등
- **시행일** 2020년 5월 1일

### 체외진단의료기기법

- **추진배경**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\*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·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조화를 통한 제도 선진화 도모 등으로 혁신성장 견인  
\*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조직·혈액 등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·관리체계 구축 필요
- **주요내용**
  - (동반진단제품 동시심사)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,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·심사 동시 신청·심사 가능
  - (임상적 성능시험) 체외진단 특성에 맞는 임상적 성능시험 체계 도입, 시험기관 지정 근거 및 준수사항 규정,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근거 마련 등
  - (변경허가 네가티브 적용) 안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변경보고 실시
  - (국가표준품 제조·보급)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·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의 국가 제조·관리 및 분양 근거 마련
- **시행일** 2020년 5월 1일

## 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

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(☎ 043-719-2802)

생활하수를 분석하여,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‘신종·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- 신종 마약류 등장,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,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.
  - 시행 전 : 수사·적발·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
  - \* 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
  - 시행 후 :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
  - \*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
-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,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·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
### 신종·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

- 추진배경 불법마약류 오남용은 확산추세이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하여 선제적 마약류 안전관리 대응책 수립 등에 한계가 있음
- 주요내용
  - 하수역학 기반 지역별·시기별 마약류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행태 자료 작성
  - \* 전국 57개소 공공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중 마약류 함량 분석
  - 모니터링 결과분석·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측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
- 시행일 2020년

##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

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(☎ 043-719-289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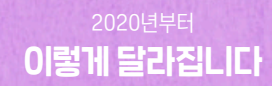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합니다.
  - 설문조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성별, 나이, 사는 지역, 소득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.
  - 더불어,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·투약 받는 경로, 횟수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 구축을 진행합니다.
- 향후, 조사·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.

###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

- 추진배경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 과다 투약 환자 등의 오남용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사 필요
- 주요내용
  - 의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선정
  -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
  -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정책 활용
- 시행일 202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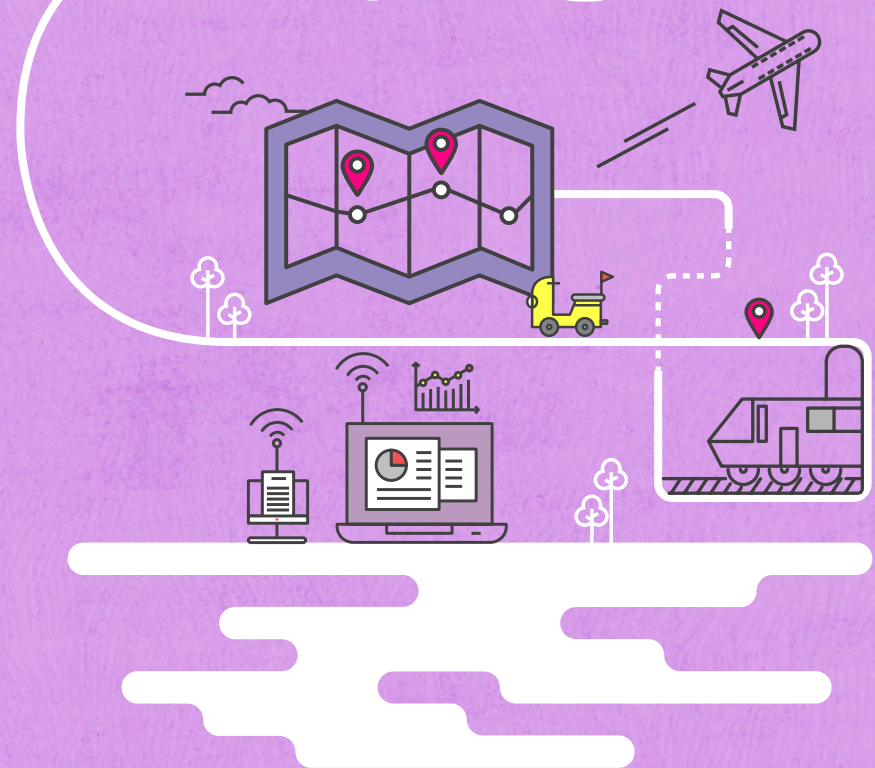




## 이렇게 달라집니다

Land · Traffic

국토·교통





## 1 국토교통부

자세한 내용은 p.331

###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

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
#### Before

지금까지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, 화재·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소 미흡했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5월 1일부터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됩니다.



## 2 국토교통부

자세한 내용은 p.332

###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

시행일 : 2020년 2월 21일

#### Before

부동산 실거래 신고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

#### After

'20년 2월 21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시장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

##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/건축안전팀(☎ 044-201-4750/4989)

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- 현행 :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, 매 2년 /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
- 개정 : 준공 후 5년 내 최초, 매 3년 /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

■ 또한,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\* 해체 시,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,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.

\* 연면적 1,000㎡ 이상,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건축물관리법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### 건축물관리법 시행

- 추진배경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, 화재·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
- 주요내용
  -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절차 변경
    - 현행 :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, 2년 주기 / 소유자·관리자가 점검자 지정
    - 개정 : 준공 후 5년 내 최초, 3년 주기 /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
  - 건축물 해체 허가 신설
    - 현행 : 건축허가·신고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신고
    - 개정 : 연면적 1,000㎡ 이상,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 초과하는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 실시
- 시행일 2020년 5월 1일

##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4094)

연면적 1천㎡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%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.

■ 「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」(국토교통부, '19.6.21)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.

「녹색건축 조성 지원법」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연면적 1천㎡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##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

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(☎ 044-201-3402)

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

■ 또한, 신고 된 사항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
- 현행 :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

- 개정 :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,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

■ 신고를 하지 않거나, 해태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입법예고>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###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

-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목표상향, 에너지전환정책 등 여건이 변화되고, 악화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정책 강화 필요
- 주요내용
  - 2030년 모든 건축물(연면적 5백㎡이상)의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가 2020년부터 시행
  - 2020년에는 연면적 1천㎡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
- 시행일 2020년 1월 1일

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보도자료(2019.8.2.)

### 실거래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

- 추진배경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
- 주요내용
  -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
    - 현행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
    - 개정 :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신고
  - 해제 등 신고 의무화
    - 현행 : 〈신설〉
    - 개정 : 신고 된 사항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
- 시행일 2020년 2월 21일

## 국립항공박물관 개관
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(☎ 02-2064-8215)

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·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 개관합니다.

- 국립항공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습니다.
  -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.
- 박물관 건축물은 2019년 말 완공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.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국립항공박물관 인터넷 누리집: www.hanggong.or.kr

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
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·보존·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 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
- 주요내용
  - (건물) 전시면적으로는 국립박물관 중 3위 규모
    - (위치)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 편
    - (규모) 부지 15,000㎡, 연면적 18,593㎡(전시면적 7,128㎡), 지상4층
    - (주요 시설) 대강당(200석), 주차장(172대), 도서관, 식당
  - (주요 전시물) 자체개발 항공기(T-50, KC-100), 무인기(TR-100, EAV-2), 2인승 경량항공기(KLA-100) 등
- 시행일 2020년 5월경 예정

##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(☎ 044-201-4245)

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,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\*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'안전투자 공시제도'를 시범운영합니다.

\* (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(이하 "항공교통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

-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(또는 계획)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하게 됩니다.
- 2019.11.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(2020~2022)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 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,
-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증진하고, 항공안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항공사 등  
안전 투자공시제도  
시범 시행

- 추진배경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산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정부의 안전 규제활동만으로는 안전투자 증진에 한계
- 주요내용
  -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(또는 계획)을 매년 1회 공시
  - 항공기 정비비·정비시설 투자비, 엔진·부품 등 구입비,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, 교육훈련 투자, 안전증진 홍보 등에 대한 투자·지출
- 시행일 2020년 5월(시범 시행)

## 모바일 승선권 확대

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☎ 044-200-5733

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.

-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
  -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.
    - 여객선 이용객이 '가보고 싶은 섬'(인터넷 또는 모바일App)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, 알림톡\*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.
- \*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('20년 상반기)
-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.

### 모바일 승선권 확대 실시

- **추진배경**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확대하여 여객선 이용 편의 확대
- **주요내용**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
  - ① (방침 확정)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인천지역 선사들과 시범사업 실시
  - ② (시범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) 전 선사로 확대하고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
- **시행일** 2019년 2월 1일



##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

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악의적 고액·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악의적 고액·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</li> <li>• 국세 3회 이상 체납,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</li> <li>•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</li> <li>•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 가능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</p>	국세징수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(044-215-4153)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대상업종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음식점업, 연구개발업, 광고업, 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대상업종: 현행 업종에 '수도업, 환경정화 및 복원업, 회사 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,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'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조세특례제한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법제제과 (044-215-4132)
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를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</li> <li>• 세액공제율: 대기업 1%, 중견 3%, 중소기업 7%</li> <li>• 적용기한: 2019년 12월 31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</li> <li>• 세액공제율: 대기업 2%(‘20년, 1년간) 중견 5% 중소기업 10%</li> <li>• 적용기한: 2021년 12월 31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</p>	조세특례제한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조세법제제과 (044-215-4133)
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입대상</li> <li>•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</li> <li>■ 적용기한</li> <li>• 2019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입대상 제한</li> <li>•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</li> <li>■ 적용기한 1년 연장</li> <li>• 2020.12.31.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</p>	조세특례제한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044-215-4233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공모리츠 배당소득 과 세특례 신설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</li> <li>• (대상) 공모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으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</li> <li>• (과세특례)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% 분리과세</li> <li>• (사후관리) 3년 미만 투자시 감면세액 추징 및 10% 가산세 부과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1.12.31.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</p>	조세특례제한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044-215-4233)
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촉권 양도 소득세 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촉권* 양도에 대한 과세</li> <li>- *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촉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</li> <li>• 기타소득으로 과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</li> <li>• 양도소득으로 과세</li> <li>- 다만, 이촉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소득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4)
감정가액·환산취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</li> <li>• (적용대상)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</li> <li>*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</li> <li>• (가산세율) 환산가액의 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</li> <li>• (적용대상) 신축·증축(85㎡ 초과 증축에 한함)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시</li> <li>* 취득일·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</li> <li>• (가산세율) 감정가액·환산취득가액의 5%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</p>	소득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4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	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• (지정지역 외) - 기본세율* + 10%p 중과 • (지정지역 내) - 기본세율* + 20%p 중과 * 기본세율: 6% ~ 42%  〈단서 신설〉	■ 지정지역(투기지역)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20% 중과 대상 배제 • (지정지역 외) - 기본세율* + 10%p 중과 • (지정지역 내) - 기본세율* + 20%p 중과 * 기본세율: 6% ~ 42%  -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20%p 중과배제 * 10%p 중과만 적용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소득세법 (‘20.1.1.)      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4)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	■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• 사후관리 기간: 10년 • 고용유지 -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*의 80% 이상 *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 인원 -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% (중견기업은 120%) 이상  • 업종 유지 -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*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% 이상 필요  • 자산유지 - 가업용 자산 20% 이상 처분 (5년내 10%) 금지 - 예외적 처분 허용 · 수용, 시설의 개체, 사업장 이전 등 처분·대체취득시,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 〈추 가〉	■ 사후관리 완화 • 기간 단축: 10년 → 7년 •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 완화 -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*의 80% 이상 * 상속 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 인원 -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 용인원의 100% 이상(중견기업도 동일)  • 고용유지의무 이행시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기준의 총급여액 기준 사용 가능 • 업종 유지 요건 완화 -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-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•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- 가업용 자산 20% 이상 처분 (5년내 10%) 금지 -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·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필요시 등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상속세 및 증여세법 (‘20.1.1.)       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1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			
탈세·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	〈신 설〉	■ 피상속인·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혜택 배제  • ○ 요건 - ① (범죄행위)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- ② (행위시기)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 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·회계부정 - ③ (처벌대상자)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 >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상속세 및 증여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1)															
최대주주 보유주식 등 상속·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	■ 지분율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을 차등적용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지분율</th><th>일반기업</th><th>중소기업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50%이하</td><td>20%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50%초과</td><td>30%</td><td>15%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중소기업은 '20년말까지 할증적 용 배제(조특법)	지분율	일반기업	중소기업	50%이하	20%	10%	50%초과	30%	15%	■ 기업규모 및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적용, 전반적인 할증률을 하향조정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일반기업</th><th>중소기업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할증률</td><td>20%</td><td>0%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조특법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삭제(상 증세법에 반영)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 >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구분	일반기업	중소기업	할증률	20%	0%	상속세 및 증여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1)
	지분율	일반기업	중소기업															
50%이하	20%	10%																
50%초과	30%	15%																
구분	일반기업	중소기업																
할증률	20%	0%																
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	■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• (공제율) 80% • (공제한도) 5억원	■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• (공제율) 100% • (공제한도) 6억원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 > 2019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	상속세 및 증여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1)															

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·요건 완화	<p>■ 연부연납 특례* 적용대상 * 특례 : 10년 또는 20년 연부 연납(가업상속재산 비중 50% 이상시) * 일반 연부연납: 5년</p> <p>•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•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①(대상)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 ②(피상속인) 지분보유 및 대표 - (지분) 10년 이상 최대주주· 지분(상장 30%, 비상장 50%) 보유 - (대표)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· 가업영위기간 중 50% 이상 · 10년 이상*</p> <p>*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 이사등을 승계하여 상속시 까지 계속 재직시 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</p> <p>③(상속인) - 상속 전 2년 이상 기업종사 -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, 2년 내 대표이사 취임</p>	<p>• (좌 동) •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(대상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) ②(피상속인) - (지분) 10년 이상 → 5년 이상 - (대표)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· 가업영위기간 중 50% → 30% 이상 · 10년 → 5년 · 10년 중 5년 → 5년 중 3년</p> <p>③(상속인) - (삭 제) - (좌 동)</p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상속세 및 증여세법 (‘20.1.1.)</p>
			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1)</p>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	<p>■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•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, 증여세율 10% 적용 • (창업 업종요건) - 제조업 등 31개 업종* * (조특법§6③)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</p> <p>〈추 가〉</p> <p>• (자금 사용요건) -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,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</p>	<p>■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• (좌 동) • 업종 확대 -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, 경영컨설팅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(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)</p> <p>• (자금 사용기한 연장) -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,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</p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상속세 및 증여세법 (‘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2)</p>
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	<p>■ 상속·증여세 부과제척기간 • 원칙: 10년 • 상속·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 •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(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) -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 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상속된 경우 - 국외재산을 상속·증여받은 경우 -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 의 명의로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·수익한 경우 -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-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·증여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</p> <p>〈추 가〉</p>	<p>■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포함 • (좌 동) •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확대 적용</p> <p>-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·증여받은 경우* * 상속·증여 재산의 보유여부와 무관 - 상증법§45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 제의 경우</p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상속세 및 증여세법 (‘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2)</p>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주류 과세체계 개편	■ (과세표준) 주류 제조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  ■ 서울 • 탁주 : 5%, • 맥주 : 72%	■ (과세표준)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 신고하는 수량  ■ 서울 • 탁주 : 41.7원/ℓ • 맥주 : 830.3원/ℓ – 생맥주는 2년간 20% 경감 • 서울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·조정 ('21.3월 시행)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주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044-215-4331)
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	(신설)	■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(경유차 제외)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% 감면(100만원 한도)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044-215-4334)
경정청구 및 수정신고	■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능한 자 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	■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국세기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(044-215-4151)
외부위탁 R&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	■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(제10조) • 과학기술 R&D : 자체 R&D 비용, 위탁·공동 R&D 비용 • 서비스 R&D : 자체 R&D 비용	■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• 과학기술 R&D : (현행과 같음) • 서비스 R&D : 자체 R&D 비용 + 위탁·공동 R&D 비용(다만,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&D에 한정)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2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	■ 가입대상 •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■ 과세특례 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■ 적용기한 • 2019.12.31.	■ 적용기한 3년 연장 • 2022.12.31.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044-215-4233)
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	■ 양도소득 계산 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별도로 계산 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불허	■ 양도소득 계산 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•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소득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(044-215-4231)
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	■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• 복식부기의무자  <추가>	■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• 복식부기의무자 • 연간 수입금액 4,800만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– 신규사업자, 방문판매원, 보험모집인, 음료배달판매원 제외 •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급·수취하는 비사업자→사업자로 등록 후 가산세 부과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소득세법 ('21.1.1.)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2)
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	■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• (종합 1억원, 근소 1.2억원 이하) 400만원(IRP 합산시 700만) • (종합 1억원, 근소 1.2억원 초과) 300만원(IRP 합산시 700만)	■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• (종합 1억원, 근소 1.2억원 이하)400만 (IRP 합산시 700만) → 600만원(IRP 합산시 900만 * 3년 한시운영) 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추가 •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: (현행) 연 1,800만원 이내 →(개정) 연 1,800만원 + ISA 만기시 계좌금액 • 추가 납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에 대해 세액공제(추가납입 당해연도에만 적용)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소득세법 ('20.1.1.)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5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
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	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 및 한도 • (대상) 비상장 벤처기업 • (한도) 2천만원 ■ 비과세 적용기한 • '20.12.31. 까지	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비과세 확대 •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추가 • 2천만원→3천만원 ■ 비과세 적용기한 • '21.12.31. 까지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(044-215-4211)																				
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정비	■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<table><tr><th>소득 구간</th><th>금 액</th></tr><tr><td>단독 400만원 이하</td><td rowspan="3">3만원</td></tr><tr><td>홀벌이 700만원 이하</td></tr><tr><td>맞벌이 800만원 이하</td></tr></table> ■ 부모 부양가구를 홀벌이가구로 인정 <table><tr><th>홀벌이 가구</th></tr><tr><td>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* 부모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</td></tr></table> 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<table><tr><th>신청기간</th></tr><tr><td>• (상반기) 8.21 ~ 9.10 • (하반기) 2.21 ~ 3.10</td></tr></table>  (신설)	소득 구간	금 액	단독 400만원 이하	3만원	홀벌이 700만원 이하	맞벌이 800만원 이하	홀벌이 가구	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* 부모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	신청기간	• (상반기) 8.21 ~ 9.10 • (하반기) 2.21 ~ 3.10	■ 최소지급액 인상 <table><tr><th>소득 구간</th><th>금 액</th></tr><tr><td>단독 400만원 이하</td><td rowspan="3">10만원</td></tr><tr><td>홀벌이 700만원 이하</td></tr><tr><td>맞벌이 800만원 이하</td></tr></table> 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홀벌이가구로 인정 <table><tr><th>홀벌이 가구</th></tr><tr><td>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*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</td></tr></table> ■ 신청기간 조정 <table><tr><th>신청기간</th></tr><tr><td>• (상반기) 9.1 ~ 9.15 • (하반기) 3.1 ~ 3.15</td></tr></table> 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	소득 구간	금 액	단독 400만원 이하	10만원	홀벌이 700만원 이하	맞벌이 800만원 이하	홀벌이 가구	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*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	신청기간	• (상반기) 9.1 ~ 9.15 • (하반기) 3.1 ~ 3.15	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   
	소득 구간	금 액																					
단독 400만원 이하	3만원																						
홀벌이 7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맞벌이 8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홀벌이 가구																							
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* 부모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기간																							
• (상반기) 8.21 ~ 9.10 • (하반기) 2.21 ~ 3.10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 구간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
단독 400만원 이하	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
홀벌이 7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맞벌이 8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홀벌이 가구																							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*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기간																							
• (상반기) 9.1 ~ 9.15 • (하반기) 3.1 ~ 3.15																							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·중견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</li> <li>• 적용대상 :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관련 기업에 공동출자</li> <li>• 출자범위 :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</li> <li>• 세액공제 : 지분취득가액의 5%</li> </ul>	<b>조세특례제한법</b> ( '20.1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</li> </ul>	<b>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</b> (044-215-4222)
소재·부품·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	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M&amp;A 시 세액공제</li> <li>• 적용대상 :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</li> <li>• 인수방법 : 주식취득 및 자산·사업양수</li> <li>• 세액공제 : 5%(중견7%, 중소10%)</li> </ul>	<b>조세특례제한법</b> ( '20.1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</li> </ul>	<b>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</b> (044-215-4222)
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</li> <li>•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: 2%</li> <li>•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: 0.2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산세 인상</li> <li>•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: 5%</li> <li>•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: (좌동)</li> </ul>	<b>법인세법</b> ( '20.1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2019년 세법개정안</li> </ul>	<b>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</b> (044-215-4223)
접대비 한도 상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대비 한도</li> <li>• 기본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기업 : 1,200만원</li> <li>- 중소기업 : 2,4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0억원 이하 : 0.2%</li> <li>- 100억원 초과~500억원 이하 : 2천만원+(100억 초과분의 0.1%)</li> <li>- 500억원 초과 : 6천만원 +(500억 초과분의 0.03%)</li> </ul> </li> </ul>	<b>법인세법</b> ( '20.1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대비 한도 인상</li> <li>• 기본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기업 : (좌동)</li> <li>- 중소기업 : 3,6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0억원 이하 : 0.3%</li> <li>- 100억원 초과~500억원 이하 : 3천만원+(100억 초과분의 0.2%)</li> <li>- 500억원 초과 : 1억1천만원+(500억 초과분의 0.03%)</li> </ul> </li> </ul>	<b>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</b> (044-215-4221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(출연금의 10%)</li> <li>• 적용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 기금 출연</li> <li>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</li> </ul> </li> <li>• 적용기한 : '19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</li> <li>• 적용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</li> <li>-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</li> </ul> </li> <li>• 적용기한 : '22.12.31.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</p>	조세특례제한법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2)
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</li> <li>• 현행 : 100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</li> <li>• 개정 : 1,500만원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</p>	법인세법시행령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1)
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확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특례</li> <li>• (적용대상) 박물관, 도서관, 미술관, 과학관</li> <li>*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</li> <li>• (적용요건)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(중전시설)를 양도</li> <li>*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중전시설 양도 또는 중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시설 을 취득하여 개관(신축하는 경우 3년)</li> <li>• (양도세 특례)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특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</p>	조세특례제한법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</li> <li>• (적용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</li> <li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</li> <li>-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</li> <li>*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 내로 이전</li> </ul> </li> <li>• (특례 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거치, 2년 균등 익금 산입 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요건 완화 및 분납특례 확대</li> <li>• (적용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이전*</li> <li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산업단지내로 이전</li> </ul> </li> <li>• (특례 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년 거치, 5년 균등 익금 산입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</p>	조세특례제한법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</li> <li>• (적용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익사업시행으로 공장*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</li> <li>*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</li> </ul> </li> <li>• (특례 내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년 거치, 3년 균등 익금 산입 (법인) 또는 분할 납부(개인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분납특례 확대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&gt;2019년 세법개정안</p>	조세특례제한법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</li> <li>• (적용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</li> <li>-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</li> </ul> </li> <li>• (과세특례)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년 이상 임대: 50%</li> <li>- 10년 이상 임대: 70%</li> </ul> </li> </ul> <p>〈 신 설 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기한 신설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</p>	조세특례제한법 ( '20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</li> <li>• (적용대상) 사업안정고시 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</li> <li>• (적용요건)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음</li> <li>• (과세특례) 양도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도세 감면: 15%</li> <li>- 대토 양도 시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상 및 사후관리 요건의 명확화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도세 감면: 40%</li> <li>- (좌 동)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* 종교법인·학교법인 제외</li> <li>• 자산 100억원 이상 (추 가)</li> <li>■ 위반시 가산세 부과</li> <li>• 수입금액 × 0.07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상속세 및 증여세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2)</p>
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</li> <li>• (적용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(자익신탁)하는 경우 (추 가)</li> </ul> </li> <li>• (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에게 신탁의 수익자</li> <li>-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</li> </ul> </li> <li>• (한도) 5억원</li> <li>• (추징) 원금인출 등으로 신탁재산 감소시 증여세 추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래의 원금인출은 증여세 추징 제외</li> <li>·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·특수교육비를 위한 인출 (추 가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</li> <li>-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 (타익신탁)하는 경우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추징사유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중증장애인 기초 생활비 용도 인출*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상속세 및 증여세법 (원금인출은 '20년 상반기 적용 예정이며, 타익신탁은 '20.1.1.이후)</p> <p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2)</p>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정비사업 관련 부동산 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</li> <li>• 납세의무자 : 위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법등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매매하는 경우</li> <li>• 납세의무자 : 수탁자로 변경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부가가치세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044-215-4326)</p>
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 한연장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 매입 세액공제의 특례공제율 적용기한</li> <li>• 19년 말까지</li> <li>■ 과세유통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</li> <li>• 4/104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규모 개인음식업자 의제 매입세액공제의 특례공제를 적용기한</li> <li>• 21년 말까지</li> <li>■ 과세유통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</li> <li>• 2/102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부가가치세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044-215-4326)</p>
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</li> <li>•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: 2%</li> <li>•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: 2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</li> <li>•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: 1%</li> <li>•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 : 2% (과다기재 부분만 가산세 적용,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)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부가가치세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(044-215-4326)</p>
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등유, 부생연료,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가 부과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</p>	<p>교통에너지환경세법 ('20.1.1.)</p> <p>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044-215-4333)</p>
취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발유 자연감소 공제율</li> <li>• 매월 과세표준(제조장 반출수량)의 0.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현실화</li> <li>• 0.5% → 0.2%로 축소</li> </ul> <p>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</p>	<p>개별소비세법 시행령 ('20.4.1.)</p> <p>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(044-215-4333)</p>

기획재정부

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	(신설)	■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	관세법 (‘20.4.1.)
		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6)
관세 납부불성실가산 세와 가산금을 납부지 연가산세로 통합	■ 납부불성실가산세① • 미납세액 × {납부기한의 다음날 ~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} × 1일 0.025%  ■ 가산금 • (미납세액 × 3%)①+ 매 1개월 마다 월 0.75%②	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• 미납세액 × {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} × 1일 0.025%①+②+3%③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관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1)
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	(신설)	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• 납세자보호관 :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• 납세자보호위원회 :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(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) 심의  ■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•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(1차 세관, 2차 관세청) → ②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→ ③결과 통지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	관세법 (‘20.7.1.)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1)
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	(신설)	■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• 공익목적으로 중소·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• 검사결과 수출입법령(관세법, 대외무역법, 상표법 등)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관세법 (‘20.7.1.)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통고처분 면제 가능	(신설)	■ 통고처분의 면제 가능 근거 마련 • 신분, 전과, 법 위반 동기,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면제 가능 • 면제 기준 : 범칙금 30만원(추징금·물수품 가액 100만원) 이하의 경우 •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관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2)
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	(신설)	■ 관세사의 의무 신설 •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• 등록 및 징계 시 “공직퇴임 관세사 여부” 기록 • 수입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	관세법 (‘20.4.1.)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(044-215-4418)
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	■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	■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: 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FTA관세법 (‘20.4.1.)
			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044-215-4472)
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, 협정세율 적용 허용	■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• 관세법상 세율 적용	■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• 수입자가 적용세율 선택가능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FTA관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044-215-4472)
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	■ 수입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•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의무 •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	■ 수입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•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 여부 선택 • 과태료 폐지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 >2019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	FTA관세법 (‘20.1.1.)
			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(044-215-4472)

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	■ 어로·양식 소득을 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	■ 어로, 양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은 5천만원,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 • 어로·양식을 겸업하는 경우 최대 소득 8천만원 비과세 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어업인 세제 혜택 대폭 확대된다 (12.11)	소득세법, 소득세법 시행령 ('20. 상반기)
			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(044-200-5431)

## 금융위원회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	■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	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'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' ('19.11.13일 배포)	주택공법 시행령 ('20.1분기)
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시행	(신규)	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의무 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산업성장 기반 마련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(P2P금융) 보도자료	주금공법 시행령 ('20.1분기)
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(등급제→점수제)	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등급제 (1~10등급)로 운영	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점수제(1~10등급)로 운영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.	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(미정)
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	(신규)	■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* 마련, '약관이용 가이드북' 신설 ■ 보험상품명 정비, 특약 부가체계 개선, '맞춤형 약관' 교부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보험약관 쉬워지고 착해집니다.	보험업 감독규정,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('20년 중)
		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(02-2100-2525)
		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2945)

## 금융위원회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	(신규)	■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 가능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('19.12.30. 보도예정)	-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1)
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사업	(신규)	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 구제책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및 부수사건(반환 청구 등) 소송대리 무료 지원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('20년 1/4분기 보도예정)	채권추심법 법률구조법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02-2100-2513)
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	■ 연금 계좌(개인형IRP·연금저축 계좌)간 이동시 기존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 영업점에 모두 방문(총 2회) 필요 → '19.11.25일부터는 신규 금융회사 영업점회 방문으로 연금 계좌간 이체가 가능해지도록 간소화	■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·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간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☞ (참고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>보도자료>'11.25.(월)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(이동)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."	- ( '20.1월 말, 잠정)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(02-2100-2662)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(02-3145-5199)
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	(신설)	■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중선위(금감원)에서 지정하는 제도 ■ 대상회사: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☞ (참고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	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('19.11.1.)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(02-2100-2693)
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	원화대출금 원화에수금 ≤ 100%	■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,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* * 가계대출 100%→115%, 법인대출 100%→85%, 개인사업자대출 100%→100% 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('18.7.11.)	은행업 감독규정 ('20.1.1.)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02-2100-2836)

## 교육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	(‘19년 2학기) 고등학교 3학년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20년 고등학교 2·3학년 실시 ※ ('21년) 고등학교 전학년 실시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교육부 홈페이지&gt;홍보자료&gt;고교 무상교육, 2021년 전면 시행됩니다' 등</p>	<p>초·중등교육법,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(2020학년도)</p> <p>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044-203-6517)</p>
초·중고 교육급여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지원 금액 동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 항목 지원금액 약 60% 인상</li> </ul>	<p>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(‘20. 3월)</p> <p>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(044-203-6524)</p>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 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업일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20일(주5일제 미실시)</li> <li>• 205일(주5일제 주2회 실시)</li> <li>• 190일(주5일제 실시)</li> </ul> </li> <li>■ 휴업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요일·공휴일 수업일수 미인정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업일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90일(주5일제 실시)</li> </ul> </li> <li>■ 휴업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요일·공휴일에 체육대회,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수업일수에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교육부 홈페이지&gt;뉴스·홍보&gt;보도자료&gt;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보도자료</p>	<p>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(‘20. 3.1.)</p> <p>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(044-203-6730)</p>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: 국공립어린이집</li> <li>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: 4개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: 국공립어린이집·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</li> <li>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: 4~6개월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&gt;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</p>	<p>여성농업인육성법 (‘20.1.1.)</p> <p>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(044-201-1566)</p>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아동수당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(247만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(263만명)</li> </ul>	<p>아동수당법 제4조 (아동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) (‘19.9월)</p> <p>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44-202-3415)</p>
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희망자가 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다함께돌봄 홈페이지(온라인)를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</li> </ul>	<p>-</p> <p>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(044-202-3361)</p>
보호종료아동 자립수 당 지급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</li> <li>■ 아동일시보호·보호치료시설보호종료 아동도 포함</li> </ul>	<p>아동복지법시행령 (‘20.1.1.)</p> <p>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(044-202-3446)</p>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가족돌봄휴가 신설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</li> <li>■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</li> </ul>	남녀고용평등법 ('20.1.1.)
		☞ (참고)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설명자료	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044-202-7477)
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월 상한액 18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월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</li> </ul>	고용보험법 ('20.1.1.)
		☞ (참고)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> 대상자별 정책 > 여성 > 출산·육아지원	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044-202-7477)

## 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35개소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확대</li> <li>• ('19년) 35개소 → ('20년) 60개소</li> </ul>	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('20.1.1.)
		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2020년 경력단절예방정책 강화	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(02-2100-6204)
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비스 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</li> <li>■ 서비스 대기 신청 후 연계 시가지 제공받는 정보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신청 기능 추가</li> <li>■ 서비스 대기 순번, 예상 대기 기간 등의 관련 정보 제공</li> </ul>	아이돌봄지원법 ('20.1월)
			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(02-2100-6365, 6366)

## 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볼 공동체 활동 지원 부재</li> <li>■ 공동육아나눔터 218개소 운영</li> <li>■ 가족센터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</li> <li>■ 돌봄 지원 강화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</li> <li>• ('19년) 218개소 → ('20년) 268개소</li> <li>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(착공기준)</li> <li>• ('19년) 5개소 → ('20년) 64개소</li> </ul>	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('20. 상반기)
			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(02-2100-6332, 6331)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가정의 임신·출산, 질병치료 시 의료 급여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</li> </ul>	한부모가족지원법 ('20.1월)
		☞ (참고) 한부모가족상담 : 1644-6621	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02-2100-6352)
청소년의 정책·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정책위원회,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미포함</li> <li>■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해 정책제안 한시적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정책위원회,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신규 위촉</li> <li>■ 청소년 참여포털을 통한 정책제안 상시 운영</li> <li>■ 청소년 원탁회의 신규 실시</li> </ul>	청소년기본법 ('20.1월)
			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(02-2100-6238)
사각지대 없는 위기 청소년 보호·지원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1개소</li> <li>■ 청소년동반자 1,313명</li> <li>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시범운영 (5개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8개소</li> <li>■ 청소년동반자 1,377명 확대</li> <li>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설치(9개소)(신규)</li> <li>■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(17개소)(신규)</li> </ul>	청소년복지지원법 ('20.1월)
		☞ (참고) 지원문의 : 청소년전화 1388	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(02-2100-6275, 6276)
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꿈드림센터 214개소</li> <li>■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52개소</li> <li>■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 10개 지역(1,000명) 실시</li> <li>■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건강검진 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꿈드림센터 222개소로 확대</li> <li>■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지원</li> <li>■ 꿈드림센터 전용공간 72개소로 확대</li> <li>■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 12개 지역 (1,200명) 실시</li> <li>■ 온라인(전자메일 등)으로도 건강검진 신청 가능</li> </ul>	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('20.상반기)
		☞ (지원문의) 꿈드림 홈페이지 (www.kdream.or.kr), 청소년 전화(1388)	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(02-2100-6319)

## 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80개소 운영</li> <li>■ 진로체험 프로그램 9개소 시범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30개소 확대 * ('19년) 280개소 → ('20년) 310개소</li> <li>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전국 확대 * ('19년) 9개소 시범운영 → ('20년) 전국 310개소 확대</li> </ul> <p>☞ (참고) 인근 운영기관 찾기: www.youth.go.kr/yaca</p>	<p>청소년기본법 ( '20.1월)</p> <p>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(02-2100-6250, 6259)</p>

## 병무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되는 경우(입영일 14일 전 출산, 유산 포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·후와 중복되는 경우 (입영일 21일 전 출산, 유산 포함)</li> </ul>	<p>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( '20.3월)</p> <p>병무청 동원관리과 (042-481-2770)</p>

## 경찰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입학연도 기준 '17세 이상 21세 미만'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입학연도 기준 '17세 이상 42세 미만'. 제대군인은 최장 3년까지 입학연령 상한 연장</li> <li>■ (제대군인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)</li> </ul>	<p>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( '20년 신입생 선발부터)</p> <p>경찰청 교육정책과 (02-3150-0935)</p>

## 03 국방·병무

## 국방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
병(兵)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(잠정)	■ 「군인사법」상 병의 징계종류 <table><tr><th>현행</th></tr><tr><td>강등</td></tr><tr><td>영창</td></tr><tr><td>휴가제한</td></tr><tr><td>근신</td></tr></table>	현행	강등	영창	휴가제한	근신	■ 「군인사법」상 병의 징계종류 6가지로 변경 <table><tr><th>개정</th></tr><tr><td>(좌동)</td></tr><tr><td>군기교육</td></tr><tr><td>감봉</td></tr><tr><td>휴가단축</td></tr><tr><td>(좌동)</td></tr><tr><td>견책</td></tr>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을 도입</li><li>• 감봉·견책 신설</li></ul> <p>☞ (참고) 국방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2020년 군인사법개정 보도자료</p>	개정	(좌동)	군기교육	감봉	휴가단축	(좌동)	견책	군인사법 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 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(02-748-6818)								
	현행																						
강등																							
영창																							
휴가제한																							
근신																							
개정																							
(좌동)																							
군기교육																							
감봉																							
휴가단축																							
(좌동)																							
견책																							
병(兵)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	■ 병 자기개발 활동 지원 <table><tr><th>2019년</th></tr><tr><td>1인당 연간 최대 5만원</td></tr><tr><td>본임부담, 비용의 50%</td></tr></table>	2019년	1인당 연간 최대 5만원	본임부담, 비용의 50%	■ 병 자기개발 활동 지원 확대 <table><tr><th>2020년</th></tr><tr><td>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</td></tr><tr><td>본임부담, 비용의 20%</td></tr></table> <p>☞ (참고) 국방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</p>	2020년	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	본임부담, 비용의 20%	- ( '20.1.) 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(02-748-5122)														
	2019년																						
1인당 연간 최대 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
본임부담, 비용의 50%																							
2020년																							
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
본임부담, 비용의 20%																							
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	■ '18년: '17년 최저임금의 30%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봉급액</th></tr><tr><td>병장</td><td>405,700</td></tr><tr><td>상병</td><td>366,200</td></tr><tr><td>일병</td><td>331,300</td></tr><tr><td>이병</td><td>306,100</td></tr></table>	구분	봉급액	병장	405,700	상병	366,200	일병	331,300	이병	306,100	■ '20년: '17년 최저임금의 40%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봉급액</th></tr><tr><td>병장</td><td>540,900</td></tr><tr><td>상병</td><td>488,200</td></tr><tr><td>일병</td><td>441,700</td></tr><tr><td>이병</td><td>408,100</td></tr></table> <p>☞ (참고) 국방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2020년도 국방예산 확정</p>	구분	봉급액	병장	540,900	상병	488,200	일병	441,700	이병	408,100	- ( '20.1.)   국방부 복지정책과 (02-748-6613)
	구분	봉급액																					
병장	405,700																						
상병	366,200																						
일병	331,300																						
이병	306,100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봉급액																						
병장	540,900																						
상병	488,200																						
일병	441,700																						
이병	408,100																						

## 국방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비군 훈련 보상비 : 3.2만원</li> <li>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: 1.3만원</li> <li>• 교통비 : 7천원(+116.14원/km)</li> <li>• 중식비 : 6천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비군 훈련 보상비 : 4.2만원</li> <li>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 : 1.5만원</li> <li>• 교통비 : 8천원(+131.82원/km)</li> <li>• 중식비 : 7천원</li> </ul>	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(‘20.3.)
			국방부 예비전력과 (02-748-5244)
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스크 지급일수 : 18일 (연간 약40만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기청정기 신규보급 : 2,631대</li> <li>■ 마스크 지급일수 : 50일(101만개)</li> </ul>	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(‘20.3.)
			국방부 예비전력과 (02-748-5244)
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: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 124,250명</li> <li>■ 일용품 현금지급액: 연 68,976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: ‘20년 입대 병사 전체</li> <li>■ 캠프셔츠 신규 보급</li> <li>■ 일용품 현금지급액: 연 94,440원</li> </ul>	- (‘20.1.)
			국방부 물자관리과 (02-748-5726)

## 병무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려는 현역병입영 대상자, 사회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등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</li> <li>• 심사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 대체역 으로 편입되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복무</li> </ul>	대체역법 (‘20.1.1.)
			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(042-481-1932)
다음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·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해 '입영월' 본인선택</li> <li>• 본인선택 접수기간 : 3~11월</li> <li>• 입영일자(부대)를 12월에 확정, 의무자 안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해 '입영일자'를 직접 선택 (‘입영월’ 선택 폐지)</li> <li>• 본인선택 접수기간 : 7~11월 * 다음연도 군소요 접수: 6월 말</li> <li>• 입영일자 확정시기를 최대 5개월 단축 (12월→7월)</li> <li>• 입영부대는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으로 분류</li> </ul>	제도 개선
			병무청 현역입영과 (042-481-2716)
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 검사장 방문, 신체검사 실시 후 병역감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확진자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감면</li> <li>• 대상 질환 :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, 골수이형성증후군, 악성 림프종,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혈액암</li> </ul>	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(‘20.1월)
			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(042-481-2918)
AI(챗봇) 기반, 언제·어디서나 민원상담·신청 서비스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원상담소(09:00~18:00) 근무시간 민원상담 가능</li> <li>• 민원신청과 상담 별개의 절차로 진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순상담 24시간·365일 민원상담 가능</li> <li>•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으로 상담과 동시에 민원신청 가능</li> </ul>	제도 개선
			병무청 정보기획과 (042-481-2646)
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병역의무이행 온라인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</li> <li>• 보훈처에서 병적증명서 요청 시 병무청 방문하여 종이증명서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 신청 가능</li> <li>• 보훈처에서 병적증명 신청 동의 시 전자증명서 자동 전송</li> </ul>	제도 개선
			병무청 정보기획과 (042-481-2652)
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통비 : 116.14원/k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통비 : 131.82원/km</li> </ul>	병역의무자여비 지급 기준 (‘20.1.1.)
			병무청 자원관리과 (042-481-2915)

## 국가보훈처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	■ 전국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	■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(인천, 춘천, 창원 추가)	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(상반기)
			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(044-202-5737)
민원지원 서비스 강화	■ 정부24 즉시발급 민원 미존재	■ 정부24,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민원 신청 및 결과 확인  • 정부24 즉시발급민원 10종 • 처 자체 페이지 제공 온라인 발급민원 9종	'20.2.29.(예정)
			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(044-202-5238)
나만의 예우찾기 서비스	■ 홈페이지 자기정보조회 (현재 약 9종 조회가능) ■ 자격 변동 시 수혜내용의 변경사항 예측 불가	■ 보훈서비스 수혜사항 안내 (보훈수혜:46종, 타법지원:37종) ■ 자격 변동 시 수혜내용 예측(모의계산) 가능	'20.2.29.(예정)
			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 (044-202-5238)

## 04 행정·안전·질서

## 기획재정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유지에 지방자치 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	(신설)	■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■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생활SOC 전대 허용 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	국유재산법 (‘20.7월.잠정)
			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(044-215-5153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성범죄자의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	(신설)	■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■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, 해당장소는 1년간 농어촌민박 사업 금지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 >법령정보>최근제개정법령	농어촌정비법 (‘20.7월)(잠정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044-201-1590)
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	(신설)	■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소방·안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■ 소방·안전교육 2시간,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 통>법령정보>최근제개정법령	농어촌정비법 (‘19.12.31.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044-201-1590)
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	■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를 식물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	■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 병해충을 조사·연구한 연구자를 포함 ■ 연구자가 병해충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대상에 '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'를 추가 ■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☞ (참고)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>법령> 식물방역법	식물방역법 (‘20.3.11.)
			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(044-201-2074)
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	(신설)	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	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(‘20.8.21.)
			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(044-201-2261)



산업통상자원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어린이 놀이기구	■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 시 새로운 모델로 검사 ■ 사용가능한 목재를 EN350의 해외 목재로 규정	■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 시 유해물질 검사 면제 ■ EN350과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사용 가능	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(‘20.4.1.)
		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043-870-5574)
전동보드	(신설)	■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 ■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	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(‘20.2.14.)
		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043-870-5451)
휴대용 사다리	(신설)	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(스텝 스톨)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	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(‘20.6.1.)
		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043-870-5460)
건전지	(신설)	■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	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(‘20.11.14.)
		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(043-870-5458)

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‘키즈카페’ 환경안전관리 강화	(신설)	■ 어린이활동공간 (7개) 1. 좌동 2. 좌동 3. 좌동 4. 좌동 5. 좌동 6. 기타유원시설 경영 영업소 (붕붕뽀뽀 등 3종 설치 영업소) 7.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(완구) 제공 영업소 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1. 녹 및 크랙 금지 2. 중금속 농도 제한(납 600ppm 이하 등) 3. 실내공기질 농도 제한 (TVOC 400μg/m³ 이하 등) 4. 기생충란 발견출 * 환경안전관리기준 미준수시 지자체는 개선명령 시행, 개선명령 미이행시 벌칙 부과 ■ 확인검사 이행(신·증축, 수선시)	환경보건법시행령 (‘19.12월말)
		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(044-201-6754)

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	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•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: 1,000분의 3	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•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: 1,000분의 3→1,000분의 6 ※(참고)고용노동부)정책자료)대상자별 정책)장애인	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98)

## 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	■ 이주여성이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	■ 입국전후 교육참여(현지 사전교육,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),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상담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연계	다문화가족지원법 (‘20.1월)
			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(02-2100-6370)
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	■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	■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열람가능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‘20.상반기)
			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02-2100-6404)
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	■ 공공, 교육, 민간사업장, 문화예술 분야별 신고센터 개별운영	■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및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 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)보도자료> 성희롱·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	여성폭력방지기본법 (‘20.1월)
			법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 (02-2100-6164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	(신설)	■ (신고의무 기관확대) •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추가 ■ (취업제한 기관확대) • 국제학교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) 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) 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)  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)보도자료>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‘20.5.27.)
			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(02-2100-6408)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	■ 어선안전조업국 교신 미가입 : 영업정지 30일/ 45일/ 60일	■ 500만원 이하 과태료	어선안전조업법 (‘20.8.28.)
	■ 위치 통지를 하지 않거나, 거짓 통지 : 영업정지 30일/ 45일/ 60일	■ 500만원 이하 과태료	
	■ 위험 및 대파신호에 불응한 자 : 영업정지 경고/ 10일/ 15일	■ 500만원 이하 과태료	
	■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 출입항: 영업정지 경고/ 10일/ 15일	■ 300만원 이하 과태료	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(044-200-5527)
	■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 : 규정 없음	■ 300만원 이하 과태료	
	■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미청취 : 면허정지 견책/ 30일/ 45일	■ 300만원 이하 과태료	
	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: 규정 없음	■ 300만원 이하 과태료	
■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 : 영업정지 경고/ 10일/ 15일	■ 300만원 이하 과태료		
관공선,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 의무화	(신설)	■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선박을 신규 발주 시 친환경선박 (LNG추진선 등) 발주 의무화	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(‘20.1.1.)
		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)알림·뉴스) 뉴스)보도자료)관공선, 친환경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 (2019.10.28.)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6, 5838)
우수 선화주의 인증제도 시행	(신설)	■ 화주의 상생노력, 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	해운법 (‘20. 2월)
		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)정책바다) 법령정보)입법예고)“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19.11.18.)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(044-200-5720)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서민 여객선운임의 20%지원</li> <li>■ 도서민 소유의 5톤미만 화물차량 운임의 20%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단거리 생활구간(8,340원 미만) 운임 50%까지 지원 확대</li> <li>■ 도서민 소유 생활차량(5톤미만 화물차량) 운임 50%까지 지원확대</li> </ul> <p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알림·뉴스)뉴스)보도자료)섬마을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(2019.6.28.)</p>	<p>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(‘20. 1월)</p>
			<p>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(044-200-5733)</p>
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 발권 및 승선 시 매번 신분증 제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서민 운임지원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등록한 도서민은 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실물 대조를 통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승선권 발권 및 여객선 승선 (단, 도서민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분증을 소지하여함)</li> </ul> <p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알림·뉴스)뉴스)보도자료)도서민 여러분, 여객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. (2019.10.22.)</p>	<p>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(‘20. 1월)</p>
			<p>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(044-200-5733)</p>
어선에서 사용 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선에서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</li> <li>• 어선용 소화기</li> <li>• 육상용 소화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종류 다변화</li> </ul> <p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정책ба다)법령정보&gt;행정예고&gt;“총톤수 10톤 미만 소형기선 기준” 및 “어선설비 기준” 개정안 행정예고 (‘20.2.1. 잠정)</p>	<p>어선법 (‘20.2.1.)</p>
			<p>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(044-200-5523)</p>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</li> <li>■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</li> <li>■ 일정 규모의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</li> <li>■ 변경 허가과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</li> </ul>	<p>항만법 (‘20. 6월 예정)</p>
			<p>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(044-200-5965)</p>
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단일선저(홀겹 바닥)구조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중선저(두겹 바닥)구조 의무화</li> </ul> <p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알림·뉴스)뉴스)보도자료)단일선체 소형유조선,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(2019.2.13.)</p>	<p>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(‘20.1.1.)</p>
			<p>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4)</p>
연안여객선,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규정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(여객정원 2.5퍼센트 이상)</li> </ul> <p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알림·뉴스)뉴스)보도자료)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(2019.6.4.)</p>	<p>선박구명설비기준 (‘20.1.1.)</p>
			<p>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(‘20.1.1.)</p>
			<p>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8)</p>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비자가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)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여 만든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'나만의 제품'을 구매 가능</li> <li>■ 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) 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·소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자격 시험 시행</li> </ul>	<p>화장품법 제2조제3호 의2 및 제3조의2 등 (‘20.3.14.)</p>
			<p>화장품법 제3조의4 (‘20.3.14.)</p>
			<p>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정책과 (042-719-3403)</p>

## 조달청

구 분	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국제입찰 e발주시스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존 외자 국제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인쇄물 형태로 접수 및 평가함에 따른 입찰기업의 비용 및 시간 등의 부담이 발생함</li> <li>■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의 보관 및 관리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찰기업의 인쇄물 제본비용 및 방문에 따른 비용의 절감 효과 발생</li> <li>■ 외자 국제입찰의 제안서 접수부터 평가까지 e발주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입찰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임</li> </ul>	-
			<p>조달청 해외물자과 (042-724-7311)</p>

**경찰청**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어린이 보호구역 시설·장비 관리 강화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</li> <li>■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, 과속방지시설,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</li> </ul>	<b>도로교통법</b> (‘20.3월말)
			<b>경찰청</b> <b>교통안전과</b> (02-3150-2252)
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 전 처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</li> </ul>	<b>도로교통법</b> (‘19.12월말)
			<b>경찰청</b> <b>교통기획과</b> (02-3150-0597)

경찰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	(신설)	■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, 국내거소신고한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를 발급	<b>도로교통법</b> (‘19.12.24.)
			<b>경찰청 교통기획과</b> (02-3150-0597)
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	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경찰서에 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 청에서 취소처분 결정 후 우편 통지	■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장(경찰서)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	<b>도로교통법 시행규칙</b> (‘20.3.25.)
			<b>경찰청 교통기획과</b> (02-3150-0659)

## 소방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중·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층 이상 모든층</li> <li>- 600㎡ 이상 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</li> <li>- 지하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,000㎡ 이상인 층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</li> </ul> </li> <li>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00㎡ 미만 요양병원·정신의료기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00㎡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</li> </ul> </li> <li>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00㎡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* =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**</li> <li>**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</li> <li>**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률 시행령 (‘19.8.6.) * 소급 ‘22.8.31.까지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4-205-7447)
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종합정밀점검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천㎡ 이상 +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(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종합정밀점검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프링클러설비(면적 무관)</li> <li>- 5천㎡ 이상 + 물분무등소화설비 (아파트 포함)</li> </ul> </li> </ul>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률 시행규칙 (‘20.8.14.)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4-205-7447)

소방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자체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	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- 30일	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- 7일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‘20.8.14.)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2-205-7447)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	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-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	■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 -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‘20.1.1.)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2-205-7447)
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 위험평가 실시	■ 신종 업종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로 신고만으로 영업가능	■ 신종 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하고,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→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	법령개정시점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2-205-7452)
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(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)	■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	■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 인을 위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→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	2020.4.22.
			소방청 화재예방과 (042-205-7452)

특허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융·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	■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특허심사 진행	■ 융·복합 기술에 대해 3인의 심사관이 협의하여 심사 진행 •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·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 • 심사관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 일관성 제고  ☞ (참고) 특허청홈페이지> 보도자료>특허 청, 융·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 심사 실시	- (‘19.11.1.)
			특허청 인공지능· 빅데이터심사과 (042-481-5800)
온라인 전송 SW 보호	없음	■ SW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실시 에 포함 • 방법발명인 경우: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■ 특허권의 효력 제한 •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침  ☞ (참고) 특허청홈페이지> 보도자료> SW 온라인 전송 특허로 보호된다 (계재예정)	특허법 (‘20.3.11.)
			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(042-481-5736)
특허·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	■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정해진 항목을 기재해야 함	■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 명세서 제출 형식을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도록 함 • 명세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출원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• 전자출원시 PDF, 한글파일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	특허법 시행규칙 (‘20.2월(잠정))
			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(042-481-5399)
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신청료 감면	(신설)	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 출원에 대해 2024년까지 우선심사 신청을 할 경우 연간 10건까지 우선심사신청료 70% 감면	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(‘20.상반기)
			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(042-481-5716)

## 국민권익위원회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「공공재정환수법」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하면 전액환수,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, 명단공표 대상</li> <li>■ 부정청구등 신고 시, 신분보장 및 보상금·포상금 수령 가능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&gt;법령&gt;공공재정환수법</p>	공공재정환수법 (*20.1.1.)
			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(044-200-7613)
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·기한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상) 모든 외부강의등</li> <li>■ (기한) 외부강의등 실시 전 ※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상)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</li> <li>■ (기한)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민권익위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&gt; 2019년 11월1일 보도자료</p>	청탁금지법 (*20.5.27.)
			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(044-200-7704)

## 문화체육관광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선으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	■ 창작준비금 지원자 수 : 5,500명 ■ 소득 심의 대상 부양의무자 :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 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 ■ 제출서류 : (필수)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확 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(해당자에 한해)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 상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, 병적증명서, 육아휴직 확인서, 통장사본	■ 창작준비금 지원자 수 : 12,000명 ■ 소득 심의 대상 부양의무자: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■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 ☞ (참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) 사업안내>창작준비금 지원	예술인 복지법 (`20.1.1.)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(044-203-2718, 2722)
	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(2급) 연계 취득 절차 신설	■ 타 스포츠지도사(2급 생활, 노인, 유소년)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(2급) 취득 시 필기 (필수 특수체육론, 선택과목 4과목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 (90시간)를 거쳐야 함	■ 필기시험 및 연수 간소화 ■ 필기(필수 특수체육론) → 실기·구술 → 연수(40시간)로 간소화
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	■ 1인당 연 8만 원 지원	■ 1인당 연 9만 원으로 지원금 1만 원 인상  ☞ (참고)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(www.mnuri.kr)	문화예술진흥법 (`20.2.1.)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(044-203-2519)
	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	■ 최소 지원기간 7개월  ☞ (참고)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(svoucher.kspo.or.kr)	-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(044-203-3136, 3137)

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국립공원 탐방인프라/ 프로그램 확충	(확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피소 판매물품)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</li> <li>■ (무장애 탐방인프라) 무장애 탐방로 누적 기준, '19년 42개소 39.3km → '20년 47개소 45.3km, 무장애 야영지 누적기준, '19년 104동 → '20년 123동</li> <li>■ (스탬프 투어) '20. 하반기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 연계한 스탬프 투어 신설</li> </ul>	-
			환경부 자연공원과 (044-201-7326)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리나업의 등록, 변경, 양도, 양수, 합병 시 수수료 납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수료 납부 폐지</li> <li>☞ (참고) 국회입법예고 시스템&gt;종료된 입법예고&gt;"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" 개정안 입법예고 (2018.12.26, 의안번호 2017625)</li> </ul>	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(20.1월 중)
선박·계류시설 사용 (등록)기간 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리나업 등록 시 사용권 등 확보 필요</li> <li>• 마리나선박 : 3년 이상 사용권 확보</li> <li>• 계류시설 :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 확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점에서 선박·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등록 가능</li> <li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&gt;정책바다&gt;법령정보&gt;입법예고&gt;"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령" 개정안 입법예고(2019.11.1.)</li> </ul>	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(044-200-5275)
			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.1월 중)
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승선신고서 작성의무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자의 마리나선박 승선신고서 작성, 제출 및 보관 의무화</li> <li>☞ (참고) 국회입법예고 시스템&gt;종료된 입법예고&gt;"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" 개정안 입법예고 (2018.12.26, 의안번호 2017625)</li> </ul>	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(044-200-5275)
			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.7월 중)

## 문화재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시·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</li> <li>■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</li> <li>■ 시·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</li> </ul>	문화재보호법 (19.12.25.)
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	관련 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음</li> </ul>	문화재보호법 (20.5.27.)
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 완화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격요건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문화재매매업 영위 가능</li> <li>-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매매업 자격요건 충족</li> </ul> </li> <li>-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</li> </ul>	문화재보호법 (19.5.27.)
	(변경)		문화재청 안전기준과 (042-481-4923)
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개관</li> <li>•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·정보·디지털 콘텐츠 공유를 위한 거점공간 운영</li> </ul>	해당없음
			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(042-481-3144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	■ 기존 9개의 직불제 운영 • 쌀고정, 쌀변동, 밭농업, 조건불리, 친환경농업, 경관보전, 경영이양, FTA 피해보전, FTA 폐업지원	■ 기존 6개의 직불제(쌀고정, 쌀변동, 밭농업, 조건불리, 친환경농업, 경관보전)를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• 쌀직불, 밭고정, 조건불리직불을 '기본형 공익직불제'로 통합 – 소규모농가 대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운영 •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'선택형 공익직불제'로 개편 –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 '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' 개정 보도자료	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( '20.5.1.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044-201-1772)
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	■ 62개 품목	■ 쌀, 살구, 시금치, 보리, 호두 5개 품목 추가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	농어업 재해보험법 ( '20. 2월)
			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044-201-1728)
	■ 모든 농가 보험료 50% 국고 지원	■ 영세농가 70%, 일반농가 50% 보험료 국고지원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	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( '20. 2월)
			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(044-201-1792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조건 개선	■ 정책자금 지원조건 • 최대 3억원, 금리 2%, 3년 거치 7년 상환	■ 정책자금 지원조건 • 최대 3억원, 금리 2%, 5년 거치 10년 상환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	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지침 ( '20.1.1.)
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(일부 제외) 으로 확대	■ 지원대상 •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농업계 대학 3~4학년 재학생	■ 지원대상 • 졸업후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농업계 및 비농업계 대학 3~4학년 재학생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	농식품 취창업 의무장 학금 사업시행지침 ( '20.1학기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(044-201-1578)
축산물이력제도,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	■ 축산물 이력제 적용품목 : 소·돼지  • (신설)  ■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등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범위 : 수입산 소·돼지	■ 닭·오리, 계란 등 가금산물까지 축산물 이력제 적용 확대  ■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 (소, 돼지, 닭, 오리) 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가 부여  ■ 국내산 소, 돼지, 닭, 오리, 계란 등으로 공개 범위 확대 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축산물이력법(법률 제16114호)	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( '20.1.1.)
			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044-201-2346)
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	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65세	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70세로 변경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국민소통>법령정보> 최근제개정법령	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( '20.7월, 잠정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(044-201-1518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	■ 위대한 빈집 정비를 위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비명령 및 작권 철거 가능	■ 정비명령 전 사전 조치로 「공익신고 → 빈집조사 → 행정지도, 철차 신설」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국민소통>법령정보> 최근제개정법령	농어촌정비법 (‘20.8월, 잠정)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044-201-1558)
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	■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 •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■ 선금(중도금 포함) 융자·대출금 상환액 • 3,000만원	■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 •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■ 선금(중도금 포함) 융자·대출금 상환액 • 4,000만원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	2020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시행지침 (‘20.1월)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044-201-1559)
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	(신설)	■ 등록정보의 유효기간(3년) 도입 - 최초 및 변경등록 후 3년동안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 말소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0년 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 (‘20.7.1.잠정)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(044-201-1410)
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	(신설)	■ 사업시행자는 정책자금 지원시 농업인 신청정보와 경영체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• 중앙행정기관장이 융자·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• 불일치하는 경우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20년 법개정안 의결보도자료	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 (‘20.7.1.잠정)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(044-201-1410)
친환경축산물 인증, 유기축산물로 단일화	■ 친환경축산물 :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	■ 친환경축산물 : 유기축산물 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축산법 개정 보도자료	축산법 (‘20.8월, 잠정)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(044-201-2352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제도 도입	■ 일시납	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납부 • (잠정안)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에 걸쳐 분할납부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초지법 개정 보도자료	초지법 (‘20.6.11.)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(044-201-2352)
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 실시	(신설)	■ ‘고령친화식품 표준’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(‘19.12)하여, ■ 2020년부터 ‘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제’ 본격 실시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0년 제도시행 보도 자료(예정)	(‘20.상반기)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(044-201-2121)
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 제도 도입	(신설)	■ 현행 집유장 책임수 의사 검사에 의한 원유 잔류물질검사에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정책홍보> 정책분야별 자료 >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.(농식품부·식약처 공동 고시) 제정 알림	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(‘20.7.1.)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(044-201-2978)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043-719-3245)
김치의 날 제정	(신설)	■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 * ‘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(11월)가 모여 22가지(22일)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.’는 의미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(예정)	김치산업 진흥법 (2020년 하반기, 잠정)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(044-201-2132)
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연구개발 지원	(신설)	■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 신규 중점 지원 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공자·공고>관련 사업 공고	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공고 (‘20.1~2.)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

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
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분야 연구 개발 지원	(신설)	■ 국내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및 부품의 국산화 신규 중점 지원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(‘20.1~2.)						
		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 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	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						
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지원	(신설)	■ 농식품부 특화 현장 수요 및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특수대학원 설립 등 인력 양성 중점 지원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(‘19.12.19.~‘20.1.17.)						
		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 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	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						
농업·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&D 지원	(신설)	■ 농업·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민·관 협업을 통한 국민 참여형 R&D 신규 추진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(‘20.1~2월)						
		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 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	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						
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	(신설)	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지원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공고 (‘20.1~2.)						
		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) 공지·공고>관련 사업 공고	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						
친환경인증 사업자의 “친환경농업 기본교육” 이수 의무화	■ 친환경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•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·가공 및 취급계획서 • 경영 관련 자료 •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• 생산, 제조·가공,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	■ 제출서류 추가 •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증명자료 (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)	농림축산식품부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(‘20.1.1.)						
		<table><tr><td>과정명</td><td>친환경농업 기본교육</td></tr><tr><td>교육주기</td><td>2년에 1회</td></tr><tr><td>교육시간</td><td>가)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)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</td></tr><tr><td>교육기관</td><td>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</td></tr></table> ☞ 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) > 보도자료 >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도입 보도자료 (‘19.6.28.)		과정명	친환경농업 기본교육	교육주기	2년에 1회	교육시간	가)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)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
과정명	친환경농업 기본교육								
교육주기	2년에 1회								
교육시간	가)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나)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								
교육기관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								

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수산직불금 인상	■ 직불금 단가: 연 65만원/어가	■ 직불금 단가: 연 70만원/어가	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(‘15.4.)
		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044-200-5463)
해양공간에서의 이용·개발 계획에 대한 적합성협의 필요	신규	■ 해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(~’21) 및 해양 용도구역(9종) 설정  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)보도자료 >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	해양공간계획법 (‘19.4.18.)
		■ 「해양공간계획법」 시행령 별표에 따른 48개 계획 및 지구·구역 등 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시 • 해양관광단지·항만·어항·여장 및 해양에너지 • 해양공간에서의 광물, 골재 등의 채취, 산업단지·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 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)보도자료 >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·지침 제정	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(044-200-5261)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계란 냉장차량 지원 (차량 구입비) 사업	(신설)	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대상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	-
			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043-719-3259)
국민이 체감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	(신설)	■ 수입김치의 유통 중 보관온도의 준수여부, 보관창고의 위생 등 유통관리 실태 조사를 하여 위생·취약 부분을 개선	수입식품법 (‘20.1월~12월)
		■ 유통관리 실태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함으로써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(043-719-6259)
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 제도 도입	(신설)	■ 현행 집유장 책임수의사 검사에 의한 원유 잔류물질검사에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추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	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(‘20.하반기)
		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정책홍보> 정책분야별 자료>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.(농식품부·식약처 공동 고시) 제정 알림	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(043-719-3245)
			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(044-201-2978)

## 산림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목재교육전문가 제도	(신설)	■ 목재 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	목재이용법 (‘20.1.9.)
			산림청 목재산업과 (042-481-8875)
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		■ 사무실 구비 ※ 사무실을 별도 정의하지 않는 경우 「건축법」에 사무용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음 [법제처 법령해석례 10-0447]	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‘19.7.9.)
		■ 전문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• 1천만원~3천만원	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044-481-1841)
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	(신설)	■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	산림보호법 (‘20.6.4.)
		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	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(042-481-4076)
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		■ 인력기준 •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를 배치	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(‘19.7.9.)
		■ 인력기준 완화 •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 가능	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(044-481-1841)
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	(신설)	■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위한 판정표 및 해제절차 마련	산림보호법 (‘20.초)
		■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개정 시 신설	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4)
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·실태조사 판정표 개선		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일원화	산림보호법 (‘20.초)
		■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■ 「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·관리 지침」개정 시 반영	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042-481-8844)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종이·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7·18·19년도 업종 (발전·증기·폐기물처리·철강·비철·유기화학·석유정제·무기화학·정밀화학·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)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년도 적용 업종 (펄프, 종이 및 판지 제조업,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 제조업) 시행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&gt;법령&gt;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1]</p>	<p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7~21년까지 단계적 시행)</p> <p>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(044-201-6717)</p>
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보도자료 ('19.11.6)	
관리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별 지자체별, 개별 오염원별 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권역중심의 광역적·체계적 관리</li> <li>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(5년 주기)</li> <li>● 권역내 시·도별 시행계획 수립</li> <li>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구성·운영 (중앙·지방, 민간)</li> </ul>	<p>대기관리권역법 ('20.4.3.)</p> <p>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(044-201-7584)</p>
배출시설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장 배출허용기준관리 (농도 관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대한 총량관리제 추가 시행</li> <li>● 5년마다 연도별로 사업장별배출허용총량 할당</li> <li>● 권역 내 배출권 거래 가능</li> <li>● 5년 할당 기간 내 최적방지사설 설치 및 TMS 부착 의무</li> <li>● 기본부과금 면제, 농도기준완화(3종만) 등 특례</li> </ul>	<p>대기관리권역법 ('20.4.3.)</p> <p>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(044-201-7582)</p>
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</li> <li>■ 경유자동차에 저공해조치명령 가능(조례)</li> <li>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명령가능 (조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특정경유자동차(5등급 경유차량) 배출가스 관리 강화</li> <li>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 및 종합검사 의무화</li> <li>● 기준 초과차량 저공해조치 의무</li> <li>● 상시 운행제한 가능(조례)</li> <li>● 통학차량, 택배차량의 경유차사용 금지 ('23.4월 시행)</li> <li>■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</li> <li>●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는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·경유차만 사용</li> </ul>	<p>대기관리권역법 ('20.4.3.)</p> <p>환경부 교통환경과 (044-201-6928, 6933)</p>
기타 배출원 관리	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항만·선박 저감대책 수립</li> <li>■ 공항 대기개선헌획 수립</li> <li>■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명령 가능(조례)</li> <li>■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 및 공급·판매 의무화</li> </ul>	<p>대기관리권역법 ('20.4.3.)</p> <p>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(044-201-6926, 6903)</p>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 시설 수질기준 항목</li> <li>●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</li> <li>■ 폐수 배출시설 부차 대상 수질자동측정기기</li> <li>●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수질 자동측정기기</li> <li>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 처리업자 보유 측정기기</li> <li>●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측정기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수질 기준 항목</li> <li>● 총유기탄소량(TOC)</li> <li>■ 폐수 배출시설 부차 대상 수질자동측정기기</li> <li>● 총유기탄소량(TOC) 수질자동측정기기</li> <li>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보유 측정기기</li> <li>● 총유기탄소량(TOC) 측정기기</li> </ul> <p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</p>	<p>물환경보전법 ('20.1.1.)</p> <p>환경부 수질관리과 (044-201-7067)</p>
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혈액·배설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△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나오는 기저귀, △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</li> <li>●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냉장차량으로 운반,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</li> <li>●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간 계약기간('19.10.29 이전 계약에 한함)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가능</li> </ul>	<p>폐기물관리법 ('19.10.29.)</p> <p>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044-201-7367)</p>
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강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차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</li> <li>●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, 야생 동물-사람-가축간 상호작용하는 주요질 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확립 등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&gt;법령&gt;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p>	-
			<p>환경부 생물자원기관건립 추진단 (044-201-7259)</p>

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·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정의·원칙)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(공급·조절·문화·지지서비스)</li> <li>■ (평가)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자산 및 생태계서비스를 평가</li> <li>■ (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) 주요 보호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생태계서비스 보전·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</li> </ul>	생물다양성법 ('20.6월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	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(044-201-7222)
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상) 건축물·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</li> <li>■ (방식)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선정,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등 저감사업 진행 예정</li> </ul>	-
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	환경부 생물다양성과 (044-201-7251)
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경표지 인증제품, 우수재활용 제품(GR인증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 명시(온실가스 감축 기여 추가)</li> <li>•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</li> </ul>	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('20. 하반기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	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(044-201-6711)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년 3월(3.16~3.31) 일시납부시 10% 감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월 : 1.16~1.31 (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)</li> <li>- 3월 : 3.16~3.31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개선비용 부담법 ('20.1.16.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환경개선비용 부담법	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(044-201-6714)
행정·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 전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도권지역</li> <li>■ 의무구매 임차비율 7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국 시행</li> <li>■ 의무구매·임차 비율('20년 100%)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('20.1.1.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대기환경보전법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(044-201-6890)
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('20.4.3.)
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 개정 의결	환경부 대기관리과 (044-201-6903)
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	(강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배출허용기준 30% 이상 강화</li> <li>■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</li> <li>■ 123만 8,000kCal/hr 이상 흡수식 냉난방 기기 등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'20.1.1.)
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	환경부 대기관리과 (044-201-6906)
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	(강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</li> </ul>	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('20.1.1.)
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	환경부 대기관리과 (044-201-6906)

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	■ 조기폐차시 보조금 전액(100%) 지급	■ 조기폐차 시 70%(1단계) 보조금을 지급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%(2단계)를 추가 지급	대기환경보전법 (‘20.1.1.)
		☞ (참고) '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	환경부 교통환경과 (044-201-6933)
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행점검 평가	(신설)	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의 범부처 이행점검 및 평가	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(‘19.10.22.)
		☞ (참고) 환경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	환경부 기후전략과 (044-201-6647)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	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- 농기계 구입, 농기구 수리시설·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	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- 농기계 구입 및 유지관리, 농기구 수리 시설·생산품 공동저장소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 -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 추가	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(‘20.1.1.)
			환경부 물이용기획과 (044-201-7116)
지하수개발·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개선	① 보유·대여한 시설·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·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입차 사무실·창고 등의 보증금	① 보유·대여한 시설·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·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입차 사무실·창고 등의 보증금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	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(‘19.11.12.)
			환경부 토양지하수와 (044-201-7180)
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	(신설)	■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·수입자 성능검사 의무 ■ 성능검사 판정 후 5년마다 갱신 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 제공 ■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, 거짓·부정하게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에 벌칙부과	물환경보전법 (‘20.10.17.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 물환경보전법	환경부 수생태보전과 (044-201-7049)

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	(신설)	■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 •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,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	가축분뇨법 (‘20.3.25.)
		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	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044-201-7010)
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제도	(신설)	■ R&D·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‘혁신형 물기업’으로 지정하고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 ■ 유망 중소 물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,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	물산업진흥법 (‘20.1월)
			환경부 물산업협력과 (044-201-7632)
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	■ 연단위로 고정(일 최대사용량 x365일)된 사전 하천수 허가량에 대해 사용료 부과	■ 실제 하천수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하천수 사용량을 달리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	하천법시행령 (‘20.1월 이후)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(환경부 고시) (‘19.12월) (‘20.1월, 잠정)
			환경부 수자원관리과 (044-201-7652)
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	■ 차량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(PM10, 이산화탄소) ■ 차량 내 공기질 측정 권고 (2년에 1회)	■ 차량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정·강화 (PM10→PM2.5 관리 전환 및 농도기준 강화) ■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(1년에 1회) 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‘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’ 보도자료	실내공기질 관리법 (‘20.4.3.)
			환경부 생활환경과 (044-201-6798)

## 환경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관리대상 잔류성오염 물질 확대	■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26종의 취급(제조, 수출입, 사용)을 관리	<b>■ 미나마타협약의 신규 가입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약에서 제조/수출입을 금지하는 수은첨가제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금지</li> <li>수은 수출 시 환경부 장관의 수출승인</li> </ul> <b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미나마타협약</b>	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(‘20.2.20.)
		<b>■ 스톡홀름협약에서 2종의 화학물질을 신규 등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도 수용(비준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잔류성물질법에 따라 제조, 수출입,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에 협약 신규물질 추가 (상업용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, 단쇄염화파라핀)</li> </ul> <b>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스톡홀름협약</b>	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(044-201-6782)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	■ 황 함유량 0.05 ~ 3.5%	<b>■ 황 함유량 0.5%이하 (국내용 경우는 기존과 동일, 0.05%)</b> <b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&gt;알림·뉴스&gt;뉴스&gt;보도자료&gt;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(2019.6.25.)</b>	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(‘20.1.1.)
		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4)
5대 대형 항만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	■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.5%(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.5%)	<b>■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.1%</b> <b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&gt;정책바다&gt;법령정보&gt;행정예고&gt;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” 제정안 행정예고 (2019.8.28.)</b>	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(‘20.9.1.)
		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4)
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	(신규)	<b>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제작시기 및 엔진출력 기준으로 마련</b> <b>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&gt;정책바다&gt;법령정보&gt;입법예고&gt;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 제정안 재입법예고(2019.11.19.)</b>	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(‘20.1.1.)
		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(044-200-5289)

##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위험에 노출</li> <li>■ 운영체제 교체 및 업그레이드 권장</li> </ul> <p>☞ (참고) 보로나라 홈페이지 (www.boho.or.kr)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</p>	(‘20.1.14.)
		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(044-202-6461)
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·양수, 합병 가능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대한 양도·합병 절차 기준을 신설</li> </ul> <p>☞ (참고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무안내&gt;법령정보&gt;훈령·예규·고시 &gt;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</p>	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(‘19.8.9.)
		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(044-202-6451)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 연구개발 지원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신규 지원</li> </ul> <p>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·공고&gt;관련 사업 공고</p>	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공고 (‘20.1~2.)
			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(044-201-2458)

## 중소벤처기업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미래기술육성· 고성장촉진자금 신설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미래기술육성·고성장촉진자금 신설</li> </ul> <p>☞ (참고)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&gt;법령정보&gt;공고&gt;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(‘20.1.1.)</p>	‘20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(‘20.1.1.)
		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(042-481-4382)

## 중소벤처기업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벤처투자촉진법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벤처투자조합 제도 통합</li> <li>■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</li> <li>■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총 운용자산(자본금+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) 기준으로 조정</li> <li>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</li> </ul>	<b>벤처투자 촉진법</b> (‘20. 6월)
			<b>중소벤처기업부</b> 벤처투자과 (042-481-1643)
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은 39세이하의 청년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</li> </ul>	<b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b> (‘20. 1월)
			<b>중소벤처기업부</b> 창업촉진과 (042-481-1688)
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·운영(신규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소기업부부는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 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</li> </ul>	<b>중소기업창업지원법</b> (‘20. 2월)
			<b>중소벤처기업부</b> 창업촉진과 (042-481-4523)

## 산업통상자원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신규사업을 통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특례 제품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지원</li> <li>■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의 성능·안전성 개선 지원</li> </ul>	<b>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인증 기술개발사업</b> (‘20. 1월)
			<b>산업통상자원부</b> 인증산업진흥과 (043-870-5502)
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·공유재산 등 사용특례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재산 : 임대·매각 수익계약, 장기임대 가능 (최대 50년)</li> <li>■ 국가·지자체 재산 : 임대료 산정 및 감면</li> </ul>	<b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</b> (‘20.3.11.)
			<b>산업통상자원부</b> 해외투자과 (044-203-4094)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사신청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사신청 기간 변경</li> <li>• 1년 이내 → 2년 이내</li> <li>※ (참고) 무역위원회 홈페이지&gt;정보·자료&gt;무역구제법령</li> </ul>	<b>불공정무역조사법</b> (‘20.6.10.)
			<b>산업통상자원부</b>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(044-203-5881)
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에 대한 벌칙수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</li> <li>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벌칙 수준 변경</li> <li>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*「대외무역법」상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</li> <li>※ (참고) 무역위원회 홈페이지&gt;정보·자료&gt;무역구제법령</li> </ul>	<b>불공정무역조사법</b> (‘20.7.1.)
			<b>산업통상자원부</b>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(044-203-5881)

산업통상자원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	■ 냉열이용 시 발생하는 천연가스는 자가소비만 가능	■ LNG냉열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	도시가스사업법 (‘20.3.10.)
		■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사업자와 자회사 등에 제한적으로 처분 가능	
		■ 가스공사는 제한적 처분을 위한 냉열이용자에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	
		☞ (참고)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업무마당> 최근개정법령	
			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(044-203-5237)
신규사업을 통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	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 특례 제품의 인증기준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 부재	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·실증특례 제품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지원	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인증기술 개발사업 (‘20년. 1월)
		■ 개발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융합신제품의 성능·안전성 개선 지원	
			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(043-870-5502)

조달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혁신조달플랫폼 구축	■ 기존 종합쇼핑몰은 상용품·규격화된 제품위주로 거래되어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·거래에 어려움 존재	■ 조달청이 단가계약하는 기존 소품몰형태가 아닌 열린장터(Open Market) 형태의 혁신제품 전용몰을 구축	-
		● 혁신조달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자유롭게 등록·판매할 수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	
	■ 정부기관이 필요로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부재 → 정부기관과 업체 모두 수요탐색, 제품탐색에 상당한 기간 소요	■ 정부기관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향상된 제품·솔루션을 쉽게 비교검색하여 구매가능	
	■ 종합쇼핑몰, 벤처나라, 나라장터 등 개별적인 시스템을 각각 검색하여 정보획득	■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정부부처의 한 단계 높은 수요제시 → 제시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은 제품·솔루션을 개발 → 특허 거래전문가 등 전문가pool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으로 정보비대칭 해소하여 수요와 공급간 신속한 매칭 지원	
		■ 인공지능(AI) 기반의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종합쇼핑몰, 벤처나라, 나라장터에 존재하는 제품정보, 업체정보, 입찰공고 내용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크게 제고	조달청 혁신조달과 (042-724-7347)

방위사업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	■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별도 실시  (신설)	■ 실태조사, 보안감사 통합 실시	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 등 (‘20.2.)
		■ 통합실태조사 결과 제언서 반영	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(02-2079-6983)
방산원가 구조 개선	■ 실 발생비용 보상	■ 표준원가 개념 도입	「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」 등 (‘20.1.1.)
		■ 복잡한 이윤구조(13개)  -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윤 구조 개선	
	■ 선검증·후적용의 원가업무 방식	■ 선적용·후검증의 「성실성 추정 원칙」 도입	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(02-2079-6932)



## 방위사업청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방산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정위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작성/배포</li> <li>■ 하도급계약 형태별(확정/정산)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사용 지침에 포함</li> </ul>	<p>신설 (‘20.1.1.)</p>
		<p>☞ (참고)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&gt; 방산정보&gt;업무서식</p>	<p>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(02-2079-6958)</p> <p>한국방위산업진흥회 (02-3270-6033)</p>
집행정지 기간 중 적격 심사 감점 방안 마련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불공정행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의 행위 이력에 대한 감점 신설</li> <li>■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무효 또는 취소 확정 전이라면 평가에 반영</li> </ul>	<p>국가계약법 (‘19.11.28.)</p>
			<p>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(02-2079-6927)</p>
민간분야 국방 참여 확대 및 국내 기술협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TRA 조사 대상 : 국방과학연구소, 방산업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TRA 조사 대상 : 기존 대상외에 일반 정부출연연구소로 확대</li> </ul>	<p>기술성숙도평가(TRA) 업무지침 (‘19.12.24.)</p>
		<p>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&gt;보도자료&gt; 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</p>	<p>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기획총괄팀 (055-751-5409, 5418)</p>

## 공정거래위원회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납품시기 지연 시 하도급대금 증액 또는 조정신청 가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이 증액 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 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	<p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‘20.5. 예정.)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등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	<p>☞ (참고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&gt; 보도자료&gt; 하도급법개정안 보도참고자료(19.10.31.)</p>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			<p>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4)</p>

## 농림축산식품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	(신설)	<p>■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(연간 48만원 상당) 공급</p> <p>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&gt;정책홍보&gt;친환경농업육성</p>	친환경농어업법 (‘20.1.1.)
			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044-201-2432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여성생식기, 흉부(유방)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	■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, 그 외는 비급여	<p>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</p>	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(‘20년 상반기)
			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(044-202-2667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	<p>① (신설)</p> <p>② 아들·미혼의 딸30% / 결혼한 딸 15% 부양비 부과율 적용</p> <p>③ 24세~65세↑·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</p> <p>④ 기본재산공제액(대도시) 5400만원(중소도시) 3400만원(농어촌) 2900만원</p> <p>⑤ 주거용재산한도액(대도시) 1억원(중소도시) 6800만원(농어촌) 3800만원</p>	<p>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</p> <p>② 남·녀 동일하게 10% 부양비 부과율 적용</p> <p>③ 25~64세에 근로소득공제 30% 신규 적용</p> <p>④ 기본재산공제액(대도시) 6900만원 (중소도시) 4200만원(농어촌) 3500만원</p> <p>⑤ 주거용재산한도액(대도시) 1억2000만원 (중소도시) 9000만원(농어촌) 5200만원</p> <p>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&gt;알림&gt;보도자료&gt;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% 공제 실시! 보도자료</p>	국민기초 생활보장법 (‘20.1.1.)
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	<p>■ 소득하위 20%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* 소득하위 20~70% 어르신 : 월 최대 25.3만원 지급</p>	<p>■ 소득하위 40%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* 소득하위 40%~70% 어르신 : 월 최대 25.5만원(예상) 지급</p> <p>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&gt;알림마당&gt;보도자료(12월말 예정)</p>	기초연금법 (‘20. 잠정, 국회 법사위 계류중)
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원	<p>■ (‘19.4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→ (‘21)전체 수급자</p>	<p>■ (‘19.4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→ (‘20.) 주거·교육·차상위계층 수급자 → (‘21.) 전체 수급자</p>	장애인연금법 (‘20. 잠정, 국회 법사위 계류중)
			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(044-202-3321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지지원등급 받기 전까지만 센터 이용</li> <li>■ 센터 이용시간 1일 3시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지지원등급자도 센터 이용 가능</li> <li>■ 센터 이용시간 1일 최대 7시간</li> </ul>	치매관리법 (‘18.12.13.)
		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044-202-3532)
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 병동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립요양병원 5개소 치매전문병동 추가 설치</li> </ul>	치매관리법 (‘18.12.13.)
		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044-202-3537)
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후견심판절차비용, 중앙지원단 운영비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후견활동비, 후견인 양성교육, 광역지원단 운영비 신규 지원</li> </ul>	치매관리법 (‘18.9.20.)
		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044-202-3531)
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</li> <li>• 시설·장비 지원 : 994억</li> <li>• 우수인력 파견 : 50명</li> <li>■ 지역내 의료복지 연계</li> <li>•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지원 : 국립대병원 10개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 확대</li> <li>• 시설·장비 지원 : 1,097억</li> <li>• 우수인력 파견 : 55명</li> <li>■ 지역내 의료복지 연계 확대</li> <li>• 퇴원환자 의료복지 연계 지원 : 국립대병원 12개소, 지방의료원 15개소</li> </ul> <p>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)보도자료 ‘꼭 필요한 병원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(지역의료 강화대책)’ 보도자료</p>	(‘20.1.1.)
			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(044-202-2533)
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왕진 서비스 제공</li> </ul> <p>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)보도자료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</p>	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(‘19.6.12.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45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자리수: 64만개</li> <li>• 공익활동 참여기간 : 9개월</li> <li>•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: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자리수: 74만개</li> <li>• 공익활동 참여기간 : 최대 12개월 (10~12개월)</li> <li>• 사회서비스형 참여기준: 만65세이상</li> </ul>	(‘20.1.1.)
		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(044-202-3477)
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실시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자 : 제1형 당뇨 환자</li> <li>■ 급여기기 : 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</li> <li>■ 급여액 : 기기별 기준금액 및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%</li> </ul> <p>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)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도자료</p>	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(‘20.1.1.)
			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044-202-2731)
응급실 보안인력 배치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(청원경찰, 경비원 등) 24시간 상주 배치</li> </ul>	응급의료법 (‘20.7.1.)
		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(044-202-2557)
응급실 보안장비 배치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응급실 시설 기준에 CCTV 등 보안장비 추가</li> </ul>	응급의료법 (‘20.7.1.)
			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(044-202-2557)
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활사업 자립성과금 지원</li> <li>• 월 최대 2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활사업 자립성과금 지원</li> <li>• 월 최대 70만원</li> </ul>	국민기초생활 보장법 (‘20.1.1.)
		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(044-202-3073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주간활동) 성인 발달장애인 1,500명 대상으로 월 8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</li> <li>■ (방과후활동) 청소년 발달장애인 4,000명 대상으로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(바우처) 제공 ※바우처 단가 12,960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주간활동) 바우처 대상자 4,000명으로 확대</li> <li>■ (방과후활동) 바우처 대상자 7,000명으로 확대 ※ 바우처 단가 12,960원 →13,350원으로 인상</li> </ul>	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'20.1.1.)
	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알림마당>보도자료>"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"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	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"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"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044-202-3349)
사업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별사업 간 중복지원이 금지되어, 해당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·개편하여 서비스내용을 다양화함</li> <li>•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, 가사지원, 병원동행,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</li> <li>•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</li> </ul>	노인복지법 ('20.1.1.)
		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"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됩니다" 보도자료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60)
은둔형,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'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추진 중 * ('14년) 60개소, 3,605명 → ('17년) 80개소, 3,853명 → ('19년) 115개소, 6,900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수행기관 확대</li> <li>• 115개소 → 164개소</li> </ul>	노인복지법 ('20.1.1.)
		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2019년 "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 됩니다" 보도자료	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044-202-3460)

## 보건복지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을 통한 결핵 조기 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부지역(전남, 충남) 노인결핵 검진 시범사업 실시</li> <li>■ 결핵안심벨트 7개소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의료급여 수급권자·재가 외상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</li> <li>■ 결핵안심벨트 10개소 지원</li> </ul>	결핵예방법 ('19.6.12.)
			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(043-719-7312)
결핵관리전담요원 확대 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PPM의료기관)258명</li> <li>■ (보건소)259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PPM의료기관)297명(+39)</li> <li>■ (보건소)668명(+409)</li> </ul>	결핵예방법 ('19.6.12.)
			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(043-719-7325)
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6개국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5개국으로 변경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콜레라: 예멘, 필리핀 등 19개국</li> <li>- AI:중국 4개 성·시</li> <li>- 메르스: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아랍에미리트, 쿠웨이트 등 10개국</li> <li>- 폴리오: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 등 9개국</li> <li>- 황열: 아프리카, 중남미 42개국(동일)</li> <li>- 페스트: 마다가스카르, 콩고민주공화국</li> <li>- 에볼라바이러스병: 콩고민주공화국 ※ 감염병별 중복국가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검역법 ('20.1.1.)
		☞(참고)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>감염병>해외질병 >검역감염병 발생지역	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(043-719-9207)
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</li> </ul>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20.1.1.)
		☞(참고)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>알림·자료>보도자료 발표 예정	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(043-719-7128)
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지원</li> </ul>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('20.1.1.)
		☞(참고)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>알림·자료>보도자료 발표 예정	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043-719-8350)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												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	■ 주 최대 52시간제 • 300인 이상 적용  ■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• 신설	■ 주 최대 52시간제 • 50인 이상 적용  ■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(단, 일요일 제외) • 300인 이상 적용('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)  ※(참고)고용노동부>정책자료>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	근로기준법 ('20.1.1.)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(044-202-7545, 7972)												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	■ (지원대상)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■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(13)만원(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) *(5인 미만) 월 15만원(5~30인 미만) 월 13만원 지원	■ (지원대상)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■ (지원수준)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(9)만원(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) *(5인 미만) 월 11만원(5~30인 미만) 월 9만원 지원  ※(참고)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 (지원대상·요건 등)	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('20.1.1.)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(044-202-7783)												
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실업자</th><th>재직자</th></tr><tr><td>신청방법</td><td>방문</td><td>온라인</td></tr><tr><td>훈련비</td><td colspan="2">1~3년간 200~300만원</td></tr><tr><td>자부담률</td><td>약 30%</td><td>0~40%</td></tr></table>	구 분	실업자	재직자	신청방법	방문	온라인	훈련비	1~3년간 200~300만원		자부담률	약 30%	0~40%	■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,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에서 신청  ■ 5년간 200~300만원 훈련비지원  ■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로 개편  ※(참고) 고용노동부>보도자료>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	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('20.1.1.)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(044-202-7313, 7322)
	구 분	실업자	재직자												
신청방법	방문	온라인													
훈련비	1~3년간 200~300만원														
자부담률	약 30%	0~40%													
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	(신설)	■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 ※(참고) 고용노동부>보도자료>고용정책 기본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	고령자고용법 시행령 ('20.5.1.)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044-202-7418)												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의 보호대상 확대</li> <li>• 근로자 → 노무를 제공하는 자</li> <li>•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</li> <li>■ 대표이사, 건설공사 발주자,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 (단, 대표이사 책임은 '21.1.1 시행)</li> <li>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</li> </ul>	<p>산업안전보건법 ('20.1.16.)</p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급인의 책임범위</li> <li>•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</li> <li>■ 도급인의 처벌</li> <li>•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도급인의 책임범위</li> <li>•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·지정한 경우로서 지배·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</li> <li>■ 도급인의 의무</li> <li>•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</li> <li>■ 도급인의 처벌</li> <li>•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•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와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죄의 판결(선고유예 제외)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병과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·제한</li> <li>●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물질 제조·사용 작업은 인가시 사내도급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유해·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·제한</li> <li>●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 작업, 허가대상 물질 제조·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 일시·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 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</li> </ul> </li> <li>● 중량비율 1% 이상 황산·불화수소·질산·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설업 안전 강화</li> <li>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: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설업 안전 강화</li> <li>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: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</li> <li>●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: 타워크레인 등 기계·기구·설비 등이 설치, 작동 또는 설치·해체·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</li> <li>●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자</li> <li>● 함유량 등 비공개 :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(사업주 자체판단) 되는 경우 비공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(단, '21.1.16 시행)</li> <li>● 작성·제출자 :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자</li> <li>● 함유량 등 비공개 :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</li> </ul> <p>※(참고) 고용노동부)보도자료)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보도자료</p>	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	■ 현행 : 1,048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변경: 1,078,000원</li> <li>※(참고) 고용노동부)정책자료)대상자별 정책)장애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담기초액 고시 ('20.1.1.)</li> </ul>
		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98)
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성패 II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</li> <li>■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</li> <li>※(참고) 고용노동부)정책자료) 고용창출장려금(고용촉진장려금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창출장려금·고용 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('20.1.1.)</li> </ul>
		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044-202-7213)
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</li> <li>※(참고) 고용노동부)보도자료)사업 관련 보도자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보험법 시행령 ('20.1.1.)</li> </ul>
			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044-202-7465)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	■ 현행: 분기당 27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변경: 분기당 30만원</li> <li>※(참고) 고용노동부)정책자료) 대상자별 정책)중장년 참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노동부 고시 ('20.1.1.)</li> </ul>
			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044-202-7465)

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저소득 노동자('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) *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</li> <li>■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평일)</li> <li>■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(평일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(평일/주말/연휴/성수기)</li> <li>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(평일/주말/연휴/성수기)</li> <li>■ 산재보험 특례적용자(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) 평일 이용</li> <li>■ 부서장, 팀장,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전목 및 휴양목적 확대(평일)</li> </ul>	근로복지기본법 (‘20.3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근로복지서비스&gt;뉴스/공지사항</li> </ul>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(044-202-7561)
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	(미적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</li> </ul>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(‘20.1.1.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98)
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급단가: 월 30~60만원 - 경증남성 30, 경증여성 40, 중증남성 50, 중증여성 60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급단가: 월 30~80만원 - 경증남성 30, 경증여성 45, 중증남성 60, 중증여성 80</li> </ul>	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8)
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단가 • 시간당 8,350원 *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(9,980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단가 • 시간당 8,350원 → 시간당 8,590원 *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(10,270원)</li> </ul>	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 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3)

## 고용노동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현장훈련기간 • 최대 7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현장훈련기간 • 최대 7주 → 최대 6개월</li> </ul>	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3)
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증장애인 + 장년경증 포함지원</li> </ul>	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3)
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대상 9,600명</li> <li>■ 기본운영비 1인 2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대상 10,000명</li> <li>■ 기본운영비 1인 48만원</li> <li>■ 참여자 수당 1인당 1일 3천원</li> </ul>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(참고) 고용노동부&gt;정책자료&gt;대상자별 정책&gt;장애인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3)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규모 : 8,000명</li> </ul>	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 (고용노동부 고시) (‘20.1.1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원규모 : 9,000명 * 1유형 8,000명, 2유형 1,000명</li> <li>■ 저소득층 지원 유형(2유형) * 저소득층 특화 취업준비 위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(최대 90만원)</li> </ul>	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83)

## 여성가족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 : 여성새로일하기센터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</li> <li>■ 우대 : 여성가장창업자금 할당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창업보육실 가점 부여</li> </ul> <p>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&gt;뉴스·소식&gt;보도·설명&gt;보도자료&gt;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</p>	<p>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(‘20.1.1.)</p>
			<p>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(02-2100-6208)</p>
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년주도로 성평등 관점의 정책 제안과 문화혁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</li> <li>• 중앙 → 지역으로 확산</li> </ul>	<p>양성평등기본법 (‘20.3.1.)</p>
			<p>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(02-2100-6147)</p>

## 10 국토·교통

## 국토교통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건축물관리법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기점검 시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• 점검기관지정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기관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시점검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이 우려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기점검 시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 후 5년 내 최초, 3년마다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• 점검기관지정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장이 점검기관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• 긴급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이 우려되는 모든 건축물</li> </ul> </li> </ul>	<p>건축물관리법 (‘20.5.1.)</p>
			<p>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(044-201-4750)</p>
건축물 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고,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등</li> </ul>	<p>건축물관리법 (‘20.5.1.)</p>
			<p>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(044-201-4989)</p>
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면적 1천㎡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도입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&gt;정책자료&gt;입법예고&gt;녹색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</p>	<p>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(‘20.1.1.)</p>
			<p>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044-201-4094)</p>
부동산 실거래신고 기간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거래신고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</li> </ul>	<p>부동산 거래신고법 (‘20.2.21.)</p>
			<p>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(044-201-3402)</p>
해제신고의무화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고 된 사항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 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</li> </ul> <p>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&gt;보도자료 (2019.8.2.)</p>	

## 국토교통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국립항공박물관 개관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위치)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(김포공항 내)</li> <li>■ (일정) 2020년 5월경</li> <li>☞ (참고) <a href="http://www.hanggong.or.kr">www.hanggong.or.kr</a></li> </ul>	(‘20.5월경)
			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(02-2064-8215)
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 시제도 시범 시행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(‘20.5~)</li> <li>■ 사업자별 안전투자 및 지출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</li> </ul>	항공안전법 (‘20.5, 시범운영)
		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(044-201-4245)

## 해양수산부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모바일 승선권 확대	■ 여객선 이용객이 사전에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 예매 후 현장발권 창구를 방문 하여 신분증 제시 후 승선권 수령	■ 여객선 이용객이 모바일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를 예매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별도의 발권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승선권 제시 후 여객선 승선	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(‘20.2.1.)
		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(044-200-5733)



